

2013 시민교육 심포지엄

# 한국 시민교육의 이론과 현실

2013. 10. 24. 목 | 출판문화회관 4층

# 심포지엄 순서

## 개 회 ————— 13:30~14:00

- 사회 이난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국장)  
 인사말 유영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도정일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장)  
 권미혁 ((사)시민 이사장)

## 제1부 시민교육의 이론적 자원 ————— 14:00~15:30

- 사회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발표1 시민교육의 인문학적 자원 : 그 철학적 토대 우기동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발표2 사회과학의 대안적 교육형태로서 시민교육 / 윤종희 윤종희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토론1 장은주 (경기도교육원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2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제2부 시민교육의 환경과 현실 : 시민교육 생태계 모색 ————— 15:50~18:00

- 사회 박영선 ((사)시민 이사)  
 기조발제 시민교육의 과거를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한다 한승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발표1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시민교육 광봉재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발표2 중등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 김영삼 (서울성동교육지원청 장학사)  
 발표3 시민단체에서의 시민교육, 나로부터의 변화, 지역을 바꾸는 시민 운동 소개 : 한국YMCA전국연맹 사례를 중심으로 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사업국장)  
 발표4 풀뿌리운동에서의 시민교육 이 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상임연구위원)  
 발표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이난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국장)  
 발표6 지자체의 시민교육 :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란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소장)  
 발표7 한국시민교육의 이론과 현실을 위한 서울시민대학 사례 발표 한희창 (서울시청 평생교육과 시민대학운영팀장)

# 자료집 목차

## 제1부 시민교육의 이론적 자원

발표1	시민교육의 인문학적 자원 : 그 철학적 토대 / 우기동	006
발표2	사회과학의 대안적 교육형태로서 시민교육 / 윤종희	024
토론1	장은주	036
토론2	신진욱	038

## 제2부 시민교육의 환경과 현실 : 시민교육 생태계 모색

기조발제	시민교육의 과거를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한다 / 한승희	042
발표1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시민교육 / 광봉재	058
발표2	중등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 / 김영삼	078
발표3	시민단체에서의 시민교육, 나로부터의 변화, 지역을 바꾸는 시민 운동 소개 : 한국YMCA전국연맹 사례를 중심으로 / 이필구	084
발표4	풀뿌리운동에서의 시민교육 / 이 호	092
발표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 이난현	098
발표6	지자체의 시민교육 :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김미란	106
발표7	한국시민교육의 이론과 현실을 위한 서울시민대학 사례 발표 / 한희창	114

## 심포지엄 주최 기관 소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 사단법인 시민	118
--	-----

# 제1부

---

## 시민교육의 이론적 자원

# 시민교육의 인문학적 자원 : 그 철학적 토대<sup>1</sup>

우기동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1. 들어가면서

청소년 자살이 심각하다. 매일 1명꼴이란다. 대부분 성적과 학교생활의 비판이 원인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너무 조용하다. 내 자식이 자살했다면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자녀가 하루에 한 명씩 죽어간다. 매일 TV의 머리 뉴스여야 하고, 신문 1면 머리 기사여야 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교육 문제에 관해 하루도 조용해서는 안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결국 '경쟁'이 원인인데, 경쟁을 철칙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에서는 모두 남의 일로 받아들인다. 이 기회에 교육과 만남(사회적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자.

1990년대 중반쯤에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었다. 소리꾼들의 삶을 통해 우리 시대의 변화를 그린 작은 역사의 이야기였다. 소리의 특색에 따라 서편제와 동편제로 나누어지는데, 서편제는 애절함을 동편제는 무거움을 좀 더 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어렵풋이나마 새겨져 있었던 소리의 경지에 관한 대사가 떠오른다. '한(恨)에 사무쳐서 한 풀이를 하고, 그리고 그 한을 넘어서면 서편제도 없고 동편제도 없다. 한에 묻혔다가 묻히지 말고 한을 실었다가 한을 넘어서면, 득음(得音)의 경지만 있다.' 어려운 듯 하면서도 참으로 삶의 지혜가 있는 듯 하기도 하다.

우리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의도와 목적에 갇힌 만남은 이해관계에 따른 약효가 떨어지면 지속될 수 없다. 지속되더라도 형식적 만남에 그친다.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의도와 목적을 넘어서는 인간적인 만남이나 만남의 순수성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적 상품 사회에서, 더구나 온통 돈이 지배하는 사회 풍토에서, 오로지 경쟁만 있는 사회에서 '인간'의 진정한 만남은 드물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 의도와 목적과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만남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에 사무쳐서 출발했지만 한을 넘어서면 득음의 경지만 있는 것처럼, 의도와 목적과 이해관계로 만났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인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만남의 지점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인간사 온갖 희로애락이 분출되기에,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다투면서 서로 나누는 보통사람들의 삶의 정(情)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정신적, 물질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가치도 본래의 빛과

<sup>1</sup> 이 글은 「대학 시민교육, 그 철학적 토대」라는 제목으로 『시대와 철학』(제 24권 3호)에 실린 논문이다. 내용의 일부를 첨가하고 삭제했다.

향기를 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너무 다르다.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여러 환경도 다르고, 통상의 사회적 지위도 다르다. 그런데 다름은 만남이요, 만남은 인정함이다. 인정함은 배려요, 배려는 나눔이다. 그리고 나눔은 함께함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다름은 우리 모두 함께함이다. 경쟁 상대인 어느 집 누구의 아들, 딸들의 자살이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식이 매일 자살하고 있다. 우리 자식을 경쟁 속에서 자살시킬 수 없다. 우리의 삶도 만남도 그래서 교육도 다름의 함께함이다.

인간다운 만남, 인간다운 사회적 관계는 품격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품위 있는 사회다. 이런 품위 있는 사회는 민주사회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덕목과 합리성의 수준을 체득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양교육'이다. 경쟁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리 교육의 여러 부작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교양교육을 회복하고 실질화해야 한다. 교양교육은 어떤 측면에서 민주사회의 시민적 덕목을 갖추고 유지하는 '평생교육'이기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교양교육은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 교육을 새롭게 고민하게 하는 인간교육이고 인재교육이기도 하다. 또한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철학과 목표는 청소년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양교육의 중심축에 <시민교육>이 있다. '시민'으로서의 '나'는 가족, 이웃, 지역, 국가, 세계라는 모둠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은 '시민'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민주사회를 발전시킬 역량을 가진 합리적 비판적 민주시민, 둘째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 선의, 공감, 배려, 봉사, 유대의 덕목을 가진 따뜻한 이웃, 셋째 한 나라의 시민임과 동시에 지구사회를 생각하는 '세계 시민'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교육> 목표의 근거에는 스스로 문제를 찾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문제해결의 상상력과 능력'을 키우는 일이 깔려 있다. '나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나의 대안은 무엇인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등등.

이 글은 교양교육의 의미와 목표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목표를 검토한 후, 시민교육을 통해 성찰적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경험을 확장하는 과정과 방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양교육 사례를 첨가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대학 교양교육의 의미와 목표

### 1) 교양교육의 의미 - 교양과 교양인

흔히 교양이란 '교육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교양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훌륭한 삶'이라 말할 수 있다. 희랍철학(소크라테스, 플라톤)에서도 교양인은 인간의 '훌륭함(aretē, 아레테)'을 실현하는 삶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교양은 우리 인간의 '일생동안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매슈 아널드(Matthew Arnold),

1822-1888)의 말마따나 교양은 '완성을 향한 공부'이며, '자기완성을 향한 인류의 충동'이다.<sup>2</sup>

그런데 희랍철학에서 홀륭함(아레테)은 앎(epistēmē, 에피스테메)이다. 그리고 앎은 존재의 올바름(본질)에 대한 앎이다.<sup>3</sup> 따라서 홀륭한 삶은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교양이 지적 능력을 갖추는 데에서 출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으로서 홀륭함은 사람의 올바름(사람됨)에 대한 앎과 동시에 사람 구실을 할 줄 아는 앎에서 비롯되고, 그래서 홀륭한 삶은 앎이 곧 실천과 합일할 때에만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사람의 홀륭함은 앎과 실천이 분리되지 않는다. 홀륭한 삶은 지적 능력이 바로 '윤리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고, 동시에 윤리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의 성숙을 통해 지적 능력 또한 성숙해야 한다. 교양이 지적 능력과 더불어 윤리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의 성숙을 의미하는 이유이다.

교양교육을 실질화하고 강화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바로 이러한 철학적 사상적 역사적 토대에 기반하고 있다. 교양인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sup>7</sup>

후마니타스(Humanitas)는 일반적으로 '인간' 또는 '인류'를 의미하는 말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 용어를 만든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문명을 만드는 인간'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 후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은 키케로의 생각과 유사한 '이상적 인간'을 말하기 위해 이 용어를 부활시킨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지구사회 전체의 문명과 문화를 포괄하는 현대적 문맥에서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의미로 그 용어를 재정의하여 사용한다.

첫째, 자신의 지적 윤리적 심미적 상수를 부단히 시도하는 인간

둘째,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고 타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능력을 키우는 인간

셋째, 인류사회와 연대하고 문화세계를 추구하며 정의와 결속하는 인간

넷째, 문명을 만들고 문명을 성찰하면서 지구문명의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인간

후마니타스의 이런 의미들은 '교양인'이라는 말 속에 집약될 수 있다. 교양인(a cultivated human being)은 문명의 제도인 '교육'을 문화적 의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사람이다. 문화는 무엇보다 문명을 성찰하는 힘이며, 이 힘이 '교양'의 핵심이다. 이 의미에서 교양이란 '교육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이다. 교양인으로서의 후마니타스는 그러므로 '문명을 만들고 문명에 참여하면서 지구사회의 문명을 성찰하는 인간, 자신의 성장을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지구적 실천인'이라는 뜻을 가진다.

2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인간의 가치탐색』, 경희대 출판문화원, 2012, 704쪽 참조.

3 박종현, 『헬라스 사상의 심층』, 서광사, 2001, 72-77쪽 참조.

4 <지적 능력>: "사회적 삶에서 마주하게 될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교육』(자료집), 2011, 18쪽 참조)

5 <윤리적 능력>: "지식과 실천을 연결하는 능력,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능력"(앞의 책, 18쪽 참조)

6 <사회적 능력>: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심리적 현실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세계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을 여러 각도에서 볼 줄 아는 능력, 개인들 혹은 집단들 사이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통, 연대, 협력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능력"(앞의 책, 18쪽 참조)

7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2011), 앞의 책, 서문(후마니타스 Humanitas : A Redefinition) 참조.

## 2) 교양교육의 목표

존재세계(자연, 사회)의 올바름을 이해하면서 교양을 갖추고 교양인으로서 홀륭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삶이며 사회적으로는 합리성과 진보를 촉진하는 공동체적 역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양교육의 일반적 목표를 '폭넓은 일련의 정신적 기량과 습관을 계발하고 향상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의 협력과정'이라 하고, 지적 윤리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지평을 확장하면서 '개인적 만족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삶'이라 말한다.<sup>8</sup>

그래서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는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와 궁극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sup>9</sup>

### ①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 :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의 양성

'아이가 어른 되는' 그 성숙의 조건들은 거대한 모험이고 도전이다.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는 그때까지 의존해왔던 부모, 학교, 선생님의 긴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립된 '정신의 삶'(life of the mind)을 시작해야 한다. 대학에서 그는 자기가 누구이고 타인은 누구이며 그가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자신의 삶을 이끌 가치, 이상, 목적은 어떤 것일 수 있는지를 탐색해야 한다. 대학 입학과 함께 그는 자신을 책임지고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질 준비를 해야 한다.

정신이 의존 상태를 벗어나 독립의 단계로 이동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의식한다는 것은 성숙의 조건들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다수의 신입생들이 그 도전을 감당하지 못해 혼란, 방황, 도피에 빠진다. 이러한 혼란과 방황이 장기화되면 4년간의 대학생활은 큰 타격을 받고 헛되이 공전한다. 학부생이 대학의 도전에 잘 대응하고 즐겁게 응전하면서 자신을 변모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끌고 지원하는 것,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의 양성이라는 대학교육의 본질 목적을 교양교육의 차원에서 실현해나가는 것, 이것이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이다.

### ② 교양교육의 궁극 목표 :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자기 생애를 이끌어 나갈 내적 견고성 함양

학부생의 성숙을 돕는 일이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라면, 교양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한 인간이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의미 있고 행복한 방식으로 자신의 한 생애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할 내적 견고성의 바탕을 길러주는 데 있다. 삶이 안길 수 있는 온갖 어려움과 영욕의 순간에도 한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고 의미와 가치를 공급해주는 것이 내적 견고성이라는 바탕이다. 이 바탕이 '교양'(culture)이다.

이 의미의 교양은 한두 해의 교양과정 학점을 따는 것으로 달성되지 않고 대학 졸업장이나 무슨 자격증 같은 것으로 획득되지 않는다. 교양은 대학 졸업을 위한 한시적 절차도 수단도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교육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이다. 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가치, 교육의 최종 효과가 교양이다. 그

8 Colby, Anne 외, Educating Citizens, Jossey-Bass, San Francisco, 2003. 23-26쪽 참조.

9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2011), 앞의 책, 6-7쪽 참조.

교양은 단순 지식이 아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이 다 잊히고 다른 지식들로 대체되어도 여전히 내게 남아 나를 지탱하는 강한 힘, 대학에서 들은 강의의 내용들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성공과 영광의 순간들이 다 지나갔을 때에도 여전히 내 몸에 남아 나를 지키는 무형의 자산, 그것이 교양이다. 세월이 바뀌고 삶의 외적 조건들이 바뀌어도 이 자산은 줄어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더 성숙한 인간, 더 나은 인간, 더 유용한 인간을 최종적으로 정의해주는 것은 이런 의미의 교양이다. 예컨대 의사와 변호사와 경영인, 전문가와 정책입안자가 이런 교양의 인간일 때 그들은 분명 더 나은 의사이고 변호사일 것이며 더 나은 경영인, 전문가, 정책입안자일 것이다. 대학 교양교육은 그 궁극적 목표로서의 교양, 교육의 정점으로서의 교양을 망각할 수 없다.

### 3. 대학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목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학의 교양교육이 '개인적인 만족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교양인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러한 교양인이 민주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길러 주는 것이 '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다. 시민교육은 교양교육의 중요한 한 축인 셈이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사회에서 주체적 역량을 갖춘 '시민' 되기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교양인의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공공체적 삶을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 1) 민주사회와 시민교육

권력이 미디어와 결합하여 사건과 여론을 조작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뉴스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이라면, 빈부의 격차와 양극화는 심화되고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욱 살기 좋아하는 세상을 목도하는 현실이라면, 경제적 물질의 가치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불확실한 미래의 희망으로 선동하는 정치를 일상으로 마주하는 현실이라면, 오로지 경쟁을 통해 소수의 승리자만을 위한 정책이 난무하는 현실이라면, 이러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 평등, 정의가 실종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더구나 이러한 현실을 시민이 망각하고 있다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다.

민주주의가 위협에 빠지는 것은 크게 보아 세 가지 경우이다. 첫째, 국가 권력의 오용과 남용이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적 사회 운영의 원칙을 파괴할 때, 둘째, 시민성 또는 시민정신(citizenship)의 약화나 포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파수꾼이 실종되었을 때, 그리고 셋째, 공적 사적 기관들을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시되고 짓밟히고 무너져 내릴 때이다...(중략)...

민주사회는 어느 때 무너지는가? 사회는 언제 망하는가에 대한 다이아몬드의 진단에서처럼 민주사회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시민이 인식하지 못할 때, 위기를 인식하고도 대처하지 않을 때, 틀린 방식으로 위기

에 대처할 때, 그리고 대처할 시간을 놓쳤을 때 여지없이 무너진다...(중략)... 몰랐다면 '무지의 죄'이고, 알면서도 손쓰지 않았다면 '무능의 죄'이거나 '나태의 죄'이다. 지금 한국 교육에서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민주적 역량을 발휘할 줄 아는 시민의 양성'이 교육의 핵심 목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인식한 적이 없고, 그것을 교육목표의 하나로 천명하는 일도 없다는 것이다. '시민교육'이나 '시민학(Civics)'을 대학 교양교육의 기초과목 혹은 필수과목에 넣어 가르치는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한 곳도 없다. 놀라운 일이다. 물론 시민은 공교육을 통해서만 길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고등 교육 과정에서 시민을 길러내는 일은 민주사회에서 생략할 수 없는 교육과제이다...(중략)...

시민교육은 현실적 적절성을 가져야 하고, 구체적인 문제와 이슈 중심이어야 하며, 생활세계에 밀착된 것이어야 한다. 권력과 권위, 자유와 책임, 사회정의, 분배, 프라이버시, 인권, 생명존중과 인간 품위, 환경, 평등, 공존, 공동체, 세계시민, 윤리 같은 시민교육의 주요 내용들은 현실 속에서는 그 어느 것도 추상이 아니다.<sup>10</sup>

이렇듯 시민이 '참여의 권리와 책임'을 통해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지키는 파수꾼이 될 때, 그 사회는 시민의 품격이 살아있는 민주사회라 할 수 있다.<sup>11</sup> 이러한 민주주의의 '참여의 권리와 책임'이 바로 시민적 존엄성의 근거이기도 하다.

#### 2) 대학 시민교육의 필요성

대학의 교양교육이 청년들로 하여금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자신생애의 내적 견고성을 확립하고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따뜻한 공동체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면, 민주사회에서 주체적 역량을 갖춘 성숙한 시민되기의 교육 또한 대학의 교육적·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루소의 말처럼 청년은 '생활'을 위해 두 번째 탄생한다. 이 '제2의 탄생'을 통해 청년은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주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정치적 주체는 민주사회에서 시민적 덕목을 갖춘 '시민'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고, 사회적 주체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따뜻한 이웃, 즉 '공동체 성원'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대학의 시민교육은 청년들이 '시민'으로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적·윤리적·사회적 능력과 역량을 길러주는 교양교육이며, 그러한 능력과 역

10 도정일,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 후마니타스, 2010, 15-22쪽.

11 덴마크의 국민대학(folk high school)운동을 주도했던 그룬트비히는 "만일 국민들이 무지하여 정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선거에 관한 권한과 의무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선거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시민교육을 제일 중요한 교과목으로 선정하였다. 교육의 기회가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지고, 그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적 자질이 일정한 계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가능하다고 보고, 학교의 제도 교육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룬트비히의 국민대학운동은 마을마다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 시민들의 학습력을 키웠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력을 갖추게 하였다. 이러한 시민교육의 힘이 오늘날 북유럽의 대표적인 민주적 복지국가 덴마크를 건설하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교육 현장 지침서」(자료집), 2010 참조).

량을 갖추어 '제2의 탄생'을 하도록 돕는 산과교육이다.<sup>12</sup>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명하고 실현하고 지키는 건설자이며 운영자이고 파수꾼이다. 그래서 성숙한 시민은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어떤 제도, 어떤 기구, 어떤 조직을 만들 것인가?', '어떤 실천적 활동(운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한다. 그래서 시민은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책임'도 떠맡아야 한다. 대학에서의 시민교육은 이러한 성숙한 시민이 탄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문화적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 ① 시민적 덕목

대학에서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교육과정은 시민적 덕목(혹은 덕성, civic virtue)에서 출발해야 한다.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표적인 시민의 덕목은 '자율성'과 '책임'이다.

자율(autonomy)은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다. '주체적 사고와 판단'은 인간의 이성(logos)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율성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에 기반한다. 이렇게 볼 때 자율성은 '사회적 삶에서 마주하게 될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즉 지적 능력과 성숙성을 요청한다. 교양인으로서 훌륭한 삶이 올바른 삶에 대한 삶에서 비롯된다는 철학적 언명은, 성숙한 시민의 첫 번째 덕목이 당연히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성임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책임(responsibility)은 '-의 결과' 대한 책임이다. 우리는 사회적 삶에서 마주하는 온갖 종류의 문제나 일(사건, 사태, 현안 등)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행동'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 때 우리는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한다. '선택'과 '행동'은 나의 '자유'다.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삶 속에서 나의 '선택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는 어떤 결과를 낳는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선택과 행동의 자유를 누린 나의 책임이다. 자유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한 자율적 주체는 곧 책임의 주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선택과 행동의 자유는 '지식과 실천을 연결하는 능력,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능력', 즉 윤리적 능력과 성숙성, 그리고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심리적 현실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세계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을 여러 각도에서 볼 줄 아는 능력, 개인들 혹은 집단들 사이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통, 연대, 협력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능력', 즉 사회적 능력과 성숙성을 요청한다. 동시에 윤리적 사회적 능력과 성숙 정도는 책임감의 무게와 사명으로 나타난다. 교양인으로서 훌륭한 삶이 올바른 삶에 대한 삶과 실천의 합일을 통해 실현된다는 의미는, 성숙한 시민의 두 번째 덕목이 당연히 선택과 행동의 자유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임을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게 한다.

### ② 공동체적 삶

대학의 시민교육은 왜 사회적 주체로서 시민의 공동체적 삶의 문제를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는 왜 '공동체'에 관

12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제2의 탄생』, 경희대 출판문화원, 2012. '책 머리에' 참조.

해 고민해야 하는가? 사회적 관계는 '나(인간, 개인)'라는 존재의 '삶의 관계'이며, 사회는 '나(인간, 개인)'라는 존재의 '생활의 세계'이다. 나와 사회의 관계는 곧 '나인 우리, 우리인 나'라는 공동체적 의식의 토대요, 공동체적 삶의 기초다. 그렇기에 나와 사회는 통일적으로 연관·구성되어 있으며, 그래서 통일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소통에 의한 자유로운 인간들의 합리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인간의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명제로 표현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언어적 동물(소통)이고, 또 언어를 매개로 이해관계와 갈등을 풀어나가는 정치적 동물(공감)이며, 이러한 소통과 정치를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공존)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삶의 관계나 생활의 영역과 연관해서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명공동체(민족), 인류공동체, 교육공동체, 경제공동체(일자리), 생활공동체, 문화공동체 등으로 구별되기도 하고, 가족공동체, 학교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지구촌 공동체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적 관계의 상대적 단위인 공동체는 우리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고 생활공간이다. 이러한 삶의 현장과 생활공간에서 형성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의식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 모두 따뜻한 이웃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식'의 표현이다.

그런데 공동체적 삶의 현장은 즐거움과 희망을 나누면서도 또 좌초하고 분노하며 환멸을 느끼면서 욕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개인들의 열정에 가득찬 행위들이 있는 삶의 모습판이다. 그래서 갈등과 대립이 있다. 보통 우리는 삶의 목표를 행복이라 말한다. 행복한 삶은 훌륭한 삶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삶은 사회적 관계, 즉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류는 역사적으로 개인들이 행복한 더 좋은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고,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개인과 사회의 합리적인 관계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자유, 평등, 정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명하였고,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사회를 만들고자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 왔다. 그렇지만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구조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대립과 갈등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분명 오늘날 자본주의는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물질적 풍요와 생활상의 편리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었다. 반면에 전쟁, 불평등, 경쟁에 의한 승자독식,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생태계 파괴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요인들이 우리의 공동체적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는 인간의 탐욕(이해관계)이 깔려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은 사회구조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월가를 점령하라', '분노하라' 등 시민의 저항운동이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려는 노력들이다. 바로 여기에 대학의 교양교육, 특히 시민교육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더욱 건강하고 합리적인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적 윤리적 사회적 능력을 갖춘 사회적 주체로서의 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 ③ '나인 우리, 우리인 나'의 공동체 - 그 철학적·역사적 기반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부자되기의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진단한다면,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사회의 관계, 인간과 일(노동)의 관계 등등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사

회적 소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소외된 삶에서는 공동체적 나눔의 생활 문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로지 물질을 향한 고립된 개인들간의 이진투구식 투쟁만 있을 뿐이다. 함께 일하면서 서로 나누는 일의 터전이어야 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어우러지는 삶의 터전이어야 할 나눔의 공동체가 사라지고 없다. 일 하지 않고 벌어서 부자 되고자 하는 투기의식과 사회의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는 건전한 노동의식이 있을 리 만무하다. 우리의 삶은 일을 중심으로 짜여진 생활의 그물망 가운데에서 회로애락을 겪으면서 어우러지는 하나의 모둠판이다. 그런데 사회적 소외 현상은 일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관계가 인간존중과 이해심은 없고 전반적으로 소원한 상태로 있음을 의미한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 중심에 노동소외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노동은 한편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이기도 하다. 노동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연물의 취득 과정이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의 보편적 조건이며, 인간 생활의 영위한 자연스런 필요조건이다. 말하자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노동하는 가운데 맺어지는 생활이다. 인간 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 형태에 다같이 공통된 것이다. 그 속에 갈등하고 대립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물질적 정신적 가치가 모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적 관계가 경제 논리에 의해 완벽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현실은 노동에 의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물질적인 형태로 완전히 환원시키고 소외시켜 버렸다. 인간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의식이 없다. 이런 사회적 소외현상을 극복하는 길은 역사적으로 공동체적 나눔의 문화에서 찾고 있다. 공동체적 나눔의 문화를 새로이 창출하기 위해, 노동, 인간관계, 공동체 의식에 관해 근대의 철학자들은 꽤 많은 고민을 했다.

헤겔은 노동을 본격적으로 탐구한 철학자다. 그래서 헤겔 철학을 통해 노동의 의미, 노동과 인간 소외, 노동과 자유로운 삶, 공동체적 의식 등에 관해 이해할 수 있다. 헤겔은 최초로 노동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노동을 바탕으로 근대의 시대 정신을 형상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sup>13</sup> 헤겔은 인정투쟁을 통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노동이야말로 내세의 모든 허구적 관념을 거부하고, 참으로 현실 세계를 형성하는 원천임을 보여 주고 있다. 노동은 자연과 인간을 매개하는 중심으로서,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계기로서 자유를 실현하는 철학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여기서 헤겔은 '노동하는 의식'(노예의식)을 인간의 보편적 의식으로 승화시켜 '나인 우리, 우리인 나'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헤겔의 노동관에 내재해 있는 노동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명확하게 구별하였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헤겔은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노동, 역사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 보여지는 노동의 부정적 측면을 통찰하지 못했다. 바로 노동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하여 소외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sup>14</sup> 근대 상품사회는 새롭게 창출된 값싼 노동력과 자본가에게 사적으로 소유된 생산 수단이라는 대립적 요소에 기초하여 성립하였다. 자본주의적 관계에서 임노동자에 의해 창출된 가치는 자본가에게 사적으로 전유된다. 이리하여 노동이란 인간의 본질과 능력을 대상에 발현시킨다라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노동은 소외된 노동이 된다.

노동은 무조건적으로 항상 긍정적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노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끝없는 굴종과 오

욕으로 점철된 강제 노동이 되어, 자기의 능력을 실현하고 확산하기보다는 자기를 상실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똑같은 노동이 누구에게는 그의 비참한 삶의 조건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참한 삶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노동은 물질적 삶을 생산하면서 인간의 역사를 형성하는 본질적인 동력이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노동이 노동하는 자의 자기상실과 자기부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부정적 노동의 산물은 노동하는 자에게 소원한 위력으로 다가오며, 동시에 현재의 부정적인 노동, 노동 산물, 노동 조건을 재생산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외된 노동으로 인한 인간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헤겔이 밝힌 노동의 긍정적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 노동이 인간 본질의 실현과정이 되려면 무엇보다 우선 노동의 주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노동 과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타인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면, 노동의 인간적 의미는 애당초 실현될 수 없다. 또한 노동의 창조성도 회복되어야 한다. 무미건조한 추상적 노동은 노동자의 본질을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없다. 창조적인 노동이야말로 노동자의 인간적 본질과 능력을 대상화하고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노동 과정이야말로 바로 인간의 자유를 진정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다. 노동 과정이 인간의 자유로운 삶의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사회 구성원의 일터)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가 합리적으로 짜여져야 한다. 말하자면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노동이 보장되는 일터를 구성해야 한다. 노동하는 의식을 인간의 보편적 의식으로 승화시켜 '나인 우리, 우리인 나'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논의한 헤겔의 사상이나 이를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 조건, 환경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마르크스의 사상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3) 대학 시민교육의 목표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의 시민교육은 첫째, 민주사회를 발전시킬 역량을 가진 합리적 비판적 민주시민, 둘째,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 선의, 공감, 배려, 봉사, 유대의 덕목을 가진 따뜻한 이웃, 셋째, 한 나라의 시민임과 동시에 지구사회를 생각하는 '세계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체적 삶의 현장에서는 갈등과 대립이 있다. 갈등과 대립이 있다는 것은 서로의 생각과 의견에 차이가 있음이요, 생각과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삶의 가치를 똑같이 인정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대화와 소통과 만남을 통해 하나의 삶의 모둠판에서 어우러지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삶의 현장은 개인들의 다양성의 가치가 인정되고 단절 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며 공동체 의식을 나누는 만남의 광장이다.

소통은 상호이해와 합의를 지향하는 상호작용이다. 소통은 지배, 강압, 권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을 전제하거나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서 자유로운 인간들의 합리적인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만 소통은 이루어진다. 이런 소통은 일상적인 생활세계의 영역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이때 생활세계의 영역은 개인이나 가정과 같은 사적 영역과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같은 공적 영역으로 나뉘어 진다. 그리고 소통을 매개로 조정되는 이 생활세계의 영역에서 개인의 사회화,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 등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활영역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실현되고, 그 사회는 발전한다. 대학의 시민교육이 민주사회를 발전시킬 역량을 가진 합리적 비판적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 선의, 공감, 배려, 봉사, 유대의 덕목을 가진 따뜻한 이웃을

13 『정신현상학』(자기의식)장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14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경제학 철학수고』에서 소외된 노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노동을 분석한다.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슈바이처의 삶을 보고, 또 수단 남부 톤즈 지역에서 한평생 봉사하며 살았던 이태석 신부의 삶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라고 그들의 삶의 빛과 향기에 탄복한다. 인간의 따뜻함에 감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미 지구촌 공동체를 생각하는 '세계시민'임이 근저에 깔려 있다.

오늘날 세계사회의 특징은 말 그대로 세계화, 글로벌, 지구촌, 지구화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 문명은 문명간의 대화와 공존, 타자와의 공감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가령, 빈곤, 전쟁, 기후, 생태환경의 심각한 형평성의 상실 등의 문제는 이미 특정 국가의 특수한 문제 아니다. 그래서 공존의 윤리는 지구촌 공동체와 새로운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실천적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시민'이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면서 지구적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시민은 근대적 시민과 구별되는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지구적 거버넌스의 요청을 수행할 시민의 덕목(공감, 나눔, 참여, 연대)을 갖춘 역량이다. 지구적 차원의 공정과 정의,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지역의 풀뿌리 공동체에서부터 세계공화국의 의제까지 등장한다.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대학의 시민교육이 세계시민의 양성을 소홀히 할 수 없다.

#### 4. 대학 시민교육과 비판적 성찰적 사고

왜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능력이 필요할까? 왜 성찰적 삶을 살아야 할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자율성을 갖춘 시민, 선택과 행동의 자유에 대해 책임지는 능력을 갖춘 시민에게는 지적 성숙과 윤리적 사회적 성숙을 요청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유의지에 따라 타당한 선택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주한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그 문제에 관한 정보의 참과 거짓을 가리고, 이치에 맞고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한다. 그리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 바로 윤리적 사회적 능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처럼 논리적 타당성, 이성적 분별력, 객관적 합리성 등과 관계하는 인간의 능력이 비판적 사고력이다.

비판적 사고과정은 마주한 문제, 정보, 사안 등에 대해 의문을 갖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의문을 갖는 것은 의심하고 회의하는 철학적 사고방법이다.<sup>15</sup> 의문을 갖는 이러한 방법적 회의는 타당성과 합리성을 찾아가는 사고의 길이다. 이 방법적 회의는 지식 정보의 측면에서 되새겨 보고(인식론적 반성),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성찰하는(윤리적 반성) 사고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과정의 내용은 자기비판의 용기와 능력, 사회적 관계와 세상일에 대한 합리적 분별력, 우주에 대한 경외심까지를 포함한다.

15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가 대표적이다.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훈련술이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도록 인식주관을 순수화(katharsis)하는 논박의 과정과 상기(想起)를 통해 참지식을 산출하는 산파술로 이루어져 있다. 이른바 소크라테스의 대화술이다. 학(學)적 인식(체계), 즉 진리 인식의 목표를 '개념은 대상에 대상은 개념에 일치하는 곳이다'라고 언명한 헤겔(Hegel)의 방법도 비판적 사고의 과정이다. 헤겔철학에서 진리 인식에 도달하는 의식의 경험 과정은 치열한 도야(陶冶 Bildung)의 과정이고, 또한 교양(教養 Bildung)형성의 과정이다. 도야와 교양형성의 과정은 자기반성에서 출발하고, 자기반성은 타자(자연적 대상, 사회적 관계, 세상일 등)와 자기자신의 매개 관계를 언표한다. 특히 자기반성은 대립관계를 통일시켜 동일성(주객 동일성)으로 귀환시키는 이성의 작용이고, 또한 대립적인 타자를 인정함으로써 자기자신을 인정한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다른 인간과의 관계 실현을 통해서만 참된 인간인 것이다. 이처럼 철학자들은 비판적 사고과정을 통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고단한 일련의 경험 속에서 '나인 우리, 우리인 나'라는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구축했다. 바로 여기에 대학의 시민교육이 비판적 사고력을 주춧돌로 삼아 자율성과 책임 그리고 관용의 능력을 기르는 철학적 배경이 있다.

#### 5. 마치며 : 대학 시민교육의 실천적 의미

대학의 시민교육이 그 교육적 의미를 살리고 실천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현장활동(봉사활동 포함)이란 우리 주변의 삶과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발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현장활동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웃, 지역사회, 국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 발전과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현장활동은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적 활동이 아니라 쌍방의 교류를 통해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생활에 필요한 가치를 실현하는 나와 너, 우리의 공동의 활동이다. 그래서 현장활동은 나와 너, 우리 모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효과를 낳는다.<sup>16</sup>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내기 위하여, 현장활동을 포함한 시민교육이 갖는 교육적·실천적 의미를다음의 네 가지 정도로 목록화할 수 있다.<sup>17</sup>

##### ① 문제해결의 상상력과 능력 키우기

〈물음〉 : 어떤 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 현실 알기: 무엇이 문제인가?

16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제2의 탄생』, 경희대 출판문화원, 2012, 제6장 참조.

17 앞의 책, 『책 머리에』 참조.

- 탐색 하기: 문제의 경과를 어떠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상상력 키우기: 나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② 세계알기와 경험확장

〈물음〉 :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공감: 그들은 누구인가? - 신뢰: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소통: 그들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가?
- 연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공존: 갈등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 수 있는가?

## ③ '더 나은 인간' - 자기변화

〈물음〉 :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 삶: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 실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삶: 어떤 가치를 세울 것인가?

## ④ '더 나은 세계' - 미래문명 만들기

〈물음〉 :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인간에 대한 책임: 관계맺기, 나누기, 함께하기
- 사회에 대한 책임: 불편하고 불평등한 사회제도 변화시키기
- 역사에 대한 책임: 정의로운 민주사회 발전시키기
- 문명에 대한 책임: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문명 창조하기

이렇게 목록화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교육적 실천적 의미는 '교육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로서의 교양교육이며, 나아가 교양교육과 시민교육의 철학적 토대인 '훌륭한 삶'을 실현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교육』(자료집), 2011.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인간의 가치탐색』, 경희대 출판문화원, 2012.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제2의 탄생』, 경희대 출판문화원, 2012.

김진식, 『르네 지라르에 의지한 경제논리 비판』, UUP(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도정일,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민주주의를 말한다』, 후마니타스, 20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교육 현장 지침서』(자료집), 2010.

박종현, 『헬라스 사상의 심층』, 서광사, 2001.

우기동, 『과연 삶과 사회의 철학이었나』,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현재와 미래』, 푸른숲, 1998.

\_\_\_\_\_, 『실천인문학과 삶의 철학』, 『인문학연구』 제14호,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2008.

이병창, 『일제퇴각 이후 한국에서의 헤겔철학 연구사』, 『철학연구 50년』, 혜안, 2003.

이한구,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1992.

Aristoteles, *Metaphysica*, (trans.W.D.Ross).

Bauerman,R. und Rötcher,H.J., "Der Subjektivismus der revisionistischen Praxisphilosophie",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1973.

Colby, Anne 외, *Educating Citizens*, Jossey-Bass, San Francisco, 2003.

Earl Shorris, 고병헌 외 역, 『희망의 인문학』, 이매진, 2006.

Hegel, G.W.F, *Phänomenologie des Geistes*, hrsg V.J.Hoffmeister, Verlag von Felix Meiner, Hamburg, 1952.

\_\_\_\_\_, *Wissenschaft der Logik I, II*, Suhrkamp Verlag, 1971.

Marx, K./ Engels, F., *Werke(MEW)*,Bd. 40, 42

Nussbaum, Martha C., 우석영 옮김,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궁리, 2011.

Vollmer,G., *Was Können Wir Wissen?*, S.Hirzel Verlag, Stuttgart, 1988. 〈참고 자료〉

# 시민교육의 철학적 토대

우 기 동

## 1. 교양교육과 시민교육

### 1) 교양교육의 목표

-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 :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의 양성
- 교양교육의 최종 목표 :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자기 생애를 이끌어 나갈 내적 견고성 함양

### 2) 시민교육의 목표

-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민주시민,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따뜻한 이웃, 세계시민(성)
- 시민의 덕목 : 자율성, 책임감, 비판적(성찰적) 사고력, 관용
- \* 교양인 : 교육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 훌륭함(aretē)의 실현, 훌륭한 삶 → 일생동안의 삶의 방식
- \* 지적 능력, 윤리적 능력, 사회적 능력 함양
- <지적 능력>: "사회적 삶에서 마주하게 될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 <윤리적 능력>: "지식과 실천을 연결하는 능력,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능력"
- <사회적 능력>: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심리적 현실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세계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을 여러 각도에서 볼 줄 아는 능력, 개인들 혹은 집단들 사이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통, 연대, 협력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능력"

## 2. 교양인(훌륭한 삶)이란? - 철학적 토대

### 1) 훌륭한 삶 : 희랍철학

- ① 존재의 본질 이해
  - 아레테는 앎(epistēmē)이다.
  - 앎은 존재의 올바름에 대한 앎이다(존재의 소리, 소크라테스 dīmon의 소리).
  - (∴ 훌륭한 삶은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 따라서 훌륭한 삶은 사람됨(사람의 올바름, 사람 구실ergon, 인간존재)에 대한 앎에서 비롯한다.
  - 사람됨 : 혼이 깃든 삶, 이성(logos)적인 삶
  - 이것은 앎과 실천(행위)의 문제다.
  - (∴ 훌륭한 삶은 윤리적 (사회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 ② 공동체

- 아리스토텔레스 : 언어적 동물(소통), 정치적 동물(공감), 사회적 동물(공존)
- 아레테에 근거한 사회적 관계 : 개인(구성원)과 공동체(구성체)의 합리적 결합
- (∴ 훌륭한 삶은 (윤리적) 사회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 2) 교육과정 - 인식(체화)과정

- ① 문답법 : 인식주관의 순수화(katharsis, 논박), 상기(想起, 산파술)
- \* 비판적 사고 과정(사고력) : 의문(의심, 회의), 반성(인식론적, 윤리적)
- (자기비판의 용기와 능력, 사회적 관계와 세상일에 대한 합리적 분별력, 우주에 대한 경외심)
- \* 성찰의 능력

### ② 도야(陶冶 Bildung, 教養교양)의 과정 : 자유의식의 진보의 역사

- 헤겔의 학(學)적 인식(체계)의 목표는 '개념은 대상에 대상은 개념에 일치하는 곳이다.' 이러한 학적 인식에 도달하는 의식의 경험 과정은 치열한 도야(Bildung)의 과정이고, 또한 교양(Bildung)이다.
- 도야 : 자기 내 반성(Reflexion in sich selbst)
- 자기반성 : 타자(자연적 대상, 사회적 관계, 세상일 등)와 자기자신의 매개 관계를 연표
- 특히 자기반성은 대립관계를 통일시켜 동일성(주객 동일성)으로 귀환시키는 이성의 작용, 대립적인 타자를 인정함으로써

써 자기자신을 인정한다.

- 인간은 사회 속에서 다른 인간과의 관계 실현을 통해서만 참된 인간이다.
- 존재의 본질 이해(개념과 대상의 일치)를 위한 개별과 보편, 보편과 개별의 모순 및 지양(상승), 구체적 보편(전체)의 통찰 : 정신
- 정신의 세계는 바로 교양과 문화의 영역, 인륜적 세계(합리성과 情의 결합)
- '나인 우리, 우리인 나'의 공동체(역사적 경험 :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 유기체, 예술, 철학, 종교

- 구체적 보편은 창조적 도전, 상상력의 존재론적 근거이면서 동시에 교양(Bildung) 과정의 합목적적 결과(훌륭한 삶, 교양인, 공동체)로 나타난다.

결국 플라톤의 철인정치에 의한 이상국가의 근거에 깔려 있는 정신은 '사회적 정의(좋은, dikaiosynē)는 올바른 사람의 내면적 덕(훌륭함, anthrōpeia aretē)으로 산출한다'는 언명이다.

### 3. 시민교육의 실천(현장)활동과 창조적 도전

#### ① 사고 논리 : 정당화의 맥락과 발견의 맥락

(반성, 성찰, 비판적 사고력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 정당화의 맥락(삼단논법 1, 3격)
- 연역(1격) : 보편의 참을 전제로 개별의 참을 도출(필연성)
- 귀납(3격) : 개별들의 참을 전제로 보편의 참을 도출(개연성)
- 발견의 맥락(삼단논법 2격,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 형식논리학에서는 폐기)
- 과학적 발견의 과정(가설유도 추리)
- 특수, 가설설정, 보편법칙(이론)

#### ② 창조적 도전의 논리적 근거

(개념, 판단(명제), 추론)

- 판단력 : 특수를 보편에 포섭시키는 능력
- 칸트 이후 독일철학
- 규정적 판단력 : 보편이 이미 주어져 있을 때, 특수를 주어진 보편에 포섭시키는 능력(확실한 인식)
- 반성적 판단력 : 특수만 주어져 있을 때, 보편을 상정하고 보편에 특수를 포섭시키는 능력(가설적 판단, 상상력 → 헤겔의 추론 3형식 높게 평가)
- 따라서 창조적 도전은 발견의 과정이고 상상력을 펼치는 힘이다.

#### ③ 창조적 도전의 철학

- 구체적 보편(전체)의 통찰 : 역사적 이해, 존재론적 이해
- 합목적성의 이해 : 다양한 부분들과 전체의 조화, 전체적 통일과 부분들의 조화 (기계론이나 목적론과는 구분)

# 사회과학의 대안적 교육형태로서 시민교육

윤종희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교육의 대상, 내용, 형태의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시민교육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고대 그리스나 중세 유럽의 자유도시에서 독립된 정치주체로 등장한 시민을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모든 개인이 시민적 지위를 획득한 현대의 정치적 조건에서는 이 같은 정의가 별다른 특정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오늘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모든 교육은 시민, 또는 예비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시민교육은 내용의 측면에서, 즉 시민성(citizenship) 또는 시민권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교육 개념을 사용할 때에는 대체로 이 같은 정의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 이 같은 개념은 시민교육의 의미를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을 실천적으로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시민교육을 형태적 측면에서, 즉 공교육을 비판하는 독자적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함으로써 내용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한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정의할 때, 시민교육에서 사회과학이 중요해진다. "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라는 문제와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 시민교육 개념을 둘러싼 혼란

### 시민교육의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

먼저 우리 사회에서 시민교육이 사회적 의제로 제기되는 배경을 살펴보자.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학계와 주요 시민단체들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의 성과를 더욱 공고화할 수 있는 계기로서 시민교육에 주목한다. 당시 사회운동의 공백을 메우면서 등장한 각종 사회단체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개혁적 의제를 정당화하고 대중적 공감을 획득하고자 한다. 일례로 참여연대는 참여사회아카데미를 중심으로 - 넓은 의미의 - 정치활동과 교육활동을 연계한다(김창엽·성낙돈, 2008; 한승희 외, 2004). 1994년에 학계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협의회>가 창설되고, 아울러 1997년에는

1 우리 사회에서는 1990년대부터 일부 시민단체가 자신의 정치활동, 또는 개혁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독특한 윤리적·정치적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립적으로 시민을 '권리의 주체로서 개인의 의미로 사용한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YMCA, 환경운동연합 등이 <민주시민교육포럼>을, 1999년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맹 등이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를 결성한다(한승희 외, 2004: pp. 266-267). 국가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통일교육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서도 시민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채택한다(신두철, 2010).

이처럼 초기에는 시민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폭넓게 형성된다. 그러나 그 성과는 기대했던 만큼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별 단체 차원의 교육활동은 시행되지만, 처음 기획했던 바대로 포럼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다. 게다가 그 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이전 시기에 비해 주춤해지면서 시민교육도 얼마간 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 시민교육을 주도했던 참여연대의 참여사회아카데미가 2002년에 종료된 것은 전체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일각에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대신에 법제화를 추진한다. 민주시민교육원(가칭) 같은 기구를 설립하고 정부차원에서 시민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그것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홍득표, 1997). 그러나 이것 역시 실패한다. 이는 사실상 예견된 것인데, 이미 시민교육이 침체된 상황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여 입법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침체된 시민사회의 자율적 교육활동이 갑자기 활성화될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민교육과 관련된 실천과 논의가 다시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대신에 이번에는 대학이 시민교육을 주도한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다수의 대학들은 봉사활동, 서비스러닝(service learning) 등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왔다. 특히 2010년에는 경희대학교가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발족하면서 <시민교육>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 이제 많은 대학들은 시민성 교육을 중심으로 - 비록 그 형태와 내용은 다르지만 -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시민교육이 실천적으로 정체되었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시민교육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왜 활성화되지 못했는가?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사회운동에서 시민교육의 위상을 이론적·개념적으로 정확히 정립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시민교육 개념이 모호하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지금까지 논의된 시민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면 그 성격의 모호함이 확연히 드러난다. 먼저 시민단체에서는 시민교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민주시민교육포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안)'에서는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그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식을 함양하고, 각 분야에서 민주적 참여와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등 민주시민의 자질을 철차적으로 학습하는 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임을 인식하고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정치현상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갖추며,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사회정치행위에 책임을 지며, 이러한 선진적, 민주적 의식을 가정, 학교, 사회에서 습득하는 모든 교육 및 훈련"으로 정의하고 있다(한승희 외, 2004: p. 266; 강조는 인용자).

2 물론 자유총연맹 등 일부 사회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은 강좌의 수, 참여 인원 등 외적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하지만, 대체로 일회적 강연에 그치고 있어 시민교육의 문제의식을 실현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시민교육의 개념을 역사적·이론적으로 분석한 한승희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을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 이념, 사고, 행동 등을 형성함과 아울러 그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교육의 과정', '국가의 일방적 정치사회화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비판적 성인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한다(한승희 외, 2002: p. 491; 강조는 인용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도정일 대학장은 시민교육을 시민적 능력의 총합으로서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을 육성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시민적 덕성은 자율성과 책임성, 비판적 사고, 다양성의 존중, 타자에 대한 이해, 경청의 능력, 공존의 정의에 대한 자기 약속 등을 포함한다(도정일, 2011; 강조는 인용자). 그 외에도 신형식(2012), 김한규(2009), 심익섭(2001), 김정래(2001), 조도근(1997), 김영진(1997), 안정수(1996) 등도 시민교육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 덕목, 자질 등의 관점에서 정의한다.<sup>3</sup>

### 시민교육의 내용적 정의의 한계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발전·심화시킬 수 있는 시민적 '가치'와 '덕성',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뿐, 큰 틀에서는 대체로 동일하다. 그러나 이 같은 개념 정의는 몇 가지 중요한 오류를 내포한다.

첫째,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시민교육을 정의하는 개념이 아니다. 단지 시민교육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마라톤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42.195km를 달리는 육상의 한 종목'이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인내력을 시험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다. 시민교육에 대한 정의는 정확히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언술로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주관적으로 희망하는 효과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까지 각 시민단체는 자신이 놓여있는 객관적 현실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왔다. 그래서 이제는 그 경험에 기초하여 시민교육을 좀 더 구체적이고 특정화된 방식으로 정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앞서 언급한 그런 효과들을 얻기 위해 어떤 활동, 어떤 프로그램이 유효한가를 논의해야 한다.

둘째, 어떤 원대한 목표를 갖는 것이 그 자체로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원대한 목표는 실천적으로 무능할 수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시민교육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도 이와 관련된다. '시민으로서 지적·도덕적 완성'은 현대 사회, 또는 현대 문명 전체가 추구하는 목표인 것이지, 대학의 3학점 교양수업과 사회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교육에 관한 기존의 정의는 정치공동체 속에서의 자아 완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는 고대 그리스의 파이데이아

3 일례로 김한규는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태도를 배양하고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 토양을 마련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를 확립하는 구체적 대안'으로 정의하고(김한규, 2009: p. 295), 안정수는 '일정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구비해야 할 지적·도덕적 완성을 돕는 교육'으로 정의한다(안정수, 1997: p. 1). 조도근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 요소를 '인권존중정신', '자유와 책임정신', '봉사와 협동정신', '준법정신', '능동적 참여정신', '반성적 사고정신' 등으로 규정한다(조도근, 1997). 또 신형식은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로 ① 민주시민의 핵심역량 내면화, ② 진정한 시민적 주체성 함양, ③ 민주적 사회통합 강화, ④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 확충, ⑤ 시민의 삶의 질 고양 등으로 규정한다(신형식, 2012: p. 46).

(Paideia)의 현대적 판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파이데이아적 교육관은 어떤 문명의 총체적 지향을 지칭할 때에는 유의미하지만, 특정한 학교나 시민단체의 구체적 활동 프로그램으로서 시민교육을 사고할 때에는 오히려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셋째, 내용적 정의만으로는 현재 공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성 교육 - 즉 국민윤리 및 사회교과 교육 - 과의 차별성을 설명할 수 없다.<sup>4</sup> 초·중등학교 사회교과의 교육내용도 민주주의의 지식(민주주의의 제도, 경제제도, 민주주의 발전), 가치·태도, 참여·실천(정치·경제·사회적 참여) 등의 기본틀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손경애 외, 2010).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신의 국민교육현장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sup>5</sup> 시민교육은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사회 및 윤리 교과의 연장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시민교육의 독자성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교육의 내용적 정의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다.<sup>6</sup>

넷째, 특히 시민교육을 시민의 덕성과 태도 같은 윤리교육의 일환으로 간주하면 교육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가르치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구성하든, 사실상 상관없다. 오직 시민교육만 시민적 덕성과 태도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이라도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시민교육의 특징으로서 교육방법이 특권화된다(신두철, 허영식 외, 2009). 그 중에서도 '현장 참여'가 강조되는데, 즉 "다양한 종류의 노동자 생존권 투쟁과 민주화 투쟁, 그리고 성, 환경, 인권, 평화 등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문제제기 활동 등이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과정'"이라는 것이다(한승희 외, 2002: pp. 527-528).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실천적으로 시민단체의 정치활동과 구별되는 시민교육의 영역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해왔던 대중적 활동을 시민교육이라고 부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는 올바른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들, 즉 자율적인 행동과 사고, 독창적·비판적 사고, 협동과 공동체적 의식 등이 주체의 각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는 점에서 조야한 계몽주의의 오류를 답습하고 있다. 이는 모든 사회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고,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자유주의적 교육관의 한계를 고스란히 답습한다. 지금까지 시민이 '시민적 태도와 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단순히 교육받지 못해서만이 아니다. 그것은 '민(民)이 진정한 '주인'(主)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

4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교육과 시민교육은 국민과 시민의 개념적 차이만큼 크다고 주장한다. '국민'이란 용어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줄임말에서 유래한 만큼 시민과 달리 국가에 대한 종속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 사회과학이나 정치철학에서 국민을 황국신민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화(culture)의 어원이 농경이라고 해서, 이 둘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오늘날 국민은 시민(citizen)의 복수형, 또는 시민공동체를 지칭하는 people/nation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시민의 어원에 기초하여 국민교육/시민교육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5 국민교육현장의 가치도 '반공'을 제외하면 대체로 시민교육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교육현장도 민족중흥, 자주독립과 인류공영, 창조와 개척, 공익과 질서, 능률과 실질, 경애와 신의에 기초한 상부상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국가건설에 대한 참여와 봉사를 강조한다. 신군부가 1981년에 시행한 제4차 교육과정도 '사회현상을 바른 시각과 다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 '더 나은 미래 사회를 건설하려는 태도'를 새로운 목표로 추가하고, 여기에 다양성과 주체성을 강조한다.

6 이에 대해 시민교육은 창의성과 비판적 의식을 강조하는 데 비해, 공교육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다고 반론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이 비판적 의식의 발전을 어느 정도 가로막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명시적으로 복종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교육과 시민교육이 서로 다른 가치를 표방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공교육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무조건 입시 위주의 교육 탓을 돌리는 것은 분석의 무능력을 드러낼 뿐이다.

는 사회구조적·제도적 요인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금노동자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에서 타인(자본가)에 종속되는데, 어떻게 자기 삶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임노동관계는 노동자가 정치적 주체로서 활동하는 데 가장 커다란 제약이 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구조적·제도적 요인이 시민적 삶을 제약한다. 시민교육에서 사회과학적 사고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개인을 각성시키는 교육이 굳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오직 '잠재적 교과과정'(hidden curriculum)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미 초중등교육의 윤리와 사회교과의 경험에 말해주듯이, 시민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시민교육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이 많은 결함을 내포하는 것은 사회변혁의 과정을 단지 정치적 변혁으로 협소하게 사고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것은 시민교육을 오직 - 넓은 의미에서의 - 정치활동의 연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과 관련된다. 즉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그 내용이 모호한 '실질적 민주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실질적 민주화는 시민교육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세마의 결함과 관련된다. 1990년대 중반에 시민단체들이 시민교육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할 때, 그것의 일차적인 목적은 정치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즉 이들은 시민교육을 통해 형식적 민주화가 실질적 민주화로 성장·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처럼 시민교육을 정치운동의 수단으로 사고하는 한에서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활동내용으로 규정되지 못한다. 그래서 다만 추상적인 원리, 또는 그것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효과를 통해서만 시민교육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을 정치활동과 다른 각도에서, 특히 교육운동, 또는 교육개혁의 측면에서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쟁점』(2002)에서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민교육 개념은 민중운동,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노동자운동 등의 연장선에서 제출된 개념이다(한승희 외, 2002).

## 새로운 교육형태로서 시민교육

### 사회변혁에서 교육운동의 위상

윌리엄스(R. Williams)는 『기나긴 혁명』에서 현대의 주된 변화를 경제혁명(산업혁명), 정치혁명(민주주의), 문화혁명으로 규정한다. 문화혁명은 그 개념의 외연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지만, 윌리엄스는 조심스럽게 문해력(literacy) 향상 등 교육혁명을 그것의 핵심으로 간주한다(Williams, 2007).<sup>7</sup> 이 세 가지 변혁은 서로 상호작용하지만 어느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다. 민주화는 - 그것이 실질적이건, 형식적이건 - 국가 부문의 변화에 국한된 것이지, 그것만으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의 모든 사적 관계들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서 접근해야 한다.

7 문화혁명에서 교육의 핵심적 중요성에 관해서는 윤중희·박상현 (2005)을 참조하십시오.

영국혁명을 비롯한 일련의 현대 시민혁명은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지식의 평등을 주장한다. 당시 정치적 지배·종속 관계는 단순한 정치적 강제 외에도 대중의 무지(無知)와 맹신(盲信)에 의해서도 재생산되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정치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된다. 그러나 교육제도의 개혁을 가속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생산자 대중의 교육운동이다.

영국에서 로크 이래로 자유주의자들은 임금노동자와 여성의 시민권을 부정했다. 그 이유는 자본가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고 교육도 받지 못한 무지한 대중은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귀족에 의한 교육독점을 비판하면서도 지식교육의 기회를 노동자계급과 여성에게 확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등시민'의 지위를 강제한다. 당시 부르주아지가 설립한 초등학교(일요학교와 조교학교)는 중등학교와 연계된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사회통제기관으로, 오히려 그 성격이 병원이나 감옥에 더 가깝다. 그것은 간단한 읽기와 산수를 가르치지만 주로 종교적 교리와 복종심을 주입하고 육체적 훈육을 강화하는 것에 주력한다.

그래서 프랑크혁명 후 급진화된 영국의 노동자계급은 시민권을 쟁취하려는 정치운동과 아울러 교육운동을 전개한다. 그것은 주로 오언주의자와 차티스트가 주도한다. 이들은 기존의 일요학교(sunday school)를 개혁하거나 과학회관(science hall) 같은 독자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한다. 이 같은 교육운동은 초등학교가 공식적 교육기관으로 개혁되는 데 결정적이었다. 1870년 영국의 교육법 제정도, 1840년대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보통학교(common school) 설립운동도, 그 배후에는 바로 노동자계급의 교육운동이 있었다(Simon, 1960; Welter, 1962; Curoe, 1926). 그리고 191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중등교육이 대중화되는데, 이러한 흐름은 2차 세계전쟁 후에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 전역으로 확산된다.

엘리트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변화되는 것과 함께 지식의 내용도 변화한다. 중세 교육을 특징지었던 인문교양 - 문법, 수사, 논리(3학), 그리고 수학, 기하, 천문, 음악(4과) - 과 신학·법학·의학 중심의 스콜라주의적 교육이 과학과 공학 중심의 현대적 교육으로 변모한 것이다. 특히 고등교육에서는 기존의 학부제 대신에 전공학과제를 도입하고, 연구 중심의 새로운 대학원을 설립한다. 아울러 중등교육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가르치는 시민교육, 또는 시민성 교육(citizenship education)을 도입한다.<sup>8</sup>

이처럼 현대 사회의 문화혁명은 교육개혁, 또는 교육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공교육 제도는 지식과 교육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항상 한계와 공백을 드러낸다. 일차적으로 국가권력과 자본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교육 제도 외부에서 기존의 지배적인 교육·지식 형태에 도전하는 시민 차원의 자율적인 교육운동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오언주의와 차티즘의 교육운동이 그렇고, 18-19세기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낡은 스콜라주의에 대항했던 시민대학 설립운동이 그랬다. 이러한 교육운동은 기존 교육제도가 개혁되면서 어느 정도 흡수된다. 그러나 여전히 공교육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교육적 요구가 출현하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적 교육운동은 소멸되지 않는다.

8 미국에서 교육제도가 가장 빨리 현대화된 것은 유럽과 달리 중세 봉건제적 전통이 없었던 것과도 관련된다. 유럽은 대학이 사회적·정치적 특권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강력한 정치적 저항에 부딪혔다. 반면에 미국은 독립 후 대학이 별다른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사회로부터 외면되었다. 그래서 19세기 말 위기에 처한 대학은 법인기업의 후원 아래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공립교육 또는 지배적인 교육형태의 공백, 결합,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는 시민의 자율적인 교육형태를 시민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시민교육은 바로 교육의 형태적 측면, 즉 시민적 자율성에 기초한 교육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형태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한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그 내용을 구성할 때, 기존 교육 제도의 결합과 한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 공교육의 한계와 시민교육

현대적 교육제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콜라주의적 고전학습에서 과학·공학 중심의 현대적 지식교육으로 변모하고, 또 엘리트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동시에 교육제도가 자본축적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대중을 위계적으로 분할하는 직업주의(vocationalism) 형태로 변형된다(Grubb and Lazerson, 2004). 여기서 직업주의는 교육제도가 개인의 직업적 경력을 준비하는 수단으로 변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의 직업교육과 구별된다. 직업주의적 교육제도에서 지식은 개인의 경제적 지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는 직업적 경력과 무관한 지식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적 무관심을 유발한다. 고등교육이 세분화된 전공학과제로 구성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된다. 그래서 과거 19세기까지만 해도 시민교육은 공식적 교육 외부에서 다양한 사회단체, 정당,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지만, 교육의 대중화, 직업주의화 이후에 급속하게 축소된다. 미국에서 대안학교 운동이나 탈학교 운동이 계토화되는 것도 공식적 교육제도가 직업주의에 기초하여 강력한 구심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개인은 시민의 존재조건, 즉 경제, 정치, 사회, 역사 등과 관련해서는 - 전공자가 아니면 - 충분한 지식교육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에서도 직업교육이 확산되는 20세기 말에 더욱 악화된다.

아울러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 특히 한국의 중등교육에서는 - 지식의 일방향적 주입과 암기가 강조된다. 이에 따라 넓은 의미의 사회교과는 - 그 원래 의도가 시민성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 특정한 도그마를 학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교육의 취지에 어긋나고 만다. 즉 사회교과는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논쟁에 임하는 시민적 자세와 태도 등을 계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교과서 중심의 학습에서는 그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와 역사가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지식은 자체가 갈등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토론, 현장 참여활동, 프로젝트학습, 서비스러닝 등 이른바 '진보주의적 교육방법'을 통해 지식교육을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sup>9</sup>

또한 기존 공교육은 가급적 갈등적 상황을 회피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수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과학 및 역사와 관련된 교육은 내용이 매우 빈약해지고, 또 구체적 현실과 유리된 추상적 개념을 가르치는 것으로

9 일례로 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것도 토론 없이 오직 교과서의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방식과 관련된다. 현재와 같은 교육 방식에서는 어느 한 쪽의 교과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반면 토론 중심의 교육에서는 교과과정을 논쟁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래서 '우익'과 '좌익'의 정치적 대립이 역사 해석에서 어떤 차이로 드러나는지 보여주고 토론을 통해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좋은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관한다. 그래서 현재의 사회현실과 역사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교육은 오직 대학과 시민단체에서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 대한 지식교육은 항상 토론을 동반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 방법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하면 실제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등한시함으로써 반(反) 지성주의로 편향될 수도 있다. 실제로 처음에 미국에서 진보주의 교육방법은 기존의 지식교육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또 사회연구(social studies)도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지리학 등 전문적 지식 교육에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진보주의적 교육방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흔히 너무도 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실제에 관한 지식 교육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한다.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 대신에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분석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교육방법론은 진보주의 교육이론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일례로 김정래(2001)는 "문제해결 중심형 교육 프로그램은 민주 시민성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의 원리를 신장하고자 고안"되었고, 그래서 시민교육은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상황을 주도하는 능력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유사한 맥락에서 신형식(2011)도 시민교육의 주된 목표를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초한 사회적 행위의 실천'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교육방법은 일차적으로 내용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지식교육이 모두다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인 것은 아니다.<sup>10</sup> 오히려 지식교육이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이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비판적 사고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읽기·쓰기·산수로 대표되는 기초기술을 완벽히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또는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기초하여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습득한 후에야 현실의 정보를 분석, 종합,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발전한다. 교육방법을 특권화하는 것은 이 같은 지적 발전과정을 비약하는 것이고, 그 의도와 무관하게 지식교육을 사실상 상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육방법은 지적 발전의 각 단계에서 내용에 맞게 달라져야지, 일반론적으로 정식화될 수는 없다.

지식교육을 결여한 토론식 교육은 사실상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획득한 상식 수준의 지식을 교토하고, 기존의 의견대립을 재현하는 것으로 전개될 뿐이다. 그래서 그 형태와 외양과 달리, 그리고 원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의식고양(consciousness raising, raising awareness)의 한 형태, 또는 도그마를 - 좀 더 효과적으로 - 주입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교육방법을 강조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편향은 '참여'와 '실천'을 특권화하는 것이다. 물론 직접적인 참여와 실천은 텍스트 위주의 지식교육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시민교육의 독자성을 박탈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는 입법청원운동, 행정감시, 또는 대중집회(또는 일인 시위) 등 시민이 직접 행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그런데 시민교육을 단지 참여와 실천만으로 규정해버리면, 이런 활동과의 차별성이 사라진다. 물론 중등학교와 대학은 참여와 실천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장활동, 서비스러닝 등을 통한 실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시민교육에서 참여와 실천의 기회가 갖는 위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

10 이 둘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비판적 사고를 가로막는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 같은 관점에서는 현대적 교육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론과 기술의 비약적인 혁신과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 비판적 사고 없이는 어떤 혁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토론식 학습과 마찬가지로, 지식교육을 상대화할 경우에 참여와 실천은 맹목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 일에 투표하는 것만으로 올바른 정치적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가? 오히려 시민교육은 정치·경제·사회·기술적 쟁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를 육성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시민적 태도, 관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중요한 쟁점에 대한 합리적 판단은 오직 그 분야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선동(테마고그)에 휩쓸리기 십상이다. 오늘 대중의 빈곤과 불안의 원인을 조작하여 상대방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정치가적 인민주의'(politicians' populism)가 확산되고 있는데,<sup>11</sup> 참여와 실천에 대한 맹목적인 강조는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 대학에서의 시민교육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교육은 내용과 형태의 차원에서 정의될 뿐만 아니라, 형태적 정의가 뒷받침될 때에 내용적 정의가 갖는 모호함을 극복할 수 있다. 시민교육은 현재 직업주의화된 공교육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지식교육, 특히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 갈등적 지식에 관한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정의도 지나치게 방대하고 모호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민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중등학교, 대학, 시민단체, 정부기관 등은 제도적 특성과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시민교육을 획일적 방식으로 규정할 수 없다. 각각의 기관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에 기초하여 구체적 방식으로 시민교육의 형태와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시민단체, 정부기관, 중등학교의 시민교육이 어떻게 규정되는가는 이 글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경희대학교의 경험에 기초하여 대학의 시민교육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 경희대학교의 시민교육은 크게 현장활동과 이론학습의 두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의 장으로 구성된 교재가 - 비록 독자적으로 집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글을 편집한 '읽기자료'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 이를 반영한다. 마지막 6장, '현장활동과 비전 만들기'는 일종의 현장활동 매뉴얼이다. 이를 제외한 5개의 장은 다양한 장르의 글 - 시, 소설, 에세이, 논문, 인터뷰, 판결문 등 - 을 통해 이론교육의 내용을 구성한다. 1장은 시민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즉 시민적 가치, 태도, 실천 등에 관한 일반적 논의와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에 관한 정치철학적 논의를 담고 있다. 그런데 시민적 삶과 시민권은 그것을 근거지우는 사회적 조건에 의해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과학적 지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래서 2장과 3장은 현대 시민의 존재조건을 규정하는 정치(민주주의)와 경제(자본주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 그렇지만 논쟁적인 형태로 - 구성하고 있다. 2장에서는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대립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구체적인 정치적 쟁점(예, SNS를 통한 정치활동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다. 3장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예, 대학 연구자의 이익갈등)를 다룬다. 4장은 현대

적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민족국가의 기본틀이 오늘 세계화 과정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문제를 다룬다. 1절에서는 세계화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관점(T. L. 프리드먼)과 이에 대한 비판(J. E. 스티글리츠), 2절에서는 오늘 세계화가 당면한 쟁점들(금융위기, 농업위기, 전쟁), 3절에서는 세계시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 등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그동안 시민성의 형성과정에서 배제, 또는 간과되었던 측면들, 이른바 타자성(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유색인종 등)에 대한 반성을 통해 미래의 시민성에 관한 질문을 열어두고 있다.

대학은 시민교육 외에도 다양한 전공과 교양과목이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등에 관한 심화된 학습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학의 시민교육은 시민적 삶의 조건을 알고자 하는 지적 욕망을 유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대학은 지식교육의 기회에 비해 구체적인 참여와 실천의 기회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활동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 물론 경희대학교의 시민교육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를 완성된 형태로 간주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논의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 결론을 대신하여

교육은 매우 목적의식적인 사회적 실천이다. 대학이건, 시민단체건, 정부기관이건, 시민교육을 시행하는 주체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기초하여 그 내용과 목적을 정확하게 규정하면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만 교육의 효과는 언제, 어떻게 드러날지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실제로 노동자계급의 교육운동이 단명했던 것도, 직업주의적 교육관이나 입시 목적의 교육관이 대중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교육효과의 예측불가능성이 가져오는 불안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빨리 어떤 효과를 통해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정당화하려는 조급증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시민교육을 다른 활동의 수단으로 격화시킬 때, 이 같은 조급증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시민교육 자체의 독자적인 위상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직업주의적 교육관, 도구주의적 지식관이 확산된 상황에서 시민교육은 특히 어렵다. 어떤 목적에 종속되지 않은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교육적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시민교육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때 현대의 사회변혁은 한층 더 가속될 것이다. 또한 지난 역사에서도 드러나듯이 교육제도의 개혁은 항상 외부의 힘, 즉 시민교육에 의해 추동되었다. 교육위기에 대한 우리가 심각한 지금,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교육이 활성화되면, 공교육의 개혁도 새로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1 '정치가적 인민주의'는 20세기 말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으로 대중의 삶이 크게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등장한 인민주의적 정치의 새로운 형태다. 과거 러시아의 나로드니즘, 미국의 농민운동 등 초기의 인민주의가 대중의 운동으로서 등장한 것과 달리, '정치가적 인민주의'는 지배 엘리트에 의한 대중조작적 정치스타일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Canovan(1981), 정인경(2005)을 참조하시오.

〈참고문헌〉

김영진 (1997), 「한국의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 역사적 고찰」,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2호.

김정래 (2001),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교육』, 제28권, 제1호.

김창엽·성낙돈(2008), 「헤게모니론 관점에서 본 시민단체 시민교육의 성격: 참여연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제35권, 제1호.

김한규 (2009), 「한국 상황과 민주 시민교육(정치교육): 필요성과 과제」,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국학 논집』, 제38호.

도정일 (2011), 「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제2의 탄생』,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박상현 (2005), 「대중교육의 이론과 쟁점」, 윤종희·박상현 편, 『대중교육: 역사·이론·쟁점』, 공감.

서준원 (2000),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추진과정과 향후과제」, 『민주시민교육논총』, 제5호.

\_\_\_\_\_ (2002),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문제점」, 『민주시민교육논총』, 제7호.

손경애·이혁규·옥일남·박윤경 (2010),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동문사.

신두철 (2000), 「한국 국가기관의 민주시민교육 실태와 제도화」,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10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마나 자료집』(2010. 12).

신두철·허영식 (2009), 「민주시민교육 핸드북II: 방법론」, 선거연수원 연구총서 4, 으뜸.

신형식 (2012),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2호.

심익섭 (2001), 「시민참여와 민주시민교육」,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1-2호(겨울).

\_\_\_\_\_ (201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2호.

안정수 (1996), 「한국시민교육의 근본문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6호.

윤종희 (2005), 「법인자본주의와 대중교육의 역사」, 윤종희·박상현 편, 『대중교육: 역사·이론·쟁점』, 공감.

\_\_\_\_\_ (2010), 「현대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역사와 지식권의 제도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인경 (2005), 「인민주의의 역사」, 정인경·박정미 외, 『인민주의 비판』, 공감.

조도근 (1997),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방법」,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2호.

조찬래 (2012),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2호.

한승희 외 (2002),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쟁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_\_\_\_\_ 외 (2004), 『민주시민교육 운영 사례집』, 한국교육개발원.

홍득표 (1997),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체제구축 방안: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2호.

Canovan, Margaret (1981), *Populism*, Harcourt Brace Jovanovich.

Curoe, Philip R. V. (1926), *Educational Attitudes and Policies of Organized Labor in the United States*, Teachers College Press.

Green, Andy (1990), *Education and State Formation: The Rise of Education Systems in England, France and USA*, Macmillan.

Grubb, W. Norton and Marvin Lazerson (2004), *The Education Gospel: The Economic Power of Schooling*, Harvard University Press.

Simon, Brian (1960), *Studies in the History of Education, 1780-1870*, Lawrence & Wishart.

Welter, Rush (1962), *Popular Education and Democratic Thought in America*, Columbia University Press.

Williams, Raymond (2007), *The Long Revolution*, Harmondsworth, 1965 (성은애 역,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 「시민교육의 인문학적 자원 : 그 철학적 토대」 (우기동)를 읽고

장은주 /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인류의 번영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학문 공동체'나 '비판적 지성'의 요람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얼마간 과장을 섞어서 말한다면, 온갖 사회 병리들의 요람이거나 그 자체로 그 병리들의 결절점이다. 대학은 우리 사회에서 전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억누르는 입시지옥의 원천이며 학벌주의라는 사회악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전진기지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오늘날, 이른바 SKY 대학들을 포함하여, 기껏해야 성인들을 위한 직업학교에 불과하다. 그것도 투자 대비 형편없이 비효율적인 직업학교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천문학적 사교육비와 살인적인 등록금을 들여 대학졸업장을 얻지만, 엄청난 청년실업률에서 보듯이, 그 효용가치는 너무도 보잘 것 없다. 대학의 존재 의의가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경희대가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백신 처방을 통해 한국 대학의 교육이 제 자리를 잡도록 해 보겠다는 야심찬 시도를 하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 백신의 핵심 성분의 하나가 '시민교육'이라니 그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더 더욱 커진다. 더구나 이런 종류의 심포지엄까지 열어 스스로를 성찰해 보겠다고 나서기까지 하니 정말 눈이 부시다. 나로서는 대학 교육의 참된 핵심이 교양 교육이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양 교육은 다시 그 자체로 올바른 시민교육이어야 한다고 믿기에 더 더욱 그렇다.

경희대의 실험이 반드시 성공하여 장차 이 나라의 대학교육 전체가 제 자리를 잡는 데 커다란 초석이 놓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시민교육의 철학적 토대를 밝혀 보려는 발표자의 시도에도 크게 공감하고 또 힘차게 응원하고 싶다는 뜻을 우선 전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과정은 어쨌거나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그 중요한 목표라고 여긴다고 말이라도 내세우기는 하지만, 정말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왜 시민교육이 대학 교육, 특히 교양 교육의 핵심 축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인식조차 결여되어 있다. 이런 현실에서 발표자의 시도처럼 시민교육이 무엇을 위한, 어떤 교육인지를 밝히고 그 철학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일의 가치는 너무도 분명하다.

2. 그래도 이런 이야기만 해서는 토론이 재미가 없을 터이니, 사실은 조금 억지스럽지만, 발표자와는 약간 결이 다른 소리 몇 마디도 해볼까 한다.

발표자는 "첫째 민주사회를 발전시킬 역량을 가진 합리적 비판적 민주시민, 둘째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 선의, 공감, 배려, 봉사, 유대의 덕목을 가진 따뜻한 이웃, 셋째 한 나라의 시민임과 동시에 지구사회를 생각하는 '세계시민'"의 양성을 시민교육의 목표라고 제시한다. 그리고 이 "목표의 근처에는 스스로 문제를 찾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문제해결의 상상력과 능력'을 키우는 일이 깔려 있다"고 한다.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목표는 따지자면 교육 <그 자체>의 목표, 그러니까 초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 할 것 없이, <모든> 교육의 목표여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모든 교육은 사실 기본적으로 시민교육이기도 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시민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수사적으로 더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말 그대로 시민교육은 단순히 교육 과정의 일부나 대학의 (좁은 의미로 이해된) 교양 교육의 일부로만 여겨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런 이해조차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모든 교육이 그 자체로 시민교육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야만 우리 교육, 특히 대학교육이 얼마나 뒤집어져 있고 병들어 있는지가 더 잘 드러날 것 같고 고유한 교과 영역으로서의 시민교육의 의미도 더 잘 조명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다른 통찰도 주지 싶다. 존 듀이의 말마따나, 학교는 사회 밖에 있지 않고 또 단순히 사회의 일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 그 자체다. 그리고 학생은 단순히 앞으로 시민이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시민이다. 바로 그래서 모든 교육은 그 자체로 시민교육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따로 설정된 교과 영역이라는 좁은 의미의 시민교육을 이야기 하더라도 그 교육은, 발표자가 아마도 무심코 쓴 것처럼, 단순히 '시민되기'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 '이미-시민'의 시민다움 또는 '시민성(citizenship)'을 더 깊게 하고 더 넓히기 위한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런 식으로 시민교육을 이해하면 시민교육의 목표와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이나 방법도 얼마간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해에서 보면 올바른 시민교육은 결국 좋은 시민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에 달려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교육의 설계와 수행의 방식도 더 분명해 질 것이다. 가령 나는 시민교육이 생활세계에 밀착된 것이야 한다는 발표자가 인용한 도정일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시민성의 심화와 확대라는 차원에서 시민교육을 이해하면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지리라 믿는다. 학생들은 '이미-시민'으로서 시민교육의 주제들에 사실은 이미 어떤 식으로든 익숙하기 때문이다. 시민교육이란 바로 그 익숙함의 미숙함을 걷어내어 인식을 더 낮게 성장시키고 그렇게 성장한 인식을 다시 익숙하게 만드는 데서 성립할 것이다.

또 있다. 대학교육을 포함하여 교육 그 자체를 시민성의 함양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인문학 교육의 중요성 또는 근본성 또한 더 분명해지리라 싶다. 그러니까 인문학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의미의 시민교육이다. 시민적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제들, 곧 각 개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의 능력과 그들과 교감하고 역지사지할 줄 하는 능력 같은 것을 '시민적 습관'으로 만들게 하는 일은 예술 교육을 포함한 폭넓은 인문적 교양 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시민교육에서 인문학적 자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사족 같기도 하다.

발표자의 시도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시민교육에 발표자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일도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 싶어 조금은 억지스러운 탄축을 걸어 보았다.

# 「사회과학의 대안적 교육형태로서 시민교육」 (윤종희)를 읽고

신진욱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표자는 지난 10여 년 간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에 의한 시민교육이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시민교육에 대한 기존의 정의는 시민교육의 목표("무엇을 위해 교육하는가?")만 규정했으며, 콘텐츠와 방법론("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는가?")을 간과해왔다.

둘째, 시민교육의 목표 설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셋째, 내용적 정의만으로는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시민성 교육과 차별성이 없다.

넷째, 방법론으로는 현장 참여만을 강조하여 시민단체의 정치활동과 구분되지 않는다.

다섯째, 시민들에 대한 계몽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여섯째, 사회개혁을 정치개혁으로 협소하게 사고해왔으며, 시민교육을 정치운동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교정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발표자가 제시한 핵심 주장을 감히 단순화하자면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문화혁명은 현대사회 개혁의 중요한 기둥이며, 그 중심은 교육개혁이다. 그러나 공교육 제도는 지식과 교육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해소시키지 못한다.

둘째, 공교육은 그 목표가 직업주의 성격을 점점 더 강하게 띠었으며, 방법상으로 일방향적이고, 내용적으로 가급적 갈등적 상황을 회피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수하고자 한다.

셋째, '시민교육'은 공교육으로 제도화된 지배적 교육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는 시민의 자율적 교육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시민교육은 직업주의화 된 공교육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는 지식, 특히 정치·경제·사회·역사 등에 관련된 갈등적 지식을 교육해야 한다.

발표자는 '시민교육'이 하나의 독립적인 교육적 실천의 영역으로 정립되기 위해서 공교육 내에서의 윤리교육, 혹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선전과 구분되는 어떤 내용적, 방법론적 특성을 갖춰야 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질문은 현재 보편적인 공공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하는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현장에서 종종 직면하게 되는 고민거리를 잘 짚어내고 있다. 발표자가 제안한 대안적 시민교육은 두 가지 정의상의 핵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공교육의 '직업주의와 차별화하여, 그것이 충족시킬 수 없는 대중의 지적 욕구에 호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차별화하여, '갈등적'인 역사적 지식과 사회과학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 있는 비판과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아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추가로 들었으면 한다.

첫째, 기존 시민교육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이 논리적으로 상응하지 않는다. 시민교육의 콘텐츠와 방법론, 구체적인 시민교육의 목표, 현장참여만이 아닌 대안적 방법론, 비계몽적인 교육철학과 교육자-피교육자 관계, 시민교육을 정치운동의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의 문제 등을 보다 충분히 규명해주셨으면 한다.

둘째, 발표자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시민교육의 개념 역시 명료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 공교육의 직업주의와 구분되는 대중의 지적 욕구란 무엇인가? 시민교육이 그것을 채운다 했을 때, 그것은 공교육에서 행해지는 비직업주의적 교육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공교육, 시민단체, 공공기관의 시민교육과 구분되는 '대안 시민교육'의 실체는 무엇인가? 대안적 시민교육이 전달해야 한다는 '갈등적 지식'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전달하는 갈등적 지식과 어떻게 다른가?

나아가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현실상황에 근접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민교육에 대한 세밀한 이해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발표자께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모든 종류의 시민교육이 정체되어 왔다고 봤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필자가 언급한 참여연대 사례의 경우 2002년 참여사회 아카데미가 종료되었다고 했는데,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정기적으로 시민교육과 교사연수를 실시해왔고 특히 2009년에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가 독립적 부서로 확대 설립되어 10여 개 주제영역에 강좌시리즈를 개설하고 매 학기 수백 명의 참여자에게 시민교육을 실시해왔다. YMCA, 홍사단, 경실련, 환경연합 등 많은 시민단체들도 시민교육을 확대해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시민교육 교사연수, 시민교육 활동가 아카데미, 민주시민교육 연수 등의 여러 부문으로 확장해왔다. 이러한 기존의 시민교육이 한계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지점을 정확히 짚어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계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현재 시민교육의 교육주체와 활동가, 참여자들의 문제인식을 조사하는 작업이 앞으로 보완되면 좋을 것 같다.

## 제2부

---

시민교육의  
환경과 현실  
: 시민교육  
생태계 모색

# 시민교육의 과거를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한다

한승희 /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오늘 본인이 이 발제를 맡게 된 이유는 2002년 민주화기념사업회가 의뢰한 연구보고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쟁점에 참여한 것과 함께 2009년부터 동 사업회의 [시민교육의 편집위원회 일도 거들게 되면서 맺은 인연 때문 일 것이다. 두 경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겠지만, 발제자는 운 좋게도 우리나라 시민교육의 가장 뛰어난 실천가 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으며, 그 안에서 본인의 역할은 대체로 이들 시민단체활동가들의 생각을 교육학자적 눈으로 정리해내는 것이었다.

우리가 보기에 시민운동과 시민교육은 같은 배를 타고 있었고, 시민교육의 목적은 시민운동이 확보한 시민사회 공간의 내면을 틈실히 다지는 것이었다. 즉, 표면적으로는 나름의 부피와 무게감을 가지기 시작한 시민사회가 실제로는 그 내면에서 텅 빈 공허함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런 시민사회의 내실을 기하는 것, 즉, 시민사회의 공론장적 정체성과 실천적 담론과 문화를 채워가면서 동시에 국가 및 시장에 대하여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지적, 문화적 토대를 획득하도록 하는 역할을 교육에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 시민사회의 내면을 채우는 시민교육

물론, 여기에서 시민운동은 온갖 종류의 신사회운동, 즉 문화운동, 환경운동, 예술운동, 교양운동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정치운동적 성격이 가장 적었던 건 시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이한 지형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시민권력으로 표방되던 몇몇 시민단체들이 국가와 대척점을 형성하면서 힘을 발휘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오히려 시민사회는 국가의 전횡적 독점권력을 견제하면서 틈새를 벌리고, 그 틈새 안에서 신사회운동의 여러 가지 요소들, 예컨대 환경, 경제정의, 노동, 교육, 성 정체성 등의 새로운 차원들의 축을 세워가고 있었다.

마치 풍선과 같은 것이었다. 시민운동이 풍선의 껍질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시민교육은 그 안을 채우는 공기와 같은 것이었다. 시민운동이 시민사회의 외적 경계를 확장하는 과정이었다면, 시민교육은 그 존재를 정교화하고, 역사적 기억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그 실체를 새로운 문화적 색깔로 칠하는 과정이었다. 획득된 시민사회의 광장에 시민의 생각과 삶을 채워가는 과정이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 점에서의 시민교육은 단순히 민주주의의 스킴을 전수하는 교실의 차원을 넘어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를 배우는 시민학습의 공간이었다. 결코 어느 한 개인을 교실에 집어 넣었다가 빼내면 시민으로 변모하는 마술이 아니었다. 생활이고, 경험이고, 성찰이었으며, 그래

서 더더욱 그 생활, 경험, 성찰의 모수적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간파할 필요가 있었다.

사실, 시민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은 '시민의 사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시민이 된다. 시민은 개개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집합성의 존재적 특성을 칭하는 말이다. 뿔뿔이 흩어진 시민은 더 이상 시민이 아니며, 내 방안에 홀로 앉아 있는 나는 더 이상 시민일 필요가 없다. 요컨대, 시민은 시민사회라는 관계적 맥락 위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시민교육은 시민사회의 맥락을 읽어내는 일에서 시작하고 그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을 읽어내는 문해력이었다. 프레이리를 비롯한 수많은 비평가들이 이미 보여준 것처럼, 교육이 서 있는 맥락의 구체성을 떠나서 어떤 한 개인을 원칙론적인 시민으로 각성시키는 일은 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현실성도 없어 보였다. 우리의 질문은 '시민이란 무엇인가'에 불박혀 있었으며, 그 질문은 그들의 현존재성을 확인시켜주는 시민사회라는 맥락을 떠나 이해되지 않았다.

또한, 국민과 시민은 다른 존재라고 믿었다.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의무와 같은 것이라면, 시민은 태어난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획득하는 어떤 것이다.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그렇다. 국민교육과 시민교육은 교육의 제공자부터 다르며, 국민교육이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독점되는 교육이라면 (그래서 교과서도 교육부의 심의를 받게 된다), 시민교육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수행하는 교육으로 이해했다.

국민은 처음부터 국가적 존재이며 공적 존재이다. 하지만 시민이란 존재적으로는 사적 관계 안에 놓여 있으면서 그가 바라보는 것은 공론장의 공공 경험인 독특한 이중성을 가진다. 그래서 국가의 극단적 공공성과 시장의 극단적 개인성을 희안한 방식으로 엮어주는 매개가 되는지 모른다. 시민사회란 사적인 시각에서 포착된 공공성의 집합체이며, 그 실체는 권력체계, 생산체계 등과 구분되는 생활세계의 '삶'이다. 거룩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가 아닌, 가장 현실적 이익에 민감한 사적 존재로서의 '내'가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연대와 공론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향하도록 논리적 지형 위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시민교육의 가장 큰 매력이었다.

시민교육에 대한 나의 흥미는 이 지점에서 출발했다. 사적 이기적 개인이지만 공적 연대를 지향한다는 모순, 생활세계에 몸담고 있지만 권력체계와 생산체계를 넘나드는 모순, 자신의 욕구에서 출발하지만 천박한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고 교양화된 철학과 이념성을 지향한다는 모순. 이런 모순 사이를 넘나드는 일은 부단한 학습과 연습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다시 되돌아 보면, 발제자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쟁점 보고서를 제출했던 2000대 초반의 상황 자체가 국가-시장의 틈바구니에서 시민사회의 자생성이 치열하게 실험되던 때였다. 이런 지형 아래에서 시민교육도 그렇게 이해되었고 설명되었다. (물론 반드시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시민교육이란 '시민사회의 형성과 진화라는 맥락 위에서 자신의 삶을 읽고 쓰는 (read and write) 활동'이었던 셈이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다.

물론 시민사회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은 아니다. 각종 이익집단과 사적 결사체들이 시민사회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어찌면 사적 이익에 민감한 이기적 집단의 집합체일 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동부채의 꼭 막힌 정부를 가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국가는 결코 시민교육의 주체일 수 없었다.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이 보여주는 것처럼, 형식민주주의마저 제대로 지켜줄 수 없었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의 상황에서 더더욱 이러한 전제는 여전히 현실성을 발휘한다고 믿었다.

아래 글은 2009년 [시민교육을 창간준비호를 위해 썼던 글이다. 2008년 '명박산성'을 보면서 시민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았다.

[시민교육] 창간 권두언: 시민학습의 지평을 넓으며 (한승희)  
항상 발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원치 않게 한 걸음 물러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학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혜젤은 역사가 자기의식의 현현을 통하여  
스스로를 교육하면서 절대지(絶對知)로 진화해 간다고 말하였습니다.  
생물학적 진화가 자기조직화 생태시스템을 가동시키면서  
진화의 결과를 안정화시켜 가는 것처럼,  
역사의 교훈들도 성찰과 학습을 통해  
우리의 생활과 마음 속에 동지를 틔웁니다.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의 진보도  
사회적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장치를 통하여  
안정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시민학습의 과정이며 역할입니다.

시민학습을 통해 현대사가 우리에게 주었던  
역사의식과 주권적 참여구조는 우리 사회 구석 구석에  
세포기억(cell memory)으로 각인됩니다.

민주, 평화, 자유, 정의, 평등, 사랑의 가치들은  
역사와 사회의 사건들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만,  
그 질풍이 지나간 후  
조용한 성찰과 의미화를 통해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게 바로 시민학습의 과정이며 역할입니다.  
시민학습이 뒤따르지 않는 역사적 경험은  
단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역사의 시계추는 방향을 잃습니다.

학습에 의해 안정화되지 않은 경험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단지 우리는 기억상실증 환자로 남을 뿐입니다.

촛불을 드는 이유는  
단지 목소리를 시각화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어  
마음 한구석에 그저 버려져 있던 과거 기억의 편린들을 찾아,  
새로운 의미구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건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체계적 절차와 사고,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민학습이라고 부릅니다.

... (중략) ...

## 시민은 교육에 의해 옷 입혀진다

시민은 교육에 의해 옷 입혀진다. 그리고 한 시대의 교육은 그런 시민들의 집합에 의해 경계지워진다. 중세말기와 근대초기에 구귀족과 시민의 차이는 교육과 능력에 있었다. '시민으로 길러지기 위한' 교육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민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문해력과 교양성은 항상 교육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그들을 '중간계급(middle class)'로 불렀던 당시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육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보통선거권을 획득하고 '시민'으로 불리기 시작한 현대국가에서 교육은 비로소 이들 모두에게 봉사하는 사회적 장치가 되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시민과 교육은 그 존재성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증해주는 재귀 규정성 같은 것이었다. 시민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하며, 반대로 교육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달해왔는지를 보려면 시민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은 그 정치적 참정권의 차원 이상을 의미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은 (1) 자유인이었으며, (2) 사유재산을 보장받았고, (3)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이와 함께, 그리이스, 로마, 근대 유럽, 그리고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점, 즉 시민이 (4) 교육된 존재였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민이 교육받은 존재였다는 점 이외에 어떤 다른 특별한 시민교육이 별도로 존재한 건 아니었다. 교육과 계몽을 통해서 시민은 그들의 권리를 청원했고, 획득했고, 절대권력과 싸웠다. 그것은 오늘날 교육이 능력사회 및 사회평등화의 신화를 획득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교육으로 말미암아 시민은 시민의 자격과 정체성을 획득했으며, 누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경계가 곧 시민계급의 경계를 말해주었다. 또한 거꾸로 보면, 이렇게 형성된 시민의 경계가 교육의 일반적 경계를 확장하면서 스스로 공교육으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일조하였

다. 즉, 시민계급이 정치적 주도권을 획득하면서 그들의 경계를 보장해주었던 보통교육과 공교육의 개념을 제도화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시민이라는 의미의 civicus는 문명, 즉 civilization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시민은 문명인이며, 문명을 이끌어낸 주인공들이다. 문명의 성장과 자기현현화 과정에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축이며 핵심이다. 인류 문명의 발전과정에서 시민집단은 그들만의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시민을 형성하는 과정을 '파이데이아'라고 불렀다. 파이데이아는 당시의 인문교육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교육은 시민들만 받았다. 시민의 경계는 교육의 경계였고, 교육의 경계는 곧 시민의 경계였다. 이후 로마시민들도 '후마니타스'라고 불리는 교육의 과정을 발달시켰다. 요컨대, 도시국가에서의 교육은 인문교육이었고, 인문교육이 곧 시민교육이었던 셈이다.

중세 중기 이후 대학의 탄생과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와 과학혁명 등에서도 교육과 시민의 관계는 서로 뗄 수 없다. 13세기에 이르러 확산되기 시작한 초등학교는 대개 상인들의 읽기와 산술 능력을 위해 보급되었으며, 이러한 기류 안에서 순전히 새롭게 등장하는 시민계층을 위한 세속학교들이 성당학교로부터 분리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1세기 이후 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 등의 주요 대도시에는 대학이 있었고, 주로 비종교기반 전문가들 예컨대 법률가, 의사 등을 길러냈다. 16세기를 넘어서면서 주로 신흥귀족 자제들 뿐만 아니라 상당 수의 농민, 상인, 공인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유럽의 시민혁명 이후 교육은 혈통귀족에 대하여 시민계층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줌과 동시에 노동계급과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능력주의'의 표상이 되었다.

요컨대, 시민이 "교육된 존재"였다는 점, 그리고 교육을 통해 자신을 차별화하는 존재였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비단 그들의 자식을 잘 가르쳐서 지위계승을 했거나, 혹은 기술도구적 지식을 통해 상업계급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등의 실용적 차원에서만 고찰될 일은 아니다. '시민'은 포괄적인 문명사적 차원에서 볼 때, 문명발달을 선도한 세력이었으며, 그 실질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사회관과 세계관의 세력화를 주도한 집단이었다. 고대에서는 '수사학'의 실질적 지배자였고, 중세에는 르네상스와 기술문명을 선도한 집단이었을 뿐더러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질서와 제도를 실험하였다. 근대의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근대 부르주아 국가론과 시민사회의 형성 등은 상업자본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현대문명은 이렇게 확장된 시민 개념이 보편적 교육을 기반으로 대중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나서는 것을 기반으로 가능했다.

오늘날, 시민은 국민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고, 이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시민의 자격도 이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을 시민으로 불러도 좋을까? 사실 그렇지 않다. 한 사람의 자율적 성인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시민으로서의 제반 권리가 부정된다. 선거권은 오직 성인에게 부여된다. 상법이나 민법 등에서도 미성년자를 주체로 취급하지 않는다. 형법에서도 미성년자는 성인과 다르게 취급한다. 미성년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으며 군대에 갈 수도 없다. 말하자면 미성년자는 국민이지만 시민은 아닌 셈이다. 역사적으로 시민의 자격은 자유인, 유산자, 남성, 백인, 가장 등으로 제한적이었지만, 이제 오직 연령만이 유일하게 남아 시민의 경계를 설정한다.

그런데 미성년과 성년의 차이는 인간적 성숙과 자율성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교육이다. 말하자면, 미성년자는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성년자는 그 과정을 이미 마쳤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선거권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지적 능력과 판단력'을 학습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여겼고, 19세가 될 때까지 선거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지적 능력과 판단력을 교육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결국 시민의 마지막 조건은 교육을 받았는가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으로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이 요구하는 능력조차 없다면 그는 지적 차원에서 성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아직까지 시민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일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높은 교양과 소통에 의해 성숙한다고 볼 때, 국민의 일반교육수준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기초교육을 결여한 채 민주주의 절차와 방법론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시민교육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기성세대와 반쪽 시민사회

연령과 교육제도를 기준으로 보면, 시민교육은 (1) 예비시민을 위한 초기교육(주로 학교가 담당)과 (2) 시민을 위한 계속교육(주로 성인교육이 담당)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교육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시민교육 초기교육은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국민교육'적 성격을 띠 가능성이 높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비정부단체나 기관이 담당하는 '시민교육'적 성격을 띠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국민교육과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시민교육은 그 내용적으로 서로 유사할 수 있으나 결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로 예비시민을 위한 초기교육이 국민교육의 형태로 공교육 장면에서 이루어진다면, 시민을 위한 계속교육은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국민교육이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지침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시민교육은 다양한 시민세력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민주주의는 선한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며,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보를 분석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도 많다. 교육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로 나타나며, 그것은 민주주의의 질적 차이로 결과된다. 그런데, 과연 한국의 성인들은 성숙된 민주주의를 수행할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는가? 혹은 미처 받지 못했다면 이후의 계속교육의 기회는 보장되고 있는가? 답은 '아니다'이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가난의 시기를 살아온 기성세대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 왔으며, 이것은 곧 민주주의를 정당하게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민적 능력을 개발할 권리를 무시당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교육의 결핍을 그대로 무시한 상태로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성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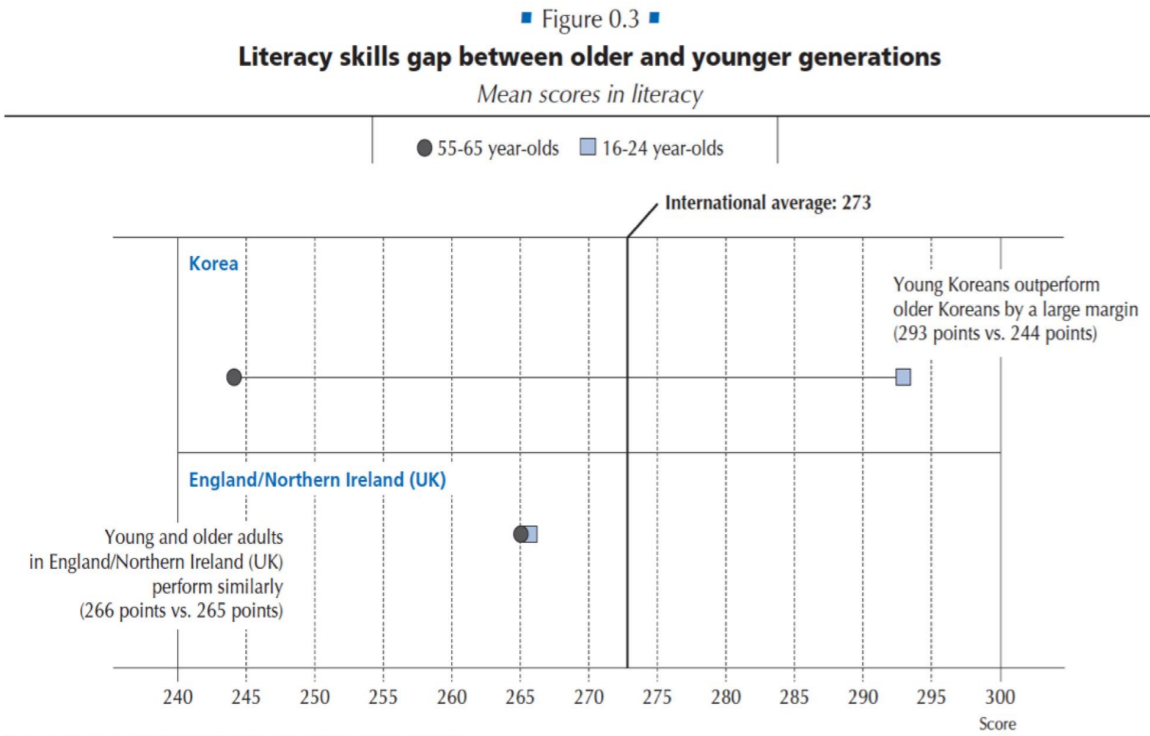
여기에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이 있다. 얼마전 미디어들은 일제히 OECD가 발표한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결과를 보도했다. 즉,

"우리나라 성인의 언어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이지만 수리력과 컴퓨터 활용능력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OECD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청년층으로 한정하면 우리나라는 세 능력 모두 상위권이고 특히 컴퓨터 활용능력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고로 나타나는 등 연령별 격차가 컸다(연합뉴스, 2013.10.8).

세계 최우수국가로서의 자부심을 주던 PISA 조사와는 달리 PIAAC 조사에서는 성인들의 능력이 참가국 중 중



하위권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386세대 이후의 세대가 뜨거운 교육열을 매개로 학교팽창의 덕을 입었던 것과 대비해서 그 이전 세대는 교육팽창의 그늘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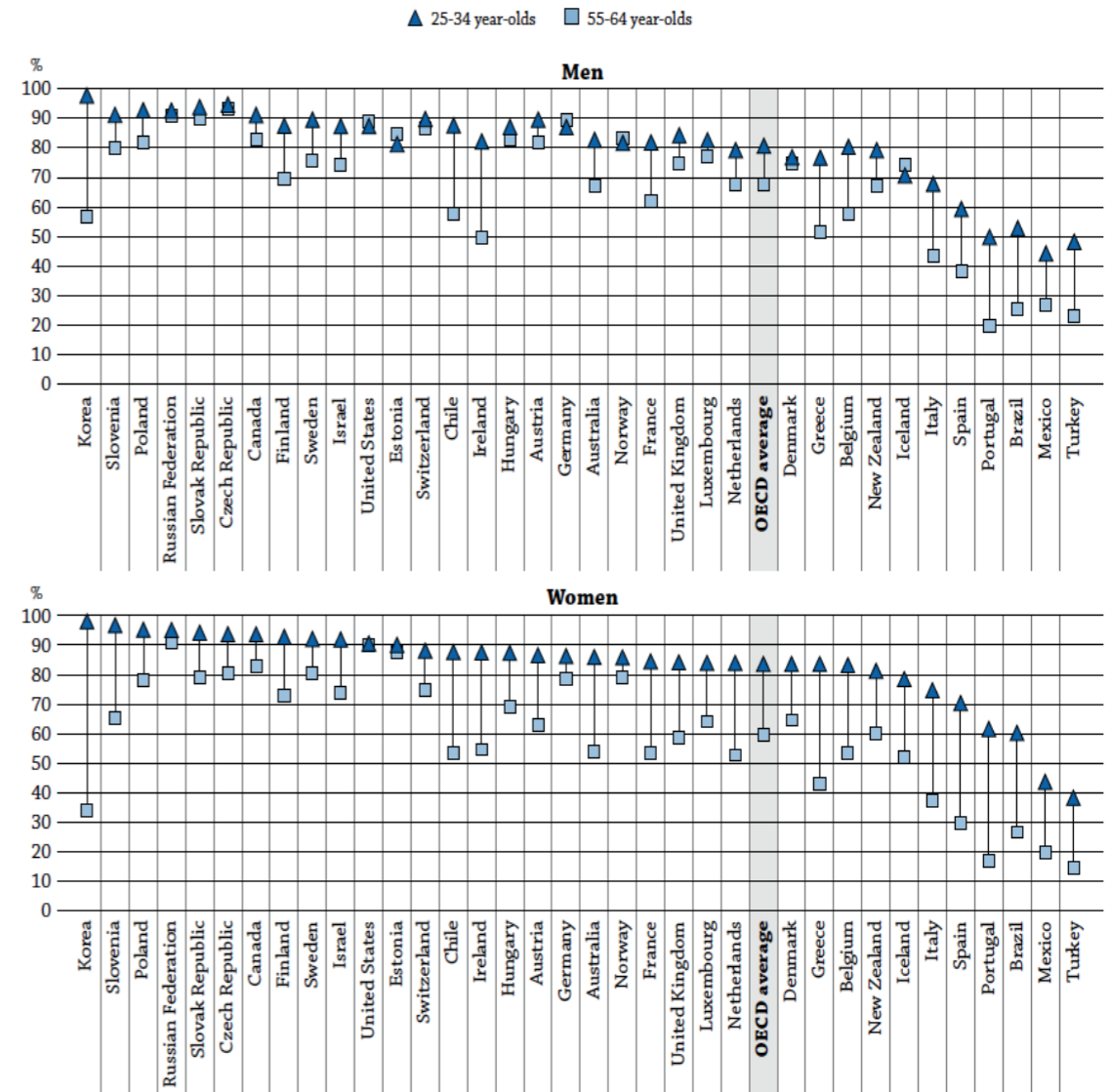
Source: Survey of Adult Skills (PIAAC) (2012), Table A3.1(L).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03671>

이 그림은 PIAAC 조사를 통해 드러난 세대간의 능력 차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과 영국은 극과 극의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국은 55-64세 및 16-24세 간의 능력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그 차이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다). 이런 격차는 세대간 갈등과 불소통으로 나타나는 한편, 결국 시민사회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었다.

### 한국 세대간 갈등은 교육격차 때문이다

소위 '기성세대'로 불리는 50세 이상 한국의 성인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살아왔다는 점은 OECD등의 국제비교를 통해 잘 드러난다. OECD가 매년 발간하는 Education At a Glance (2013)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인구 비율을 세대로 국제비교하고 있는데, 특히 세계 여러 나라의 청년층(25-34세, 세모)와 장년층(55-64세, 네모) 사이의 교육격차 가운데 한국을 능가할 나라는 없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Chart A1.4. Population that has attained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 (2011)  
Percentage, by age group and gender



Note: These calculations exclude ISCED 3C short programmes.  
Countries are ranked in descending order of the attainment rates of 25-34 year-old women who have attained at least upper secondary education.  
Source: OECD, Table A1.2b, available on line. See Annex 3 for notes ([www.oecd.org/edu/eag.htm](http://www.oecd.org/edu/eag.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846272>

이 격차는 <한국의 사회지표 2012>를 통해 보다 상세히 드러난다. 이 자료는 연령대별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가 1980년부터 5년 간격을 가지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년수란 학교교육을 받은 기간을 말하는데, 예컨대 교육년수 6년은 초등학교 졸업, 12년은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성 및 연령별 평균 교육년수 (한국의 사회지표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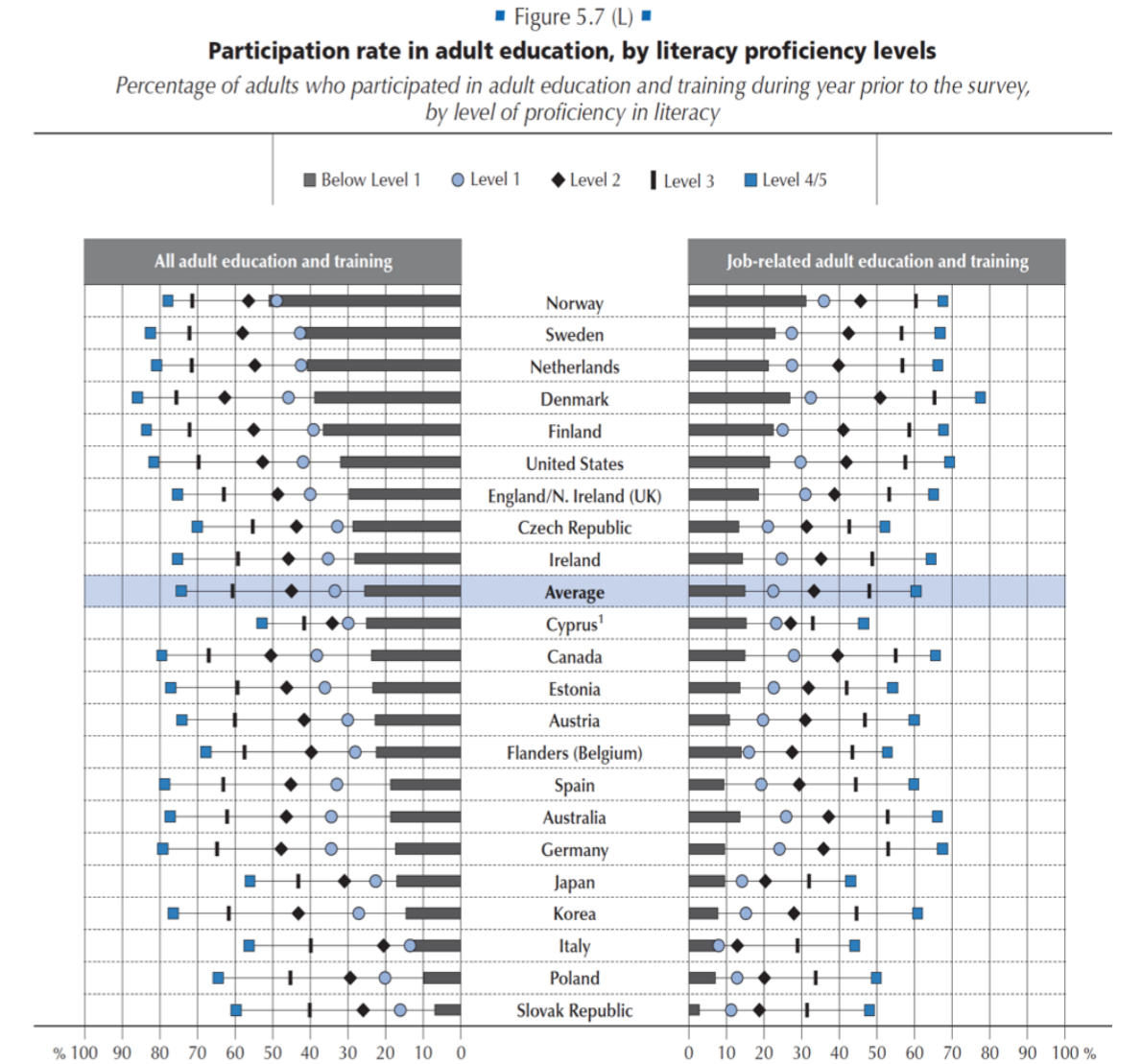
	전 체	6-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 세 이상
1980	7.6	6.5	9.9	9.2	7.5	3.5
1985	8.6	6.7	11.0	10.1	8.5	4.5
1990	9.5	7.7	12.0	11.1	9.5	5.5
1995	10.3	7.0	12.7	12.2	10.5	6.5
2000	10.5	5.7	13.1	12.9	11.2	7.2
2005	11.2	4.2	13.8	13.6	12.3	8.2
2010	11.6	4.8	14.1	14.0	13.0	9.1
남 자						
1980	8.7	6.6	10.3	10.2	9.0	5.0
1985	9.7	6.7	11.3	10.9	9.9	6.5
1990	10.6	7.7	12.3	11.8	10.6	7.6
1995	11.2	6.7	12.7	12.8	11.5	8.6
2000	11.5	5.3	13.0	13.2	12.0	9.2
2005	12.1	4.0	13.6	13.8	12.9	10.0
2010	12.4	5.0	14.0	14.1	13.4	10.6
여 자						
1980	6.6	6.5	9.4	8.1	5.9	2.2
1985	7.6	6.7	10.6	9.3	7.1	3.1
1990	8.6	7.8	11.8	10.4	8.3	3.9
1995	9.4	7.2	12.7	11.6	9.6	4.8
2000	9.8	6.0	13.2	12.5	10.5	5.5
2005	10.5	4.3	13.9	13.3	11.7	6.7
2010	10.9	4.5	14.3	13.9	12.6	7.7

이 표에 의하면, 2010년 현재 50세 이상 인구의 평균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정도 (9.1년)이다. 이를 남녀별로 분리해 보면, 남자의 경우 10학년 정도인데 반해서 여자는 7.7년, 즉 의무교육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정부가 나서서 이 상황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적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항상 한국 선거 판세를 가르는 세대갈등의 경계로서의 50대 이하와 그 이상 사이의 교육격차가 구조적으로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2010년 기준으로 보면, 40-49세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가 13년인데 반해 50세 이상은 9.1년에 불과하다. 여성의 경우는 더 심해지는데, 즉, 12.6년 대 7.7년의 차이로 벌어진다.

조심스러운 판단이지만,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지형의 세대간 격차 및 연령대 별 당 지지도의 차이는 어쩌면 이런 교육환경과 혜택의 차이에 따른 사고와 문화의 차이로 풀이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실, 이 데이터를 보는 나의 심경은 마치 산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거대한 낭떠러지를 발견할 때의 마음과 같았다. 소통 가능성을 떠

나서 절벽을 만난 느낌이었다. 한 지붕아래 살지만 대화가 불가능해보인다. 이 두 세대간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우선 무너진 한쪽 축을 쌓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이 논의될 때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교육기회를 누리지 못한 기성세대가 평생학습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교육이 필요한 기초능력 미달 집단의 경우 성인 평생학습 참여에 있어서도 여전히 거의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위 그림은 각 문해력 수준에 따라 성인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을 국제간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해력이 높은 사람들 대부분 (우리나라의 경우 80% 가깝게)이 평상시에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문해력이 낮을수록 그 참여 비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우리나라의 경우 레벨1 이하의 인구의 경우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인구는 15% 정도로 떨어진다

이다. 최근 지자체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지는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개인적 무관심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표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은 평생학습참여율 자체가 높은 것과 함께, 문해력이 떨어지는 집단의 평생학습참여율도 함께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존재하는 능력차간 학습디바이드 현상이 이들 국가에서는 매우 완화되어 나타난다. 공교롭게도 이들 상위권 국가들이 모두 북유럽 시민주의 국가들로서, 참여지향적 민주주의와 끝장토론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은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의 학습양식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복하지만, 대한민국의 장년층 노년층은 일제지배, 전쟁, 가난과 노동 등의 틈바구니에서 교육기회를 누리지 못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다. 시민참여와 민주주의의 대표자격인 스웨덴이 1963년에 의무교육 기간을 9년으로 확장하자마자 곧이어 몇 년 뒤 그 기회를 가지지 못한 성인들을 위한 성인고등학교를 제도화한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교양과 지성에 기대어 성장한다. 민주주의의 질은 시민교양의 수준에 비례한다. 시민교육의 핵심적인 문제는 절차민주주의에 대한 좁은 이해 수준을 넘어서 시민교양의 폭을 넓히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문제는 저학력 저문해 성인들의 '총학습량 증가'이며, 이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시민교육이 우선 해야 할 일이다.

##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거는 엄청난 기대

최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간한 [민주청서21] 보고서를 보면,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방대한 분량으로 민주 시민교육에 대한 분석과 차세대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러 단계와 차원에서 시민교육을 개념화하고 있는데, 예컨대 다음과 같은 설명이 발견된다.

*민주시민교육이란, 1) 삶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 공적 관심사가 된 각종 문제들에 관하여, 2)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과 정체성과 책임성을 개발함으로써, 3) 이 나라와 시민들이 그 문제들에 대해 훌륭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더욱 나은 정책을 기획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4)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는 시민교육활동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당면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논변하며, 공동의 해결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연대할 줄 아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을 끊임없이 형성시켜야 할 자유 사회와 민주 국가의 책무이다 (민주청서21, 2009)*

여기에 제시된 표현들 가운데, 예컨대 '모든 분야', '큰 영향', '공적 관심사', '시민의 능력과 정체성과 책임성', '훌륭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혹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통합에 기여' 등등은 사실 구체적인 교육활동의

차원을 넘어선 매우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개념들이다. 말하자면 한 두 시간의 강연이나 한 학기 교과목, 혹은 심지어 몇 년에 걸친 전일제 교육에서조차 달성할 수 있을지가 미심쩍은 크고 광대한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원칙적으로 이것이 시민교육이며, 이 정도의 담대함을 담아낼 때 비로소 우리가 '시민교육'이라는 타이틀을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이고, 튼튼한 교양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기법 중심의 지식교육이나 소통훈련 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한편, 동일한 보고서에서 인용되어 있는 또 다른 개념에 주목해보자.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가 유럽 24개국을 상대로 "민주주의 및 민주주의적 열망이 있는 사회의 시민으로서 젊은이들이 그들의 역할을 준비하는 방식"에 관한 조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는 시민교육 개념은 다음과 같다.

*시민교육은 1) 학문분과들을 관통하는 중요한 내용에 토대를 두어야 하며 (based on important content that crosses disciplines), 2) 참여적이어야 하고 (participatory), 3) 쌍방향적이며 (interactive), 4) 생활과 관계되고 (related to life), 5) 권위주의적이지 않는 환경에서 실행되어야 하며(conducted in a non-authoritarian environment), 6) 사회적 다양성의 도전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cognizant of the challenges of the social diversity), 7) 학교뿐만 아니라 부모, 지방자치단체 및 비정부기구들과 공조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constructed with the parents, the community,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school.)"*  
(민주청서21, 2009)

이 정의는 우선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역량을 리스트하는 방식 대신 교육이 만족시켜야 하는 과정적 특성들에 주목한다. 하지만 첫 번째 항목, 즉 "학문분과들을 관통하는 중요한 내용"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교육방법이나 기법의 차원을 넘어 지성의 다양한 형식들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못박고 있다. 다만, 동일한 학문적 지성을 다루더라도 그것을 단순한 강의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교수방법적 원칙들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예컨대 참여적, 쌍방향적, 생활관계적, 비권위주의적 등의 표현이 그것이다. 또한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맥락이 상아탑 안이 아닌 사회적 다양성을 끌어안은 학교, 가정, 지자체, 각종 사회단체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요컨대, 시민교육의 교육과정은 어떤 제한된 시수의 교과목으로 담아내기에는 지나치게 무겁고 깊을 뿐더러 그 내용 자체가 사회적 발달과 문명적 진화를 매개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민교육을 하나의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만드는 일은 어쩌면 시민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시민교육을 하나의 독립된 전문 분야로 보는 일도 사실 조심스럽다. 시민교육은 '교육' 그 자체이며, 교육은 그 자체가 바로 시민을 양성하는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지금 내 책상에는 시민교육 관련 교과서가 한 권 놓여있다. <호모 키비쿠스>라는 책인데, 그 안에는 시민교육의 내용 영역이라고 할 만한 주제들이 담겨 있다. 예컨대, 선거와 정치참여, 여성성과 양성평등, 인터넷 시대, 신뢰사회와 부패, 공동체 의식과 자유, 자본주의 경제와 경제교육, 미디어와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다문화 교육, 세계화와 대안세계화, 환경생태계 위기와 시민 리더십, 기업시민과 윤리적 소비 등등... 거의 사회과학 전체를 옮겨 놓은 듯한 내용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권의 책 안에 축약해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

에 가깝다. 더구나 이런 쟁론적 사안들을 살아 생활하는 한 사람의 사적 시민의 눈으로 해체해서 이해하고 자율적인 성찰 안으로 끌어들이고, 나아가 행동의 지침으로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의 조급함'을 우선 넘어서야 한다.

갈길은 멀다. 시민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꿈은 너무도 높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기로 하자. 이를 위해서는 기초교육의 토대가 중요하며, 평생학습의 총량이 중요하다. 시민교육은 시민적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일테고, 그 시민적 능력이란 고등지성과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엄청난 일을 '시민교육'이라는 한계지워진 장 안에 구속해 놓는다면 교육자나 학습자나 모두 그 중압감과 무게에 눌려 숨이 막힐 것이다. 전지전능한 시민의 능력을 끝없이 나열하고, 그것을 모두 좁은 의미의 시민교육이 담당해야 할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인간의 학습은 삶의 일 부분이며, 이 두 가지는 사실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 중 얼마나 학교에서 배웠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어디까지가 시민교육이고 어디까지가 시민생활인지 분명하지 않다.

## 시민사회라는 사회생태계와 시민교육

누군가 운하를 파기 시작한다. 그 사람의 눈에는 그저 운하만 보인다. 그 위로 배가 다니고 멋진 신세계가 펼쳐지는 모습만 보인다. 하지만 강물은 자연 생태계의 한 부분이고, 강물에 생긴 변화는 반드시 생태계의 순환 안에서 또 다른 변화로 돌아온다. 시스템을 볼 필요가 있다.

교육을 교실에서의 제한적 활동으로만 보는 사람은 그 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시스템을 간과하거나 과소 평가하기 쉽다. 그런 교사의 눈에는 학생의 삶, 그를 둘러싼 삶의 조건, 희망과 좌절, 사회적 변화와 비전 등은 보이지 않고, 다만 자신이 가르치는 것만 보이고, 그걸 받아 적는 학생들만 예뻐 보인다. 하지만 교육도 하나의 커다란 사회생태계의 일 부분이라면, 교육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생긴 파동은 강물의 변화처럼 또 다른 파장을 인간의 삶에 미치게 된다. 조급증을 가진 교사들은 인간을 학교라는 울타리에 가둬놓고 그 마음에 운하를 파낸다. 그 업보가 어떻게 되돌아올지에 대해 진정한 교육자는 긴장하고 주목해야 한다.

교육현상을 일종의 생태계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교육생태계 (때로는 학습생태계라고도 불리는데)란 교육이 이루어지는 전체적 양태를 생명계 혹은 유기적 생태계에 비유하여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이 때 각각의 요소들은 개별적인 차원을 넘어 관계와 맥락, 그리고 체계라는 관점에서 재이해된다. 이때 체계는 유기적 생명계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스스로가 자기조직화를 통한 새로운 창발성을 창출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전제된다.

우리 사회는 하나의 거대 생태계이다. 그 안에 국가가 있고 시장이 있으며 시민사회가 있다. 시민사회는 국가, 시장과의 조율 안에서 자기 존재성을 드러낸다. 시민교육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사회라는 관점에서 그 생태적 특성을 등에 업고 수행되는 시민학습의 총체이다. 어쩌면, 시민교육은 개개인이 아닌 시민사회 자체를 교양화하는 과정일지 모른다.

##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나는 우리나라 시민교육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시민과 교육은 상보적 관계이다. 역사적으로 시민의 정체성은 그들이 받는 교육의 총체성을 통해 증명되었다. 시민이 목적적이고 교육이 수단인 것이 아니라, 두 가지는 모두 서로를 규정하는 목적이자 수단이었다. 시민과 교육은 서로 논리적 관계로 맺어져왔다.
2. 시민교육과 국민교육은 동일하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사회적 지형 안에서는 특별히 '시민사회'라는 지형은 '국가' 및 '시장'에 대해 대자적 관계를 설정하면서 서로 조응한다. 시민교육은 시민사회의 내용을 채워가는 지적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3. 시민사회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은 그에 준하는 충분한 교육권을 누려야 한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그 사회의 평균적 교육수준의 저하로 발목잡힐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사회의 방치된 교육, 특히 성인교육에 대한 무관심의 문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4. 한 사회의 학습의 총량, 특히 인문학의 총량을 늘리는 일은 시민교육의 출발점이다. 시민교육의 문제는 특정 지식이나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민의 학습총량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 적합성을 따지기에 너무도 모자랄 정도로 '반학습적 사회'에 살고 있다. 시민사회는 학습사회일 수밖에 없으며, 학습사회적 특성을 결여한 시민사회는 이기적 경쟁주의로 퇴화할 수밖에 없다.
5. 시민교육에 기대되는 학습효과, 즉 시민역량은 언제나 교육자를 숨막히게 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 하지만, 전지전능한 시민의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개별 프로그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점에서, 시민교육의 투입과 산출은 강좌, 프로그램, 학교 등의 개별 단위를 넘어선 시민교육생태계의 총량적 흐름 혹은 총체적 양태에 비추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개별 프로그램과 시민교육생태계의 총체적 흐름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의 모색에 있다.
6. 이 점에 있어서도 '생태적 관점'은 우리의 조급증을 조금은 해소해 준다. 강물은 자기 목적지를 걱정하지 않고 흘러간다. 빗물은 어디로 떨어질 지 걱정하지 않고 내린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복잡계적 생태계 안에서 현재를 작동시키고, 나름의 창발성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이루어낸다. 시민사회는 하나의 거대 생태계이며, 그 안에는 온갖 기관과 단체들이 갖가지 목적을 사이에 두고 연대/경쟁한다. 어떻게 보면 그 복잡성 자체가 시민사회의 성숙성을 보장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시민사회는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공론들만이 서로의 정당성을 경합하는 일종의 쟁송의 장'같은 것이다. 공론들이 정당하게 쟁송할 수 있는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예컨대 스웨덴의 스터디서클의 주체들은 각종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이다. 각 스터디서클 본부들은 각기 다른 이익과 관점, 정치적 견해등을 대변하며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민주주의적 교육과정'이라는 스터디서클의 현장 안에서 상당 부분 순화되고 정화된 상태로 표현된다.

또한 시민사회는 다층위적 다면적 실체이다. 그 안에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노동, 환경, 먹거리, 건강, 여성, 취미, 생활문화, 교육 등 다방면의 시민문화적 요소들이 각자 자기 위치를 점유한다. 시민사회는 단지 정치적 의미에서의 공론장 뿐만 아니라 시민이 추구하는 공동적인 삶의 양식을 생산하고 또한 확장하는데 필요한 전방위적 조건들을 포함한다. '한 시민으로서 건강하고 정의롭게 산다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엇이든지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며, 시민교육의 내용과 형식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 구태여 표준화하거나 규격화할 일도 아니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 난잡해 보이는 것, 즉 다양한 주체와 방법과 계기와 목적과 형태들이 난무하는 것을 걱정스레 볼 일도 아니다. '무엇이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궁극적 질문 위에서 각자 교육주체들이 열심히 뛰면서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일이다.

나는 시민교육을 국가-시민사회라는 생태적 양상과 조응하며 일어나는 교육적 활동이라고 보았다. 그 안에 따로 '시민교육'이라는 좁은 영역이 있는 것이라기보다, 시민이 있고, 시민사회가 형성되며, 그 안에 큰 의미의 교육이 작동한다. 생각해 보면, 초중등 학교교육이 다루는 모든 내용이 시민교육의 내용이며, 성인들이 참여하는 인문교양/문화예술교육이 모두 시민교육이다. 이들이 거대한 교육생태계를 구성하면서 작동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시민교육, 즉 정치적 주권자로서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다루는 구체적 교육활동이 필요하지만, 그 효과는 결국 확장된 의미에서의 국가, 시민사회, 교육의 삼자적 관계가 구성하는 생태적 차원을 전제로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교육의 가장 구체적 맥락에서 드리고 싶은 조언 몇 가지를 첨언하면서 이 발제를 마치고 한다. 지난 몇 번의 평생교육통계들을 드러다보면, 역설적이게도, 시민단체들이 가장 시민교육을 외면하고 있다. 현재 평생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1) 학력보완교육, 2) 문해교육, 3) 인문교양교육, 4) 문화예술교육, 5) 시민참여교육, 6) 직업능력향상교육으로 대별해 볼 때, 시민참여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숫자가 다른 것들에 비해 형편없이 작다. 또한 그나마 이런 프로그램을 시민사회단체 부설 교육기관들이 주도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왜 모두들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기피하는 것일까? 물론 수강생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사실상 수강생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는 시민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적 관점에서 시민을 계몽하려고 했거나 절차적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정보전달에 그치는 등, 학습자를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는 시민교육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할 점들을 짚어 보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1. 시민교육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져야 한다. 재미있어야 하고, 다른 어떤 이유를 달지 않더라도 그것을 학습하는 것 자체에 가치가 있어야 한다. 시민교육의 내용과 스토리는 자체로서 소비될 만한 어떤 매력을 가진 콘텐츠여야 한다.
2. 시민교육은 시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함과 동시에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숲에는 온갖 종류의 동식물들이 함께 공존한다. 그것을 생태계라고 부른다. 시민교육도 하나의 생태계이다. 정치교육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3. 시민교육은 결코 하나의 통일된 집합이 아니며, 온갖 주체들이 각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공개장이다. 시

민교육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일은 그리 생산적이지 못하다. 학교교육처럼 통일성을 갖는다면 그건 이미 시민교육이 아니다.

4. 시민교육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결코 국가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시각에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학습자는 사적 이익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을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점이 검증될 때만이 시민교육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교육은 그 자체 민주주의적 질서와 소통의 비밀을 학습과 교수방법 안에 담아내야 한다. 일방적 강의와 생각의 강요는 시민교육의 자격을 결여한다.
6. 서비스러닝(service-learning), 참여학습(participatory research), 지역문제해결학습(communitary problem solving learning) 등 참여와 학습, 강의와 봉사 등이 연결된 하이브리드 방식의 도입을 통해서 시민사회참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적 전환이 요구된다.
7. 시민교육의 전문가 훈련과 연수가 필요하다. 누구나 강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강의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교사에게 교사자격이 필요한 것처럼, 시민교육도 최소한의 교수방법에 대한 훈련과 인증이 필요하다.
8. 시민평생학습과 시민학습사회라는 맥락 위에서 시민교육의 판을 새롭게 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시민교육

곽봉재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1.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교육의 목표와 지향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교육의 목표는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을 기르는 데 있다. 개인과 집단, 사회와 문화가 지닌 복잡성과 다양성, 상호의존성 속에서 자신과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토대를 닦아주는 것이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교육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교양교육의 지향점을 설정했다.

- 여러 학문분야들의 관심대상, 접근법, 사유원칙들을 기본수준에서 이해하는 사고능력의 신장을 통해 자유롭고 창조적인 탐구활동과 정신적 도야
- 정보와 지식, 상충하는 진리들, 상이한 가치관, 경쟁적 주장 등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오류와 편견을 가려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합리적 설명, 타당한 주장, 설득력 있는 해석을 추구할 능력을 길러주는 과학적 사고습관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
- 자신과 사회에 대한 책임 사익과 공익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민주주의 원칙과 시민적 역량을 터득하여 타자와 소통하고 이해하며, 선의와 배려의 공감의 공동체적 가치를 체득하고 사회참여 정신 육성
- 지구사회의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고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힘을 길러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인류의 공통관심을 인지함과 동시에 공통의 문제를 함께 풀어갈 세계시민적 역량 신장
- 심미적 교감과 표현 능력, 예술적 창조성을 존중하는 능력,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며 문화적 능력의 함양

## 2. <시민교육> 교과목의 목표와 지향점

<시민교육>교과목은 교양교육의 전체 목표와 지향점에 입각하여 개설했다. 『인간의 가치 탐색』과 『우리가 사는 세계』를 두 학기에 걸쳐 배우는 <중핵>교과를 중심으로, 기초교과에 해당되는 <글쓰기>교과가 사고와 표현영역을 <시민교육>교과가 사회참여 영역을 각각 담당한다. 대학이 가져야 할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학문영역은 물론 실천영역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시민교육> 교과목이 담당한다.

시민교육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민주사회를 발전시킬 역량을 가진 합리적·비판적 시민 되기
-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 선의, 공감, 배려, 봉사, 유대의 덕목을 가진 따뜻한 이웃되기
- 한 나라의 시민임과 동시에 지구사회를 생각하는 '세계시민' 되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인 만큼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탐구와 인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실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시민교육을 수강한 뒤 보다 심도있는 분야별 탐구는 <배분이수> 교과나 <자유이수> 교과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고, 지구사회봉사단(GSC) 또는 개설 예정인 실천교육센터에 참여하여 실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1) 시민교육의 교재

사회적 실천을 통해 자신과 사회, 나아가 인류에 책임지는 시민으로 성장하고,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기르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시민교육>의 기본 목표이다. 이는 교재의 제목인 "제2의 탄생"(루소의 『에밀』)에서도 잘 드러난다. <시민교육>은 자기 생존을 위한 시기를 벗어나 사회에서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회적 인간'으로 다시금 태어나도록 하는 교육이다.

<시민교육>은 갓 대학생이 된 1학년 신입생이 수강한다. 따라서 교재는 오늘날 시민과 민주주의, 경제문제, 세계상황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그로인해 겪게 된 삶의 문제적 국면들을 살핀 뒤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동시에 실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각 절별로 미리 교재를 읽고 내용과 관련된 토론 주제를 준비해야 하며, 준비가 미진할 경우에 한해 교수가 추가로 논제를 제시한다. 강의 시간의 절반은 준비해 온 논제를 토론하며, 토론 전이나 토론 후 반드시 관련 내용을 에세이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는 학생 상호간에 다양한 입장이나 시각을 확인하면서 논제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생들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 속에서 답을 찾아가도록 조력한다.

#### 교재내용에 대한 토론 전개 단계

문제해결의 상상력과 능력 키우기-어떤 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 현실 알기: 무엇이 문제인가?
- 탐색하기: 문제의 경과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상상력 키우기: 나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계알기와 경험확장-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공감: 그들은 누구인가?
- 신뢰: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소통: 그들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가?
- 연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공존: 갈등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 수 있는가?

'더 나은 인간'; 자기변화-무엇을 알고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 삶: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 실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삶: 어떤 가치를 세울 것인가?

'더 나은 세계'; 미래문명 만들기-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인간에 대한 책임: 관계맺기, 나누기, 함께하기
- 사회에 대한 책임: 불편하고 불평등한 사회제도 변화시키기
- 역사에 대한 책임: 정의로운 민주사회 발전시키기
- 문명에 대한 책임: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문명 창조하기

## 2) 시민교육의 현장활동

(시민교육)의 한 축은 '실천교육'이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과 주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의 방법을 찾아 실천함으로써 자신이 소속한 사회와 지구사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타인과 공감, 소통하고, 공존하는 지혜를 갖추나간다.

현장의 참여는 언제나 사건이다. 그 속에서는 이미 정해진 질문에 따라 답을 찾을 수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제도, 문화, 가치가 부대끼며 발생하는 무수한 사건 속에서, 나와 우리를 성찰하고 공존과 연대의 길을 모색한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과 현장에서 겪은 일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초석을 닦을 수 있다. 시민교육은 이 현장으로 학생들을 안내하는 길잡이다.

### 현장활동의 범위와 분야

우리나라의 자원활동은 주로 협의의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한정되었고, 인간관계면에서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에서 행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자원활동은 사회복지분야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곳, 타인에 대한 공감과 관심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요구되는 것이며, 민주적이고 개방

적인 사회일수록 그 동기는 강해진다.

그렇기에 자원활동이란 공동체와 이웃의 삶과 운명에 대한 공감(共感)과 관심에 의해 촉발된 일체의 자발적 활동, 예를 들어 이웃과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참여적 활동, 주변과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일체의 공감적 활동을 포함한다.

지난 5학기 동안 학생들이 활동한 주제 영역은 다양하고 넓다. 복지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자 및 소수자 권리옹호 활동, 사회적 약자들과 고통을 나누고 더불어 살기 위한 돌봄 활동, 즐거운 생활문화의 향유를 위한 공동체 활동, 환경 생태 보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존, 권력견제 및 협력활동, 다양한 형태의 상호부조 활동 등에 걸쳐 있다.

### ■ 비판적 권력 감시 및 협력적 대안 활동

- 선거참여활동(공약제안, 투표율 제고 활동, 후보자 지지활동을 위한 자원활동, 불법선거자금 감시 등), 국정 및 의정 감시 모니터링, 거짓말하는 정치인 모니터링 등 네티즌 수사대 활동, 기업 감시, 소비자권리운동, 청년실업극복 활동, 서명·캠페인, 집회·시위 등
- 약속 잘 지키는 정치인 모니터링 및 칭찬 활동, 공약 약속 실천 평가, 법제도 제·개정 활동, 정책제안활동, 각종 정치적 공론장 참여, 직접참여, 심의활동(시민의회, 시민법정, 주민예산제 등), 계층·이념·지역·세대 간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소통 활동 등

### ■ 권리옹호 활동

-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성소수자, 다문화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노동·농민 등의 권리옹호를 위한 실태와 법제도의 문제점 조사 등을 통한 권익대변 활동

### ■ 사회복지적 접근의 나눔활동

- 협의의 사회복지 : 소외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새터민 등 나눔활동
- 광의의 사회복지 :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차원의 사회복지와 건전한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각종 문화복지시설 자원활동
  - 보건·의료 : 재활치료, 간병활동, 의료보조활동, 한방진료, 의료상담활동 등
  - 기술·기능지원 : 목공·집수리 봉사, 보일러 수리, 전산입력, 농촌일손돕기 등
  - 상담 : 성폭력·가족폭력 피해자 상담, 자살예방 상담 및 멘토 역할 등

■ 대안경제 활동

- 생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원활동 등

■ 사회복지적 접근의 나눔활동

- 재난·재해 구호 : 재난 지역 인명구조, 수해 및 설해 복구 활동, 각종 모금사업 등

■ 지역공동체 활동

- 교통·환경 : 아동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통질서 캠페인, 지역하천 및 골목 청소, 생태 탐사, 야생동식물 보호, 반려동물보호, 동물 학대 감시 및 동물 보호 모금 활동 등
- 지역만들기 : 지역실태조사, 마을만들기, 역사탐방, 마을 지도그리기 등
- 주민자치 활동 : 주민자치 교육 보조 활동, 행정예의 참여와 기록 등
- 외국어·통역 : 시민단체 통번역활동, 민박봉사활동, 입양인 고국방문 외국어 통역활동 등

■ 교육활동

- 교육 : 은퇴자 및 재취업자를 위한 컴퓨터 및 외국어 등 기능훈련,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학습지도, 어르신 한글학교, 야학 등

■ 문화예술 활동

- 예술축제 자원활동, 예술창작교류활동, 예술을 통한 소통과 나눔 활동 등
- 공연전시장 안내, 음악·무용·연극 등 공연 봉사, 문화재 지킴이, 문화유산 해설사 등
- 취미교실 :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취미교실 교육 활동

■ 인류평화와 지구생태계 보존을 위한 세계시민으로의 활동

- 국제활동 : 난민, 국제구호활동, 문화교류, 교육, 공공시설보수, 위생시설 건립 등
- 국내활동 : 통일평화 활동, 다문화 가정, 다문화 이주노동자 등 인권지킴이 활동(멘토 상담,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 빈곤, 환경, 전쟁 등 세계문제 관련 단체 자원활동, 웹을 통한 세계문제에 대한 조사 및 구호 활동 등

'현장활동'의 주제나 활동방식은 모두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이후 현장 조사, 동행, 관찰 등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한다. 학생들은 주변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해 이웃과 친

해지기, 동네 벽화그리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하고,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 청년실업,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직접 보고 느끼며 해결책을 모색해보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 결과로 몇몇 학생들은 한국현실의 몇몇 부분들을 실제로 변화시키기도 했고, 각종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교육에서 '현장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그 결과들 때문이 아니다. '현장 활동'이 때로는 의도치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튀기도 하지만, 현장으로부터의 감동, 공감, 의분, 충격 등, 강의실 안에서 배울 수 없는 생생한 삶을 접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3) 시민교육 강의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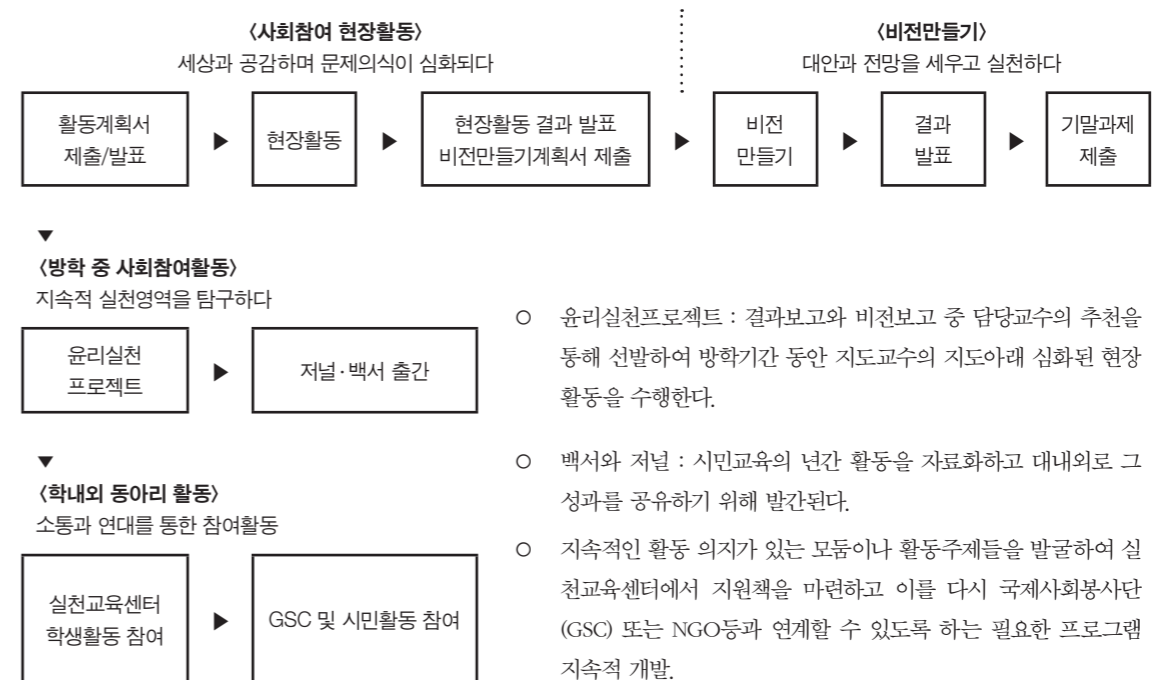
\* 한 학기, 주 3시간, 3학점, 교양필수, 절대평가

서울·국제 각 캠퍼스 학기당 100개 강좌 연간 200개 강좌 개설

- 연간 약 6,000명 수강, 5인 모둠 기준 연간 1,200개 현장활동 진행

모듈1	모듈2	모듈3
강의/토론 40%	사회봉사 현장활동과 발표 30%	비전만들기와 발표 30%

〈시민교육〉교과와 학생참여 활동 실행 흐름





#### 4) 시민교육 교과 운영방향

##### 1) 학습자 중심의 실천적 시민교육

- 일방적 강의와 지식 습득이 전부가 아니며,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실천과정이 되게 한다.
-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갖도록 하며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 학습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 즉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여건을 파악하고 이해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며, 정치적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거나 더 나아가 공공성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학습하게 된다.

##### 2) 통합적 시민교육

- 강의실과 강의실 밖을 하나로 통합한다.
- 학습자들의 집중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전공·현업분야와 시민교육간의 적절한 통합
- 나·가족·이웃·지역·국가·세계가 만나는 교육을 지향.
- 삶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시민교육을 강조.

##### 3) 성찰적, 다원적 시민교육

- 실제적인 진리탐구는 공백, 모순, 갈등,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절대적인 진리라 없다. 우리 각자는 공백 앞에서 있는 탐색자이다(파커 J. 파머).
-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거나 기존의 상태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게 하는 것은 시민교육이 아니다.
- 다양한 계층·이념·세대 간 만남과 대화, 성찰적 접근을 유도.
- 대안적 가치와 삶의 모색

##### 4) 협력자, 촉진자로서의 강사

- 현장활동 및 비전만들기 전 과정은 학생들 스스로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자는 조력자(facilitator) 역할을 담당한다.
- 다양한 경험과 실패에 용기를 북돋워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다.
- 질문과 입장표명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긍정성을 심어 준다.
- 지나친 기대나 요구보다 애정과 사랑을 보여준다.

#### 5) 시민교육 교과의 주요업무

##### 1) 지역사회 협력 실천프로그램 개발

- 수원시 평생학습관 내 수원시민 인문대학 운영
- 수원시 공직자 인문학 교육 운영
- 서울시 시민대학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참여 - 학교내 서울시민대학 개설
- 서울지역 저소득층 청소년 대학생 멘토 프로그램
- 수원지역 고등학교 인문학 특강

##### 2) 교수자 역량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월1회 정기 워크샵, 방학중 집중 워크샵 진행
- 학계 및 사회단체 협력 시민교육 학술 심포지움
- 시민교육 포럼 운영·주요국가 시민교육 교재분석 및 이론점검
- 시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대학과정 및 초중등과정 프로그램 연구개발

##### 3) 현장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과 공동 과제 그린캠퍼스 운동 지원
- 강의 종료 후 활동지속 학생들의 지원
- 동계방학 중 <윤리 실천 프로젝트> 운영
- 지자체 및 NGO, 국가기관과 연계하는 실천 프로그램 개발
- 현장활동 영역별 특강, 심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 4) 저널·백서 발간

##### 5) 실천교육으로서 시민교육 교과의 평가방식 연구

##### 6) 실천교육센터 및 GSC의 연계 활동

### 3. 현장활동의 사례

2011년 백서

2011년도 현장활동 영역과 대표주제	
경제정의	1. 영세상인 살리기(동네 빵집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비교), 2.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부서진 주거권 3. 연극배우를 통해 본 예술인들의 저임금 문제 4. '아름다운 가게' 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모색
교육·학술	5. 대학 내 학생식당 문제 6. 외국인 유학생과 재학생의 교류 7. 교내 체육시설의 불편한 진실 8.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정책 9. 후마니타스 칼리지에 대한 의견 10. 예체능계열 입시학원 및 입시제도 문제 11. 반값등록금과 강의의 질 12. 대한민국 경제교육 현황
문화·예술·종교	13. 비정상적 미용의 위험성 조사를 통한 올바른 미용관리 제시 14. 여의도한강공원을 통해 본 현대인과 여가 공간 15. 문화재 보존실태 조사 및 보존 방안 모색 16. 낙원상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7. 국악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홍보를 통한 국악의 대중화 모색 18. 수도권 문화예술 관련 축제 및 행사 조사
사회적 약소자	19. 장애인 목욕 봉사활동 20. 장애인 노동환경 21. 이태원 편견 깨기 22. 유학생의 소외 23. 지하철 잡상인 문제 24. 장애인의 성과 사랑 25. 아동센터 운영의 실태 파악 26. 노숙인 급식
세계시민	27. 세계 식량 문제와 GMO 문제 조사 28. 전쟁의 발생 원인과 평화 운동의 전개 과정 탐구 29. 중국인 유학생과 멘토·멘티 관계 맺기를 통한 교류 방안 모색 30.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해 바로 알기 31. 다문화 사회 및 유학생 실상 바로 알기

안전·보건·의료·교통·주거	32.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 33. 등산문화 개선 및 서울시내 자전거도로 개선 34. 시민 윤예린의 환경권(소음문제 해결) 35. 참살이조의 좌충우돌 학생식당 개선 프로젝트 36. 스마트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생활 피해 37. 자살 예방 UCC 제작 & 발표 38. 올바른 흡연문화 정착
여성·가족	39. 보육원 실태 조사 및 고아에 대한 인식 개선 40. 아동 성 범죄로 본 시민 의식 41. 아동 성범죄 실태 파악과 성 문제 해결 노력 42. 미혼모
지역·자치·공동체	43. 학교 '마을' 환경 개선하기 44. 주말농장의 보람과 젊은 층으로부터의 소외 45. 인사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46. 마을벽화 그리기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참여정치	47. 평화의 정당 48. 공직선거 후보자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청년·세대	49. 청소년 통일이식 및 교육의 현황 50. 조명 받지 못한 20대를 위하여
환경·생태	51. 유기견 실태 보고와 인식의 환기 52. 경희대 분리수거 실천 환경 만들기 53. 재생용지 사용 촉구 캠페인

2012년 백서

2012년도 현장활동 영역과 대표주제	
경제정의	1. 사회적 기업 디자인하기 2. SSM과 재래시장의 공생방안
교육·학술	3. 대안학교의 허와 실 4. '신입생 세미나' 에 관한 보고서 5. 체육선수부의 생활과 학업성취도 6. Talk Talk
문화·예술·종교	7. 연극과 가까워지기 8. 문래 창작촌을 느끼고 홍보하다
사회적 약소자	9. 그대를 사랑합니다 10.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변화 11. 손끝으로 다가가는 그들만의 소통 방식

세계시민	12. 경희대 외국인 재학생과 한국인 재학생 교류 활성화 13.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어 배우기
안전·보건·의료·교통·주거	14. 공공장소 구급장비 15. 정신건강병원에 대한 인식 바로잡기 16. 화장품 유해물질 성분
언론·미디어	17. 그들이 사는 세상 18. 시민들의 무분별한 정보수용
여성·가족	19.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그들을 위한 비전 만들기 20.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대책의 변화 강구 21. 어린이집 아이들, 이대로 괜찮나요?
인권	22. 북한 인권과 탈북자 권리 보호 23. 그 흐르는 눈물, 누가 닦아 주나요 24. 아동복지의 필요성
지역·자치·공동체	25. 가지 않은 길, 귀농 26. 외국인들이 느끼는 우리나라 교통의 문제점 개선
참여정치	27. 디자인 서울 28. 아리수 29. 제18대 대선 정책 공약 알리기
청년·세대	30. 꿈, 그리고 목표 31. 취업에 있어 스펙의 실효성
환경·생태	32. 경희대학교 교내 차량 통행과 주차 문제 33. 산사태, 천재일까 인재일까? 34.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동물들에 대한 입양 홍보 활동· 35. 원자력 발전
기타	36. 스포츠 승부 조작 감시 단체 창립 기획안 37. 안내견 바로 알기 38. 자살에 대한 이해와 예방 39. 지역갈등의 현실 조사와 극복 방안

## 윤리실천프로젝트

### 2011년 사례

현장활동은 <시민교육>의 교육취지와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교육방식이다. 강의실을 벗어나 사회 현실과 직접 부딪혀보는 현장활동은 구체적인 현장의 시선으로 그들의 생활과 의식을 알아보는 체험 중심의 학습방식이다. 그러나 <시민교육>이 학제(學制) 속에 있는 관계로 현장활동은 종강과 함께 중단된다. 이로부터 윤리실천프로젝트는 현장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보다 심화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시민교육>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된 윤리실천프로젝트에 총 17개 팀(국내활동 11팀, 해외활동 6팀)이 지원했다. 1차 서류 전형을 거쳐 통과된 8개 팀(국내활동 4팀, 해외활동 4팀)은 공개 발표로 진행된 2차 심사를 통해 4팀(국내활동 2팀, 해외활동 2팀)으로 최종 선발되었다.

#### ○ 빈곤의 현주소를 탐방하고 대안적 삶을 실험하다

선정된 국내활동 팀은 주거난민의 실상을 파헤치고 실질적 지원활동을 전개한 '다찾사(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 팀과 재능 나눔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생활협동조합 모델을 실험한 '민트' 팀이다. '다찾사' 팀은 서울역 인근의 쪽방촌, 만화방, 찜질방, 여인숙을 대상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삶을 이어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 활동을 전개했다. 관련 단체의 행사에 직접 참여함은 물론 만화방과 여인숙에서 1박 2일 숙박함으로써 주거난민의 생활실태를 직접 몸으로 체험했다. '민트' 팀은 생활협동조합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는 가운데, 재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을 설계하고 그 가능성을 모의실험을 통해 점검했다.

#### ○ 일본에서 새로운 주거공간을 찾아보고 대학생들과 청년문제를 논하다

선정된 해외활동 팀은 교토와 고베를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주거형태를 모색한 '인문정신' 팀과 도쿄를 중심으로 한일 청년문제 및 문화실천을 비교한 '세계로! 하나로!' 팀이다. '인문정신' 팀은 획일화되어 있는 한국의 주거공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교토와 고베에 있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에서 대안 공간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세계로! 하나로!' 팀은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문제의 현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신주쿠 한복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함을 물론, 와세다대학교 학생들과의 집단인터뷰를 통해 양국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졌다.

## 2012년 사례

### ○ 에이블 아트

내가 고통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본 경험이란, 그저 TV나 신문을 보고 지나치는 정도였다. 하지만 태안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지식인이자 시민이라 생각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나는 내 주변과 우리 사회의 일에 아주 무관심한 대학생 하나에 불과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부와 독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여러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에이블 아트(장애인 예술)를 한다고 하면 당장 그들의 인권이나 생계 문제도 있는데 왜 하필 예술까지 신경 쓰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예술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면, 장애인도 예술 활동을 통해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감동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현장활동을 처음에는 귀찮은 과제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진심이 생겨났다.

예술이 전시장이나 무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나아가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물론 우리의 활동이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아무런 영향도 없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활동은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켰고, 생각도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장활동이었다. \_에이블 아트 참여학생 대표

### ○ 서해안 기름유출, 그 후 - 아물지 않는 태안의 상처

Thymine 조는 2012. 2학기 시민교육 현장활동 주제로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를 선정해 지난 수개월간 사전 조사, 현장탐방, 시위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활동 과정을 통해 대기업과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말미암아 피해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보상 및 배상을 받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업과 관광객 유치 등 이들의 생계를 뒷받침했던 경제적 토대 또한 동시에 파괴되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언론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이들이 입은 피해는 점점 잊혀져 대기업과 정부를 압박하여 보상 및 배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론 형성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남은 것은 이 지역에 찾아와 여가와 먹거리를 즐기기가 어렵게 하는 오염된 지역이라는 막연한 부정적 인상뿐이었다.

시민교육 활동을 통해 확인한 사고피해지역과 주민의 이러한 고립은 예상보다 심각한 것이었고 특히 전혀 주목하지 못했던 무형의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주민들을 생업을 잃고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오랫동안 유지해온 공동체의 파괴를 경험해야 했다. 보상이라는 금전적 문제가 개입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고, 지역적 차별 보상에 따라 마을과 마을의 관계 또한 파괴된 상태였다. 지역을 떠난 이들도 다수였으며 마음과 몸이 병든 이들도 상당히 많았다. 물리적 공간과 사람은 남았지만 사람들 사이의 유대와 애정은 파괴되어 공동체는 붕괴된 상태였다.

공동체 파괴라는 새로운 문제는 시민교육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극히 짧은 현장탐방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이어서 학기중 활동을 통해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없었다. 이에 윤리실천 프로젝트를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가장 큰 피해라 할 수 있는 공동체 파괴를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자 한다. 이는 합리적 배상을 위한 새로운 근거가 될 수도 있거니와 무엇보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주목하고 보듬어내야 할 상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직시하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다. \_아물지 않는 태안의 상처 참여 학생

## 현장활동 사례

### 2011년도 사례

#### ○ 이성간 연애만 연애라고? 아니지! -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바꾸다

권예하(언론정보학과), 송아리(미술학과), 전소연(화학과), 이인석(경영학과), 윤나라(미술학과) 등은 2012학년도 1학기에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민교육>의 현장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사랑', '연인', '연애', '애인', '애정' 등의 의미에 주목했다. 이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사랑, 연애 등의 사전 정의가 남녀의 관계에만 한정돼 있어 성소수자의 권리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제도 개선'을 현장활동의 큰 주제로 삼기로 했다.

처음엔 설문조사나 심층 인터뷰 정도로 활동 내용을 구성했지만 이것은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현장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고민하던 이들에게 아이디어를 준 것은 브레인스토밍을 위해 찾았던 <퀴어문화 축제>였다. 그곳에서 '가족', '결혼', '애인'이라는 세 단어를 대상으로 '이성에 중심 언어 바꾸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던 국제 엠네스티 대학생 네트워크의 활동을 알게 된 것이다. 이후 한 달 동안 서울 광화문과 시청 등지에서 서명을 받아 국제 엠네스티에 전달했다. 자체적으로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을 받아 그 결과를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국립국어원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랑', '연인', '연애', '애인', '애정' 등 총 5개의 사전 정의를 개정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성의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에서 '이성의 상대'라는 부분을 '어떤 상대'로 바꾸고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개정했다. '연인'의 뜻풀이도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남녀'에서 '남녀'의 부분을 '두 사람'으로 바꿨다. 국립국어원은 사랑, 연인 등의 뜻풀이를 이와 같이 개정한 이유를 과거와 달리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했다. 국립국어원은 "분기마다 사전편찬위원회를 열어 표준국어대사전을 수정하지만 이번처럼 같은 맥락의 단어를 한 번에 5개나 개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음으로 돼 있는 '결혼'의 사전 정의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국어원의 사전 정의 개정 결정에 언론들은 주목했다. 한국일보는 "성소수자들은 단어 하나로도 차별받죠"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다른 언론보도와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차별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경향신문은 "성 소수자 존중 위해 '에인·연애' 정의 바꾼 대학생들"이라는 제목으로 대학생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연인 뜻풀이, 사랑하는 '남녀서 두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보도, 제목상으로는 사전 정의의 개정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해당 기사 내용은 성소수자의 입장을 반영한 국립국어원의 사전 정의 개정이 향후에 미칠 영향을 환기시키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이번 결정이 향후 결혼에 대한 법률상 개념의 변화, 즉 동성 간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한 것이다.

단어의 의미를 표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삶의 가치와 방식, 그리고 규범과 그에 관련된 생각을 단어에 담아낸다는 뜻이다. 동시에 우리는 표준화된 단어의 의미를 통해 세계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다룬다는 것은 세계를 이해하는 활동임과 동시에 세계를 구성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대학의 교육은 '세계'를 염두에 두고 '언어'를 다루는 훈련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훈련은 주어진 문제와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답을 찾는 법을 익히기보다는 물음을 배우며, 틀림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이 세계를 묘사하고 표현하는 보다 풍부한 언어적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교재)는 영감을 얻기 위한 참고서이지, 답안지가 아니다. 또 문제 역시 그러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늘 잠정적이고 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게다가 그 답은 책이 아니라, 숙고에 바탕한 타자와의 소통에서 얻는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현장에 뛰어 들어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의 실천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 이거 500cc 맞아? -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져!

시민교육 수업에서 만난 황정필(한의예과 12학번), 권지은(사회학과 12학번) 박규경(한의예과 12학번), 김로의(무역학과 10학번)는 맥주잔의 용량이 메뉴판에 표기된 양과 같은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황정필 군은 비커를 갖고 호프집을 찾은 날을 이렇게 기억했다. "사실 그건 좀 눈치 보이는 일이었죠, 하하. 비커가 깨끗하지도 않아서 마시기도 좀 그랬고요." 이들은 호프집에서 2,000cc, 3,000cc로 표기해 판매하는 이른바 '피쳐'의 용량이 메뉴판에 표기된 것과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들이 찾은 호프집에서는 2,000cc를 주문했을 때 1,550cc가 제공됐다. 이들은 동대문구청과 서울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동대문구청과 서울시는 행정지도를 약속했다. 호프집의 '피쳐통'은 생맥주 공급회사에서 만드는데 이것들 각각은 실제 1700cc, 2700cc로 표기돼 있다. 문제는 눈에 띄지 않는 통 밑바닥에 용량이 표기돼 있기 때문에 호프집에서 2000cc, 3000cc로 판매해도 소비자는 그것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강남역 등 서울 시내 6개 지역 90개 호프집의 생맥주 실제 제공량을 측정해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주문량보다 평균 13%에서 23% 적게 나온다는 결과였다. 주문량별로 따져 보면, 500cc를 주문했을 때는 평균 435cc, 2,000cc는 1,544cc, 3,000cc는 2,309cc가 나와 주문량 대비 제공률이 500cc가 87%, 2,000cc와 3,000cc는 77%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맥주 제조사들은 앞으로 눈금이 새겨진 생맥주 잔을 보급하기로 했다.

○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 반값 과외 협동조합을 만들자!

2012년 11월, 이진욱(언론정보학과), 금혜린(아동가족학과), 여인호(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 류무걸(경영학부) 등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시민교육'을 수강하고, 과도한 학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전국 최초로 '대학생과외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대학생 복지 증진'과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들이 경희대학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은 교육비로 매달 133만 5천원을, 학부모는 사교육비로 매달 30~4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높은 교육비로 인해 대학생은 자신의 존재가 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답하였고,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교육비 때문에 대학생과 청소년의 학부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대학생이 질 좋고 가격이 싼 과외를 학부모에게 제공하면 대학생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용돈을 벌 수 있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를 좀 더 줄일 수 있다고 여겼다. 더불어 그간 이웃이었지만 전혀 교류가 없던 대학생과 지역 사회의 학부모가 교육문제를 기반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이를 확장시켜 대학생과 지역 주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는 이웃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진욱 학생을 비롯한 3명의 학생은 나름의 운영 기준부터 세웠다. 학년·과목 관계없이 초·중·고생의 주 2회 강습 기준, 월 과외비를 시세의 절반인 15만원으로 책정하고,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매달 과외비 중 3,000원을 조합원비로 책정하여 저소득층 교육을 위해 전액 사용하기로 했다. 그렇게 탄생된 것이 바로 '대학생과외협동조합'이다.

이를 알리기 위해 학생들은 경희대학교 게시판과 개인 블로그와 SNS를 활용해 과외선생님이 되어줄 대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받을 초·중·고등학생들을 모집했다. 지역 동사무소 문화센터에 찾아가 문화강습을 받는 학부모를 설득하기도 했고 청량초, 경희중 등 지역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초기 성과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한다. 홍보 방법의 미숙함과 검증되지 못한 과외방식 등의 복합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활동을 지속했던 이들에게서 얼마 전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뜻있는 일이 입소문을 타고 점차 세상 밖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는 60여명이 넘는 지역 대학생들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초·중·고등학생들 역시 계속해서 꾸준히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학생과외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꾼다고 했다. '사교육시장에 값싼 상품이 등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일부의 평가에 이들 역시 고민이 많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인간중심의 메커니즘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경쟁적 관계들을 조금이나마 치유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다. 아직 초기단계에 지나지 않는 이들의 활동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다만 이들의 고민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온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 가족이라 생각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면 그것이 바로 가족

안호준(hospitality 경영학 2013) 군 과 4명의 조원들은 가족의 의미를 현재에 맞춰 바꾸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시민교육의 활동 목표로 삼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독신가족, 동성가족, 새싹가족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가족도 존재하고 있지만 사회의 분위기는 그 새로운 형태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변화는 벌써 시작됐는데, 인식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원들은 우선 대중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양한 연령층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족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형태를 고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8%가 '1인 가족'이라고 답했고, 15%가 '새싹 가족(이혼, 별거,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이 가족해체로 이어지면서, 아동 및 청소년 끼리만 함께 사는 형태)'이라고 답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39%가 '사회적 인식 문제'를 꼽았다.

이어서 실제 동성가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다. 동성가족이 직접 이야기하는 가족의 정의가 인상 깊었다.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도 한다.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이, 다시 말하면 함께 생활하고 마음을 나누는 사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나'하는 질문에는 "마음으로 묶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원들은 국립국어원에 가족의 의미를 수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국립국어원에 등록된 '사전적'인 정의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의 형태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가족에 대한 의미 개정은 법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어서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바꾸고 싶었던 가족의 정의는 무엇이었을까? 조원들은 선부른 '정의'를 내리고자 하지는 않았다. 본인들도 어떤 틀에 박힌 정의를 내리는 것이 두려워, 그 정교한 작업은 전문가들의 몫에 맡긴다는 것이었다. 다만 앞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족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 대한 어느 답변처럼, '마음 놓고 쉴 공간이 있는 곳' 또는 '서로에게 믿음을 갖고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열린 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박정은(언론정보학 2012) 양은 "가족이라는 것은 남이 규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인 것이다"라고 활동 소감을 밝혔다.

'독신가족은 구성원이 한 명 뿐인데 가족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새싹 가족은 너무 잘 흩어질 것 같은데, 가족이라고 봐도 될까? 동성가족이 살기에는 우리나라가 아직 너무 보수적이지 않은가?' 하는 질문들이 활동 초기, 조원들을 술하게 괴롭혔다고 한다. 그러나 한 학기의 고민 끝에 이 모든 질문은 하나의 대답으로 바뀌었다. 가족이라는 것은 남이 규정해주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소수자라고 해서 그들이 가족이 될 수 있고 없고를 허락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이다.

○ "기부 마지막 단계까지 관심 가져야"

한편, 염지은(한의학 2013) 양 외 4명의 조원들은 민간 비영리단체의 신뢰성 향상에 대해 고민했다. 그 계기는 파키스탄에 학교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학내에서 진행되던 모금활동이었다.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려는 학생들의 눈에, 이 모금활동은 '정말 이 돈으로 학교가 제대로 지어질까? 학생들은 모금을 진행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 단체가 펼쳐온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채로 기부를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일까?'라는 의문을 남겼다.

이 의문은 곧 '민간 비영리 단체의 신뢰성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리돼 지난 한 학기의 활동 목표가 됐다. 조원들은 모금활동의 위법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기부자와 모금단체, 정부기관 관련자를 인터뷰했으며 'NPO 신뢰성지수'를 직접 만들어 비영리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가이드스타'에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염 양은 "기부자는 기부의 마지막 단계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의도로 기부한 돈이 엉뚱하게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조원들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NPO 신뢰성지수'를 만들어 한국 가이드스타 측에 보냈다. 조원들이 직접 초안을 만든 후 신뢰성기구의 유한범 교수에게 검토를 의뢰해 이를 보완했다.

'NPO 신뢰성지수'는 말 그대로 NPO의 신뢰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다. 가이드스타의 공개 기준 회계자료가 제대로 공개돼 있는지를 따지는 양적 평가와 사업목적이 공익적인지, 구체적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묻는 질적 평가를 수치화해 기부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가이드스타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평가를 받았다. 해당 내용은 가이드스타의 연구&리서치란과 소식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NPO 신뢰성지수' 활용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염 양은 "무엇보다 기부자의 입장에서 단체의 신뢰성을 어려운 회계지식 없이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도 강제적인 감사와 같은 부정적인 방식이 아닌 긍정적인 방식으로 NPO의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가이드스타라는 단체가 많이 홍보되지 못했고, 가이드스타 홈페이지에 회계정보를 등재한 NPO도 매우 소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수가 효용성을 갖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염 양은 NPO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관심을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한국가이드스타에서 기자단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NPO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 등 강제적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시민교육 활동을 통해서 투명한 정보공개 만으로도 기부자와 정부, NPO 등 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둘 수 있고, 그에 따라 기부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변화를 이끄는 것은 긍정의 힘이었다."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보다도 소중한 깨달음이다.

○ 왼손잡이의 '사소한 불편'에 손을 내밀다

'디자인'에 집중한 팀도 있다. 이들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논의하던 중,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화두에 사로잡혔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과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뜻한다.

처음 유니버설 디자인을 주제로 선정한 후 범주가 방대해 활동 내용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왼손잡이 불편한 개선'에 대한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요즘은 더 이상 오른손은 '옳은 손', 왼손은 '나쁜 손'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생활 속의 '사소한 불편'이 남아있을 뿐이다. 다만 불편 앞에 붙는 '사소한'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으며 왼손잡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이런 왼손잡이들의 '사소한 불편'에 대해 알아보고자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은 단 하나, "살면서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답변은 정말로 사소했다. "오른손잡이 친구들과 밥 먹을 때 팔이 부딪쳐요" "가위, 당구장 장갑, 커터칼, 화장실 휴지 등 대부분의 물건이 오른손잡이용이라 불편해요" 등의 답변이었다. 이런 불편은 분명 사소하지만, 생활에서 누구나 빈번히 마주할 수 있는 불편이다.

이들은 왼손잡이들의 생활 속 사소한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왼손잡이 교육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왼손잡이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서구 주요 국가들이 왼손잡이 아이들을 위한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나라에 맞는 왼손잡이 매뉴얼의 필요성을 느끼고 직접 매뉴얼을 제작해 학교에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외국의 '왼손잡이 학습 매뉴얼'을 참고해 우리나라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 매뉴얼은 [www.lefthandersday.com](http://www.lefthandersday.com)이란 홈페이지에 있는 왼손잡이 어린이들의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참고해 만든 것이다. 또한 영어로 된 왼손잡이 글씨용 받침대와 교수학습법을 번역하여 한글버전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받침대 매뉴얼을 디자인하고 제작하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이전의 결과물을 들고 '평동어린이집', '영화초등학교', '팔달희망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현장을 방문해 이번 활동의 목적, 목표, 왼손잡이 아이들을 위한 교수학습법에 대한 설명, 왼손잡이 아이들의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직접 왼손잡이 어린이를 만나 이들이 제작한 '왼손잡이 받침대'를 써보게 했지만 왼손잡이 받침대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미 왼손잡이 어린이가 왼손으로 글씨 쓰는 자세가 잡혀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왼손잡이는 세계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오른손에 맞게 구조화돼 왼손잡이는 사소한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 소수자인 왼손잡이의 특수성은 절대 '틀린' 것이 아니며, 왼손잡이에게 요구되는 규율은 다수인 오른손잡이의 구조화된 폭력이다. 이런 구조화된 폭력 속에서 이들의 왼손잡이를 위한 작은 활동은 우리사회가 다름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사회로 변하는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한다.

# 중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김영삼 / 서울성동교육지원청 장학사

## I. 교육부의 구상

### 1.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2010.10<sup>1)</sup>

#### 가. 교육부의 구상

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포럼에서 추구하는 것과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는 많은 경우를 보더라도 학교 교육에서는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된다.

#### 1) 민주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에 대한 기대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지식·가치·태도 등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

- **역량과 자질** :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 **공유 가치** :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 **국가 정체성** :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

민주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을 정의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민주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시민을 육성해야 하고 그 민주시민의 갖추어야 할 지식, 가치, 태도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아울러 함양한 자질과 소양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맥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정과 준법은 있지만 인권과 정의는 찾아볼 수 없어 공유가치의 기준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아닌 우리 사회 기존 질서를 유지 존속하기 위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010.10

### 2)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가)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교과부, 2010.10)

#### (1) 참여와 실천을 통한 공동체 책임의식 함양

(가) 학생주도의 학교행사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나) 학교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통한 공동체 책임 의식 제고(학칙, 학운위 참여)

#### (2) 민주시민의 기본역량 함양 및 기반 조성

(가) 토론·협동·배려 등 민주시민의 기본역량 함양(참여형·토론형 수업, 민주시민캠프)

(나) 제도적 기반 정비(초중등교육법 개정-학운위 학생 참여, 교사 연수)

#### (3) 범부처적 민주시민교육 체제 구축

(가) 민주시민교육 범정부협의체 운영(2010년 하반기)

(나) 교육자원·프로그램 개발, 체험·실천교육, 교육과정과 연계

#### (4) 나라사랑 문화 확산

크게 봐서 새로운 것이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학생의 학운위 참여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 판단된다. 일상적 교육활동인 교과교육과의 연계성에 대한 고민이나 범정부협의체 운영 등은 의욕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게 해준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을 여전히 학교 교육활동으로만 국한하는 듯한 아쉬움이 있다. 지역에서 함께 성장하는 민주시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기대하는 학교와 학생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아쉬움도 있다. 즉 현재 상황과 특별히 달라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후 3년이 지난 지금 별다른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현실화 되었다.

## II. 바뀌지 않는 현실, 오래된 낯설음

### 1. 자기주도학습과 생활지도

#### 가. 교수와 학습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교육에서 학생이 학습하는 활동으로, 학생 개인의 활동이 아닌 협력 학습으로, 학교 교육활동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에 대해 큰 틀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시도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크게 방향을 바꾸고 있다. 학생의 자기 주도성을 높여주는 것, 강제로 억지로 집어 넣어주는 공부보다 스스로 찾아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학교 교육의 지향점이 되어야 함을 누구나 말하고 있다. 또한 많은 실천들이 이러한 주장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물론 자기주도학습만을 이야기할 경우 교육의 다양한 상황적 관계성들이 배제되고 학생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왜곡된 결론에 도달할 위험성이 있지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학습에 있어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을 찾아주자는 발전적 방향이다.



## 나. 생활지도와 생활교육

자기주도학습에서 얘기하는 학습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 인정은 왜 학습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학습에 있어서 협력과 자기 주도성이 창조적 인재를 만드는 결정적인 지점이라고 하면서도 두발, 용의 복장 등 학생들의 일상생활은 늘 (생활)지도의 대상으로만 얘기되고 있을 뿐이다. 학생부가 생활지도부로 바뀌었고 교문 지도는 여전히 학생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벌점 부과 대상이며 벌점 부과라는 것 역시 생활지도 방안의 일부인 것이다. 아이들은 학습은 자발적, 주체적으로 협력하며 하고 있는데 생활은 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이중적 존재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교과 수업에서는 민주시민교육적 관점이 작동하고 있는 반면 체협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 활동의 장으로 기대되고 있는 교과수업 외 학교 교육활동에서는 생활지도의 관점이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생활지도와 민주시민 교육은 매우 다른 전제에서 출발한다. 생활지도는 학교의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규칙을 지키도록 안내하고 그 실행 여부를 지도 감독하는 것이다. 곧 교사에 의한 학생 지도라는 수직적 위계 관계 속에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은 자치, 자발성, 참여와 실천,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축으로 하여 진행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생활지도와 민주시민 교육은 양립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를 '생활교육'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생활지도 기본계획'이 '생활교육 기본계획'으로 바뀌었다.<sup>2</sup> 생활지도가 생활교육으로 바뀌는 전환이 있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이 학교교육 활동 운영 전반의 기본 원칙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 2.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 가. 교육과 학교

교육과 학교는 어떤 관계일까? 교육을 위해 학교를 만들었고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이 발현되는 장이 학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이 바뀐다는 것은 곧 학교가 바뀐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일반자치와 구별되는 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 선출이 교육자치를 확인하게 해주는 구체적인 정치 행위이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들이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감을 임명하던 시절과 다른 다양한 지역적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연 이유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TV로 중계되는 정치가 아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바꿔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정치를 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취지에 따른다면 교육자치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학교 자치를 꽃피우기 위함이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 외에 학교 자치를 위한 구조적 기반 조성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실질적 교육자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2010년 교육감 선거 이후에도 학교자치를 위한 구조 마련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자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김명삼, 경기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활동 담당 장학사 연수, 2013.10.

## 나. 학교자치와 학생자치

민주시민 교육을 이야기하면 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가 거론된다. 당연히 핵심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늘 거론된다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앞으로도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돌발에서는 곡식이 자랄 수 없다. 옥토로 바뀌어야 비로소 곡식이 자랄 수 있다. 돌발을 그대로 두고 물만 열심히 부어주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바꿔야 하나?

학교자치의 구상이 없는 학생자치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는 학교자치를 말하지 않고 학생자치를 말해왔다. 거기서 학생자치란 학생들에게 소꿉장난 같은 자치 흥내를 내라는 것에 불과했다. 소꿉장난은 아이가 들면서 유치한 놀이가 되고 학생들은 학생자치를 외면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거부한다 혹은 관심이 없다고 말하곤 했다. 내용없는 자치, 쇼에 불과한 자치의 당연한 귀결이다.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를 통해 꽃 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학교자치에 대한 단 한발짝의 진전도 없었다. 기껏해야 교장 임용 방식의 약간의 변화를 놓고 갑론을박했을 뿐이다. 교장 임용 방식은 학교자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학교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여러 주체들은 그저 동원되는 것이 자기 역할의 전부였고 주체로서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다. 인간이 만든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역사적 지혜의 산물은 권력의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운영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학교 권력 분산의 구조도 갖추지 못했고 견제와 균형의 운영 원리를 작동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학교에 자치라는 말을 붙이기가 힘든 지경이다. 학교 자치에 대한 구상이 없으니 그 대신 등장하는 것이 학교장 자율 경영, 학교 자율성 확대 등의 용어이다. 학교자치와 분명히 구분되는 이러한 시도는 학교 자율성 확대가 곧 학교장의 자율성 확대로 오인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것은 학교자치 구조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학교 자율권을 신장한다는 접근이 만나게 되는 당연한 귀결이다.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 사회 모두 학교자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적 행위를 하라고 강요받고 있다. 도대체 학생자치활동이 학교 교육활동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하고 어떤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나?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자의적 판단과 개별적 실천을 통해 학생자치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학생자치활동은 언제나 학교에게 시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에서 구성한 학생참여위원회 학생들의 주된 활동 역시 교육감과의 대화이다. 학생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의견이나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감을 만나는 자리에서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는 학교자치의 구조를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참여와 실천은 학생들의 실제 삶과 연계되는 구체성이 있을 때 활성화 될 수 있다. 또 간섭받지 않고 자기 영역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자치라는 집을 명확히 짓고 그 안에 학생자치방이 주어져야 하며 학교자치의 집에서 각 방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작동 원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 다. 시민적 삶과 학생자치

민주시민 교육은 바람직한 시민적 삶에 대한 모색이자 경험이다. 그런데 그 경험의 장이 학교 안으로 국한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사회의 타 영역보다 민주주의가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 곳일까?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명백하게 청소년들은 지역에서 자란다. 학교도 그 지역의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지역은 민주시민교육을 얘기할 때 부차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협력적 파트너이다.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 시민교육은 학교 담장을 넘어서야 실질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과 함께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연계협력이라는 명제적으로만 익숙한 단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부차적으로 일부 역량을 배치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면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지역과 어떻게 함께해야 하는 것일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의 출발이 필요하다.

학생자치를 학급 내의 문제, 학교 안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일까? 평생학습 사회, 유비쿼터스 사회를 늘 말하면서도 학생자치활동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조응해야 하는 것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안의 관성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흔히 하지만 학교 교육은 그 마을과 어떻게 함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학교는 여전히 지역에서 고립된 섬같은 존재이다. 그러니 학생자치에 대한 상상력도 늘 학교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 역시 단지 학생자치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교 교육활동 자체가 교실에서 고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학교는 지역과 협력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일상적 소통의 구조가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질 때 지역에서 경험하게 될 시민적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학교교육에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것이다.

## III. 학교교육활동 작동의 원리, 민주시민교육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이 학교 교육에 달려있을까? 전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 연관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적어도 몇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 1. 학교를 민주주의의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교자치와 학생자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소꿉장난같은 자치가 아닌 실질적 자치를 보장하는 것은 그 누구의 시혜적 조치가 아닌 자치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 2. 학생자치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한다.

생활지도가 생활교육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생활교육이 생활학습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생활교육의 틀을 마련하고 그 생활교육을 습득하는 방식은 생활학습이 되어야 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에 내포되어 있는 학생들의 자

발성, 주도성 등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발성,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주가 분명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구성원들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제도의 미비가 갈등의 원인일 경우가 많다. 학교자치의 집과 학생자치의 방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 3. 학생자치는 전면적 말의 열림, 소통의 전면화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교과 수업으로 가득찬 학교 시간표를 보면 학생들에게 자치 활동은 시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그것을 알아차린 학생들의 행동을 보고 학생들이 자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각한 상황에서는 일단 모든 수업 활동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자치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원칙에 작동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충분한 토의 시간을 요구할 때 그것이 가능한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학생들의 말길이 열릴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공부를 잘하거나 완력이 있는 일부 학생들만의 의견제시가 말길 열림의 첫 번째 단계라면 누구라도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분위기의 성숙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견뎌줄 수 있는 힘이 바로 학교교육에서 학생자치활동 성공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형식을 잘 갖춘 잘 진행되는 회의가 아닌 누구나가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된 회의가 가능할 수 있을 때 비로서 학생자치는 실질적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 4. 시민적 삶에 대한 경험을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학교자치는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들만의 자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학부모, 지역사회와 일상적 소통과 상호간 간섭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 특별한 체험활동 장면이 아닌 일상적 학교 교육활동에서 지역과 함께 하며 시민적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시절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송석구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자동차는 지면과의 마찰의 힘으로 움직인다. 사회에서 갈등은 당연한 것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에게 많은 실패의 경험을 보장해줄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어른들이 정해진 범주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은 미래사회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전혀 키우지 못하는 반쪽짜리 교육에 불과할 수 있다.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허용하는 그 만큼까지 학생들은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뿐만 아닌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학교교육의 작동 원리인 것이다.

# 시민단체에서의 시민교육, 나로부터의 변화, 지역을 바꾸는 시민 운동 소개 : 한국YMCA전국연맹 사례를 중심으로

이필구 /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사업국장

## 1. 문제의식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후변화 시대, 지속가능한 사회 가능한가?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뺏긴 지역(주민자치)를 찾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가 만들기에서 마을(동네) 만들기로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 시민사회 형성과정을 보면, 1960년의 4.19,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 민주혁명, 1997년 평화적 정권교체, 2002년 참여정부의 등장 등 분단의 악조건과 숱한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연이은 승리를 경험해 왔다. 그 승리의 과정은 해방과 함께 외부로부터 주어졌던 불완전했던 '근대국가(nation-state)'를 완성하는 것이었다.<sup>1</sup> 개혁적 정권의 창출과 같은 진보적 성향을 지녔든, 공정한 시스템의 정착을 지향하든, 시민사회도 최근까지 국가 만들기에 전념해 왔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간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여론형성을 주도하기도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에 그치지 않고, 공공성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활동 영역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분출된 사회변화의 욕구들과 정치적 정당성 획득의 시기로부터 사회적 정당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나름의 이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반시민, 중산층이 통치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참여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대변형 (Advocacy) 시민단체중심에서 소비자, 환경, 인권, 평화,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로 문화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근거가 무너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유포,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의 확산 등으로 개발지상주의적, 국가주의적 사고가 팽배해가고 있는 것은 한국 시민사회 전체에 던져진 심각한 도전으로 남아있다.

1 윤형근, 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와 협동조합운동 발표자료

일상생활에서 시민성을 형성하는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일상세계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방향으로 지역운동을 재구성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자신의 이해와 관심사항을 표현하고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인 동기로 결성하고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을 포함한 일차집단과 국가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과 결사체들의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에는 이미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한다. 하지만 공공성의 관점으로 볼 때 공공성을 확장할 시민사회의 존재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몇 가지 문제의식은 과연 지금의 도시화된 사회에서, 경제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스스로 지역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대부분 유목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이 희망이다'라고 얘기할 근거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자기근거와 목표의식은 무엇으로부터 나올까? '생활세계의 식민지화'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식민지화'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미 공고화되어 있는 상황에 풀뿌리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지역순환체계 사회만들기, 지역자립 경제 만들기 등은 어떻게 가능할까? 현실은 세계화 담론과 반세계화 담론이 무성한 가운데" 사고는 세계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지역운동의 테제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들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지속가능한 지역운동을 고민하는 모두에게 중요한 도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지역운동을 확장하기 위해선 무엇이 중요할까? 일상생활에서 시민성을 되찾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시작은 일상세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일상세계는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삶의 세계이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세계이며 그렇기에 별다른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생활세계였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시'되기 때문에 국가와 자본행태의 그늘에 가려 주목받고 있지 못하였던 '실체'이기도 하다. 일상생활에서 시민성을 되찾는 지역운동의 사례로 1990년대 한국에 소개된 일본의 생활클럽 생협 사례는 시사점이 분명하다. 우리사회에서 풀뿌리 운동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건 2000년 이후이지만, 일본은 40여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진보세력의 대규모 안보투쟁이 실패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것이 지역풀뿌리운동이었다.<sup>2</sup> 국가와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민의 경제를 기반으로 자치와 협동의 방식으로 생활세계를 개선하려는 풀뿌리 운동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2. 한국YMCA 시민교육 운동의 흐름

### 1) 1980년대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노력으로 민주시민운동과 시민자구운동 전개

2 하야시 야스오시 도쿄희망제작소 이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활동가들은 시민을 이론으로 이끌어야 하는 존재로 봤고, 무엇보다 과격한 운동방식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됐다"며 "결국 시민과 함께 하는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지역에 눈을 돌리게 됐고 직접 지역에 들어가 보니 지역 사회 안에 다양한 기능과 그 나름의 해결방식이 있다는 걸 깨닫고 믿게 됐다"고 말한다.

YMCA 사회개발운동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공동체성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사회적인 아노미 현상, 문화적 주체성의 위기, 사회전반의 양극화, 경직된 정치·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시민의식 발전과 시민문화 형성이 도외시되고 있는 현상을 직면하면서, 1984년 제27차 전국대회에서의 민주시민운동 전개 결의와 1985년 시민자구운동결의대회 개최를 기점으로 창조적 시민세력과 시민문화 형성을 위해 민주시민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시민자구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후 1980년대로 넘어서면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자구운동(공정보도 시민운동,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 의정감시운동 등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운동, 부정부패 고발센터 설치 및 실태조사활동), 건전 시민문화 형성운동과 시민의식 개발활동(향락문화 추방운동과 건전 시민문화 가꾸기 운동, 물가안정과 건전 소비문화 운동, 시민난단 등 시민의식개발활동, 시민봉사단 활동, 시민문화운동), 시민권익보호운동(무주택자 보호 및 부동산투기 근절 운동, 상품피해 소비자 보호운동, 식품안전운동, 사회부조리 개선 운동, 산재피해 보상 및 근로자 권익 보호운동, 도시재개발 피해자 보호운동, 공공서비스 피해자 권리 보호 운동, 법률구조활동 및 상담활동), 환경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자구운동(공해추방운동, 환경감시단 조직, 환경보전 캠페인 및 환경교육운동, 환경조사 및 감시운동, 도시교통개선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등 지역공동체운동, 양곡은행 등 농촌지역사회 개발운동 등을 하면서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 시민의 삶에 천착하고 시민의 참여에 의한 실천 활동, 주체적인 시민세력 형성, 시민의 권리 지키기 등 YMCA 시민운동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2) 1990년대 이후 YMCA 시민운동의 현실 진단을 통한 시민정치운동의 흐름

1990년대 이후에도 전국의 YMCA는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센터 개혁, 대안학교운동 등 민주적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과 생활협동조합 운영, 통학로·건널목 개선, 자원봉사활동 등 생활세계 개혁과 주민공동체 활동, 각종 조례제정운동과 지방자치법 개정활동 등 분권·자치 제도개혁 활동, 지방선거 및 총선·대선 유권자운동, 18세 투표권 확보운동, 국민소환제 입법운동 등 국민적 관점의 정치개혁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왔다. 하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산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고, 개별 활동도 아이템 수준으로 전략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표출되면서 모든 활동들이 YMCA 시민운동으로의 전략적 관점 아래 내재화되지 못하고 파편화 되면서 장기적인 운동적 성과로 축적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한국YMCA는 민주화 상황과 시민사회의 현실에 주목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과 시민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중앙 집중적 관료화 극복과 정치와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확대, 민주주의의 생활화, 삶의 원리와 문화로서의 민주적 가치 정착, 건전한 시민사회와 시민의식 정착이 시대적 과제임에 주목하고, 이는 정치엘리트들이나 정치사회가 할 수 없는 시민적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정치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시민혁명 전통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 부재, 자치적·자율적 시민사회의 부재 현상을 겪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위해서는 시민정치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시민사회의 형성·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YMCA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부 결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형성·발전, 생활세계개혁, 시민의 자각과 역량 강화를 이루고 각성된 시민이 직접 참

여하는 시민 민주주의운동으로서, YMCA 시민정치운동을 21세기 新사회개발운동 차원에서 본격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정치권과 정치엘리트에 의한 정치권력의 독점을 분산시키고 시민정치의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특히 한 발 나아가 정치사회로부터 독립적인 자발적 시민정치 운동으로서, 자치적·자율적 실천을 통한 시민사회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제도와 분권·자치제도 등 지지부진한 정치사회 개혁을 위해 YMCA로부터 책임 있는 실천 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시민정치운동 본부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각종 워크숍과 전문가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한 시민정치운동 확산을 위한 교재 개발, 시민정치학교 개설 등을 목표로 각 권역별, 지역별 실천 활동이 토론되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초기 기획과는 다르게 전국적인 운동의 성과를 만들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무자, 전문가 중심의 운동구조가 첫 번째 원인 일 수 있다. 2000년도로 넘어서면서 한국YMCA 목적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교Y, 대학Y, 청년Y운동은 이미 약화된 상태에서 시민정치운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초 조직조차 많지 않았다. 결국 운동의 주체가 실무자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도 보였다.

## 3) 1990년대 이후 주민참여 운동의 또 다른 흐름, 마을 만들기 운동

'지역 만들기' 또는 '지역운동'이란 말은 1990년대 초반부터 쓰여 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YMCA가 '21세기 지역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지역 만들기'란 말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 동안의 광역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의 정치투쟁 위주 시민운동에서 벗어나 지방과 지역으로 시민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선회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지역 만들기'란 말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민운동의 방향전환을 상징하는 말처럼 사용되었던 게 사실이지만, 생활환경에 관심을 갖는 주민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많다. 특히 '지역'이라는 단어가 '전국' 또는 '중앙'의 상대개념으로 쓰이기는 하나, 때로는 '도시'보다도 더 큰 공간범위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 일상 생활환경의 문제를 다루는 주민활동의 대상이나 범위를 지칭하는 용어로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을'이란 단어가 뜻하는 것은 여러 가지다. 첫째는 우리들의 일상 생활환경을 뜻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를 비롯해 일터와 쉼터, 또는 자주 들르는 장소나 오고가는 거리를 모두 포함한다. '마을'이란 말에는 물리적 측면의 '생활환경' 이외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있다. 생활환경을 공유하는 '마을 사람들(주민, 시민, 이용자)'과 이들이 이루고 만들어내는 '마을 공동체'와 '마을 문화'와 같은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만들기'란 말이 뜻하는 바도 다채롭다. 새로운 공간이나, 장소, 시설물을 만들어내는 일, 생활환경을 잘 살피고 가꾸는 일, 이웃과의 친교를 이루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 참여와 실천을 통해 건강한 주민(시민)으로 자라고, 배우고, 새롭게 태어나는 일 등의 의미가 함께 담겨있다.

1990년 중반 이후로는 각종 대형사고가 터지면서, 안전불감증문제가 사회적 문제화되었고, 양적사회에서 질적 사회로의 전환기, 삶의 질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확산되면서, 1994년 21세기 지역만들기 시민운동의 연장선 차원에서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운동이 전국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지역만들기 운동을 통해 한국YMCA는 소수 전문가와 활동가의 문제제기식 시민운동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자원활동과 참여로 사회를 바꾸어 나

가는 시민중심의 지역만들기 운동방식을 확립하였다. 또한 생활단위인 지역에서부터 지역의 미래를 구상하고, 지역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판단으로 시민참여를 통해서, 지역에서부터 쾌적한 어린이놀이 터만들기, 안전한 어린이통학로만들기,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등 21세기 지역만들기 시민운동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생활운동의 연장선에서 한국YMCA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근린생활권을 공간적 범위로 하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자율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자원활동을 통해 자신의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건강한 시민정신을 형성시키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마을학교(주민자치학교, 아파트 학교)를 개설해 주민참여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고, 동네한바퀴 생활 의견함 설치 및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수립된 의견들은 반사회, 작은토론회를 거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해결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여 쉽게 해결이 어려운 문제(예-주차문제, 신호등 설치, 통학로안전, 꽃길가꾸기 등)는 명석민회를 개최하여 토론과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개인주거가 만연한 현대인의 생활에서 공동체 정신을 높이고, 구성원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마을축제를 개최하였다. 마을축제에는 마을 구성원이 각자의 전공(미술, 음악, 수예, 종이접기 등)을 최대로 살리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분위기(예 각자 음식 한 가지씩 해오기)를 조성하고 인근의 미술학원, 음악학원, 비디오가게 등에서도 자원봉사로 참여토록 해 아이들 얼굴에 상징그림 그리기, 청소년에게 좋은 비디오 소개, 마을벽화그리기 등 풍성한 문화거리를 제공하고, 마을의 멋과 맛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자원이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자치와 협동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실천하였다.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된 마을 만들기 운동이 진행되었다. 1998년에 대구YMCA에서 시작된 삼덕동 담장허물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커뮤니티 공간확보 운동,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사업 등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담 허물기를 통해 골목공원이란 커뮤니티 공간의 만들었다는 성과를 넘어선 동네 주민들과 자원을 활용하여, 골목 공동체 운동으로 확산하는 등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사례로 알려져 있다.

광주YMCA 좋은동네만들기 운동과 순천YMCA주민자치대학은 YMCA주민자치교육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데 지역공동체 운동에 관심 있는 광주YMCA 회원 8명이 모여 '좋은동네만드는 사람들'이라는 학습공동체를 구성해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이야기가 있는 동네만들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것, 골목축제협동조합을 논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좋은동네 시민대학을 운동이 기획되었다. 시민대학은 좋은 가족공동체가 좋은 골목공동체를 만들고, 좋은 골목공동체가 좋은 동네공동체를 만들며, 좋은 동네공동체가 공동체적 삶의 모습이 보이는 지역공동체를 세운다는 믿음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출발한 시민대학은 만인은 철인이라는 것과 행동을 요구하는 학습주의를 믿고 주민이 있는 동네를 찾아가 그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그들 운명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학습프로그램으로 발전하면서, 순천, 진주 등 20여개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틀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자치적으로 협동적으로 변화할 것인가는 마을만들기 운동가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두 사례에서 해법처럼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학습이다. 교육이라는 표현보다는 학습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을 교육한다는 것은 교육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것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3</sup> 마을이 배움터고, 함께 학습을 통해 마을의 주체

3 미국의 민중교육자 마일스 호튼은 주민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민중들이 우리에게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우

로 성장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씨앗이 되는 그런 과정 전체를 학습이라는 말로 의미부여하고 있다.

#### 4)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힘 - 등대생협

1990년 부천에서 9개 등대가 점등하면서 YMCA 등대생협은 시작되었다. 이기적이고, 삭막한 도시 공간에서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더불어 사는 삶을 살자는 소박하지만 큰 결단의 점화(點火)였다. 그 소박한 점화는 1991년 성남에서 16개 등대, 1992년 안양에서 30개 등대가 점등되면서 공명(共鳴)으로 퍼져나간다. 1995년에는 광명에서 15개 등대가 점등되고, 1998년에는 의정부, 1999년에는 잠시 중단되었던 성남에서 다시 등대활동이 시작되었다. 2000년 군포, 2001년 남양주, 2003년 시흥에서 등대운동을 시작하며 등대생협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수도권을 넘어 마산과 여수, 광주에서도 수년간 등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등대생협은 지역적 상황에 따라 조건과 처지는 다르지만 이렇듯 하나의 뿌리, 서로 이어진 역사의 흔적을 갖고 있다. 등대생협은 단순히 먹을거리만을 나누는 운동을 넘어서 공동체를 통해 생활 나눔과 협동의 의미를 깨닫고 입파워먼트를 형성하는 삶의 변화를 만드는 운동이었다.

회원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도 매우 치밀해서 등대모임 안에서 등대생협의 정신, 생활제, 환경문제를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학습공동체 운동을 기본 바탕으로 하였다. 또한 매월 정기적인 월례회를 갖고 생산지 견학, 촛불대학, 촛불수련회 등과 마을단위 활동(나눔장터, 마을신문, 아름다운 마을 이루기, 도서관 운영), 분과활동(교육분과, 생활제위원회, 시정지기, 풍물패, 녹색가게 등) 등을 통해 지역사회 운동에 참여하여 한 단계 높은 지도력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3. 마치며

YMCA는 1990년 초 21세기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과 90년 중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전국에 마을 만들기 운동의 불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주체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기본 운동방향을 놓치면서 프로젝트 사업화 되었고, 결국 전국운동의 과제로 확산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광주YMCA '좋은동네시민대학' 운동과 순천YMCA '주민자치대학'은 마을만들기 운동에 있어서 학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 두 사례의 공통의 키워드는 마을, 사람, 학습, 관계이다. 마을이 세상이고, 사람이 희망이고, 학습이 방법이고, 관계가 관건이라는 모토가 두 사례에서 녹여져 있다. 이런 활동 등을 새롭게 조명하고 지역운동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마을만들기 운동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내부적인 측면과 지역개발, 지방분권, 균형발달 정치, 사회

리도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 민중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중의 언어는 대부분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비전이다. 상황이 스스로 발전되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 스스로 성장하도록 해야 하지만 정작 실제 하는 일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였다.

적인 배경과 함께 세계화라는 새로운 외부적인 경제 질서의 개편 등이 맞물려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회운동진영의 중요한 운동 목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70년, 80년대 YMCA운동의 방향성은 인간답게 사는 삶,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었다. 이 두 가지 운동 목표를 구체적인 언어로 해석하면 '자치'와 '협동'으로 풀 수 있다. 자치적인 삶, 협동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해석되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새로운 실천 전략이 90년 초부터 시작된 등대생활협동운동이다. 등대생활협동운동은 30년대 협동조합운동과 70년대 사회개발운동의 맥을 잇는 운동이다. 30년대 협동조합운동, 70년대 사회개발운동, 90년대 등대생활협동운동의 공통분모는 자기로부터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실천전략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지역이라는 공간, 생활세계는 함께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시켜 가야 할 삶터라는 인식이 있었다. 향후 지역운동의 분명한 방향성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 외부적인 경제 질서에 맞설 수 있는 지역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90년 초로부터 시작된 YMCA 지역사회만들기 운동의 흐름은 마을 만들기 운동, 워커즈콜렉티브, 사회적 기업 등으로 이어졌지만, 사실 지역사회를 재구성 할 정도의 상상력을 갖진 못했다. 각각의 운동이 분절적으로 이해되거나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략 하는 경향도 하였다. 향후 YMCA운동의 키워드는 자치와 협동, 지역, 지속가능성이다. 이 키워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YMCA운동에서 고민되었던 것들이다. 이런 가치가 재미있게, 성취되려면 자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신을 소생시키면서 사회를 소생시키는 일을 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는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운동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편으론 지역의 창조 또는 지역의 재구성을 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방향을 재구성해야 한다. 핵심은 운동의 기반이 되는 지속적인 학습조직이 마을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 풀뿌리운동에서의 시민교육

이 호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상임연구위원

## 1. 풀뿌리운동에 대한 정의

풀뿌리라는 말은 민초(民草)의 우리말이다. 즉, 일반적 대중을 의미하는데, 사회정치적 의미로는 "특별히 권력을 지닌 자와 반대되는 일반 대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근본적인 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엠펜스 영영사전). 또한 풀뿌리운동의 '운동'은 사회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운동(社會運動, social movement)은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풀뿌리운동은 권력을 갖지 못한 대중들이 주체가 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풀뿌리운동이라 사용하는 데에는 '지역성(locality)'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풀뿌리운동은 지역사회운동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정의한 풀뿌리들이 주체가 되어서 벌이는 운동의 공간으로 지역사회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 풀뿌리운동이란 특정한 지역에서의 생활자운동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 특히 지역사회운동을 전개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풀뿌리 운동은 특정한 지역에서 권력을 갖지 못한 일반 주민대중이 자신들의 생활세계 변화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재정의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풀뿌리운동은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 수행되는 운동으로 치환되지 않는다. 특히나 대중(풀뿌리) 친화적인 소수 엘리트들의 권력 장악을 통해 수행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풀뿌리운동의 가치는 대중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조직하고 그 힘을 모아 사회운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즉, 대중으로서의 풀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not for people) 이들이 스스로 벌이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of people)는 것이다. 따라서 풀뿌리 운동은 무엇보다도 사회변화의 주체인 대중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것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는다. 이는 풀뿌리운동이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닌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풀뿌리운동은 사회운동 또는 시민운동의 주제별 한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라 할 수 없다. 풀뿌리운동은 인권운동, 환경운동, 복지운동, 자치운동, 여성운동, 기타 다양한 영역의 사회·시민운동과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의 운동이 아니라, 이러한 운동들에 있어서의 방법론이자 사회변화의 철학이기도 하다. 굳이 구분하자면, 풀뿌리운동은 주제별 영역보다는 우리 사회 시민운동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대변형 시민운동과는 다른 시민주체형 사회운동 전략이랄 할 수 있다.

## 2. 풀뿌리운동의 주요한 전략

이러한 풀뿌리운동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고립된 또는 폐쇄적인 주민 개인의 실천을 통한 과정보다는 여러 명의 주민 즉 집단의 실천과 변화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 간 상호부조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개별적 이해를 공동의 이해로 조화시키는 훈련이 참여와 실천 과정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과정을 다루며, 이러한 변화가 참여자들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확산되고자 노력한다.

둘째, 풀뿌리운동은 참여자들의 의식이 변화·발전하는 의식화 과정을 중요한 전략으로 삼는다. 프레이리에 의하면, 의식화는 비판정신이고, 개인주의와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것에 대항하는 협동과 단결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식화는 수동적인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주체로 인지하며 자신들이 스스로의 삶과 현실을 변화시킬 능력을 형성한다는 사회·문화적인 자각을 보다 깊게 하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의식화는 특정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시민으로서의 주체적인 개인 위상과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에 참여하는 실존론적인 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식화는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세상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적 생활태도 등에 대한 변화와 발전을 함께 포함한다.

셋째, 풀뿌리운동은 네트워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으로 삼는다. 이 네트워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연대를 형성·강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들 간의 네트워크이다. 사회적 연대는 개인의 이해로부터 참여가 이루어지더라도 점차로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그것을 결국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자원들의 네트워크는 단지 특정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이나 집단의 참여가 단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과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네트워크는 활동의 성과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풀뿌리운동은 참여와 실천을 통해 참여자들의 역량(capacity building)과 영향력(empowerment)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중요시 한다. 여기서 역량이라 함은 집단이 공동체적으로 상호부조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능력에서부터 상호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하는 능력,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화하는 방법,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 등을 의미한다. 즉, 주민조직화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개별 또는 집단적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역량강화의 내용이다. 그리고 영향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강화된 역량을 사회변화 또는 사회발전에서 사용하는 힘으로 전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둘은 각각 분리된 개념 또는 과정이 아니라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개별적으로만 발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도 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은 (지역)정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지역정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운동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키워드(key word) 중의 하나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라는 용어가 전문적 정치인들의 전유물로 인식되곤 한다. 하지만, 정치는 시민들이 벌이는 다양한 집단적 사회활동 전반을 일컫는다.

1 한국도시연구소(2000), 「현장에서 배우는 주민조직 방법론」, p.34 재인용

즉,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 그 자체가 정치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풀뿌리운동은 정치의 관객으로 소외된 주민들을 정치 특히 지역정치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지역정치를 흔히 생활정치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의미는 지역정치가 주로 생활상의 이슈를 결정하는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생활인이 주체가 되는 정치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그렇기에 지역정치운동은 특정한 시기에 벌어지는 운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풀뿌리운동의 주요한 실천전략은 모두 바닥으로부터 보다 많은 주민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전제 또는 목적으로 한다. 참여, 역량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한 과정,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강화하는 과정, 다양한 자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개인과 집단의 이해를 넘은 공론장 형성과 실천, (지역)정치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과정 모두가 실상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품성이자 태도이자 생활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풀뿌리운동은 그 자체로서 민주시민교육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3. 풀뿌리운동과 시민교육

시민교육의 목적은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민주적인 시민은 어떤 과정을 통해 양성되는가?' 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고 유효하다. 민주적인 시민으로 양성된다고 하는 것은 '방법'과 '가치'라는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내재화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방법'

여기서 방법이란 민주적인 공론(公論)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민주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방법이 민주시민교육이 가꾸어가고자 하는 핵심적인 민주시민 양성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주적으로 회의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협의와 합의과정을 도출해 내는 방법을 습득하는 등의 과정이 강조되곤 한다. 또한 의견의 차이를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한 민주시민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풀뿌리운동에서도 이러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풀뿌리운동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집단적으로 조직·조화시킴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협의, 합의과정을 도출하는 방법이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협의, 그리고 합의 과정은 공교육을 통해서 거의 경험할 수 없었기에, 이러한 방법에 익숙한 대중들을 만나기 어렵다. 따라서 풀뿌리운동은 방법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절박하게 높을 수밖에 없다. 집단의 민주적 논의와 협의, 그리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집단의 실천을 도출해 내는 가장 우선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 교육은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순천시에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던 한 활동가는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해 민주적인 논의와 의사결정 방법을 주민자치위원들과 진행해 왔다. 이 활동가는 몇 년간의 경험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방법들은 자연스럽게 체득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적 생활태도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 등에 있어서는 그리 변화된 것이 발견되지 않지만, 최소한 공적 영역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의사결정이라는 방법 습득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풀뿌리운동은 그 현장이 대중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곳이다. 따라서 일상생활과 운동의 구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곳에서 일차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욕구는 사람들은 만나는 것보다는,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긴밀하게 형성할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를 긴밀하게 형성한다는 것에는 관계의 내용도 중요한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관계로 서로를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높다. 즉, 어떻게 민주적인 관계로 사람들을 연결시킬까 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절박한 욕구가 크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시민교육 방법이라 하는 방법론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

그런데, 앞서 소개한 순천시에서의 사례는 방법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이 가지는 장점만이 아니라 그 한계도 잘 보여준다. 그 한계라 함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 형성에 관한 것이다. 물론, 민주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습득하는 것 자체도 민주시민으로 가치를 잘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시민'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배경이나 그 핵심적 개념에 비추어보면, 이와는 다른 중요한 가치가 별도로 존재한다. 시민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사회 운영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이는 시민이라는 용어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 태동과 동시에 그 정치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겨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에 있어 가장 첫 번째 요건은 자신을 사회 운영, 즉 정치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려는 인식 및 태도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보다 확대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 사회적 연대 의식 등 인권적 감수성, 생태적 환경에 대한 감수성 등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는 외적 환경에 대한 태도와 내적인 의식의 변화·강화 모두를 포함한다. 아니, "포함한다" 라는 표현보다는 이 둘이 통합된 상태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이러한 실존적 변화(의식 및 일상생활에서의 태도·행동양식 등의 변화)가 민주시민교육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서, 순천의 사례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공적인 논의 과정에 대한 변화는 이끌어 낼 수 있었지만, 그것이 그 참여자들에 대한 실존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운동은 기본적으로 참여 주체들의 변화와 사회변화를 구분 짓지 않기에 개인과 집단이 이러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실존적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즉 민주적 가치들을 실존적으로 체득하는 과정에 큰 관심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풀뿌리운동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과정으로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방법론보다는 스스로 실존적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훈련'에 보다 집중하는 편이다. 자의적 구분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교육'과 구분하여 '훈련'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의미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를 강화시키는 것이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스스로 체득'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변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는 과정을 통해 진전되고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실제, 풀뿌리운동에서도 매우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교육사업에 많은 역량을 쏟는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사업의 대부분은 그 교육사업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이후의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은 그 실천을 촉발하고 바람직한 실천 방법을 모색·제안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곤 한다. 여기서 실천은 스스로 참여의 재미와 보람 등을 '맛' 보는 작용을 하도록 고안된다. 즉, 참여와 실천을 경험하는 것이 그 재미와 보람, 기쁨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조직함으로써,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습득해 가도록 하는 장기적인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풀뿌리운동은 특정한 이슈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했느냐 하는 것보다 누가, 그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 어떤 형태로 참여했고, 참여자들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고 변화를 겪었는가 하는 것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첫 번째 사업은 중요하고 시급한 것보다는 쉽게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이 모두는 참여의 체험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풀뿌리운동의 주요한 전략으로서 앞서 설명한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양한 처지와 이슈에 대한 공동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연대의식 등 인권적 감수성과 생태적 감수성 등의 강화에도 접근하고자 한다. 실상 교육적 효과는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 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가장 크게 발생한다는 보고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특별히 고안된 '교육'보다는 일상에서 이러한 문제를 접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조그만 실천이라도 조금씩 진전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 실존적으로 변화되고 양성되는 과정이 아닌가 한다.

풀뿌리운동은 이러한 실천적, 실존적 과정을 유도하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지향을 갖는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기획하는 것이 단지 풀뿌리운동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앞서 풀뿌리운동은 사회운동 중에서 구분되는 한 영역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방법이자 철학 또는 주요한 실천전략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풀뿌리운동은 이러한 과정을 만들고자 하는 전반을 지칭한다. 그런 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풀뿌리운동을 하는 이들조차도 자신의 활동을 풀뿌리운동으로 굳이 정의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하등 이상할 바 없다. 단지, 사회적으로 그러한 철학을 갖고 그러한 방법과 과정을 주요한 전략으로 실천하는 이들과 그러한 운동 과정을 풀뿌리운동으로 분류하는 것이다.<sup>2</sup>

## 4. 글을 정리하며

풀뿌리운동은 개인의 변화와 집단의 변화,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일련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파악한다. 개인의 변화와 발전 없는 집단의 변화와 발전은 전체주의적 위험을 지닌다. 하지만, 집단의 변화 없는 개인의 변화는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풀뿌리운동도 사회운동이기에 당연히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특히 민주시민을 양성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풀뿌리운동은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풀뿌리운동에서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가치이자 철학이자 방법이자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풀뿌리운동에서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고 강화하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참여라는 실천 과정을 통해 스스로 획득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실존적으로 체득하는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방법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의 참여와 실천을 도모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당연히 필요한 '방법'에 대한 습득과 적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조점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주관적 판단이지만, 살아가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드는 것 중 하나는, 나이 40을 넘은 사람들은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순천 사례에서처럼 공적인 활동에 있어 그 방법을 보다 민주적인 것으로 습득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커진다. 그런 의미에서 방법론적 민주시민교육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더욱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들은 그 방법론 자체만으로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인들에게는 '교육'이라는 방법론보다는 실제로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의한 실천 과정 속에서 체득된 것들이 변화의 동기와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풀뿌리운동은 가치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체득하는 과정을 보다 중요시한다고 하겠다. 물론, 민주시민교육 방법도 그 과정에서 중요한 한 수단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 그리고 이러한 철학과 방법, 전략을 모두 풀뿌리운동이라 칭하는 것도 아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운동의 경우, 앞서 설명한 풀뿌리운동과 같은 내용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민운동이란 이름으로, 일각에서는 주민자치운동으로 스스로를 칭하기도 한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

이난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국장

##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시민교육사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령에 의거해 2001년 창립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사업에는 기념관 건립 및 운영, 역사정리를 위한 민주화운동 사료수집 및 관리·전시·홍보·연구와 유적지 보존 및 관리·홍보·조사·연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사업, 민주발전 지원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다.

## 2. 민주시민교육사업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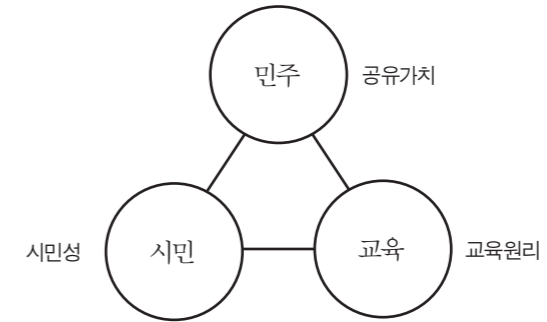
기념사업회는 창립하면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연구소에 교육기획부를 설치했다. 이 시기에는 기념사업회의 교육방향과 내용을 정립하기 위한 조사,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2004년이 되자, 교육기획부는 교육사업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치 부서도 기념사업본부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조사, 연구 뿐 아니라 직접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동영상이 역사 다시보기와 민주화운동 사건을 설명하는 소책자 '역사 다시읽기' 시리즈가 이 때 발간되었다.

2006년 이후에는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교육,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 교육에 정성을 쏟기 시작했다. 외국 시민교과서 내용을 연구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수요를 조사했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 현장탐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역사캠프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 강좌를 개설 운영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대사 직무연수를 시작했으며 선생님들의 민주주의 우수 수업 사례를 격려하는 '민주주의 수업사례 나눔 마당'을 개최하기도 했다.

2007년, 6월항쟁20주년기념행사를 마무리 하면서 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2012년까지의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5개년 계획은 연구·개발, 프로그램 확산, 연대와 지원, 사이버 교육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수립되었다.

## 3. 민주시민교육 방향과 내용

기념사업회는 5년 동안 '민주시민교육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내부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민주, 시민, 교육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민주를 공유가치, 시민은 시민성, 교육은 교육원리로 정리했으며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즉 민주를, 공유가치로 보고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원칙을 민주주의에 두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에 입각한 평화, 인권, 민주주의, 양성평등, 지속가능성 등 행복한 삶, 좋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공유가치라고 정리했다.

또한, 시민을 시민성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시민성을 공유가치에 대한 지식을 넘어 그것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를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소통하며 공동체를 가꾸는데 필요한 원리와 역량이라고 정리했다. 아래 표와 같이 시민성을 나, 너, 우리, 꿈, 행동 등 5개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각 영역별 내용과 주제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관점		시민성	관련주제
나	존재	자율성	인간의 존엄성, 자존감, 주체성, 자아정체성 등
너	관계	상호작용 역량	관용과 배려, 연대의식, 공감적 감수성 등
우리	사회	사회적 문해 Social Literacy	역사의식, 사회읽기, 사회현상과 삶의 연관성 등
꿈	비전	공유가치 내면화	평화, 인권, 민주주의, 양성평등, 다양성 존중 등
행동	실천	비전실현 역량	대안 도출, 다양한 참여, 정치적 의사표현 등

마지막으로 교육은 교육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민주시민교육은 그 내용에서 뿐 아니라 그것의 실천과 제도적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원리들이 요구된다고 정리했다.

1	보편성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면 누구나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충분히 제공돼야 함.
2	자발성	민주시민교육 참여는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야 함. 강제적, 혹은 어떤 조건을 붙인 동원된 참여는 지양돼야 함.
3	민주성	민주시민교육은 그 내용 뿐 아니라 교육의 실행에 있어서도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함.
4	균형있는 사회화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 보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판단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
5	보충성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실천은 현장에 가까이 있는 주체들의 자생적인 실천력의 향상을 지향하며, 상급주체는 지원·촉진하는 관계가 바람직함.

이로써 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담은 내용과 방법을 정리하게 된 것이다.

#### 4. 5개년 동안의 사업 추진 내용

기념사업회가 5년 동안 추진한 사업을 보면 연구·개발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는 해외 여러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수집했으며 각 나라의 시민교육 지침서들도 번역했다. 우리나라 시민교육을 총망라하는 종합 보고서 '민주청서21'을 발간하고 민주시민교육 덕성 모형을 연구해 보고서로 냈다. 또한 활동가용 교재 '현장지침서와 우리 시민교육 해 볼래요?' 자료집을 발간해 활동가들이 시민교육을 이해하도록 도왔고 교육현장에 필요한 실무지침을 제공하기도 했다. 정보지 '시민교육'을 발간해 국내외 시민교육의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간으로 본 민주주의', '4·19혁명', 미국시민교육센터 교재를 번안한 '정의', '책임', '권위', '프라이버시'를 출간했고 민주주의 가치 동영상 9편, '5분 엽서' 등 보충교재도 제작했다.

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대상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했는데 어린이에게는 민주주의 현장탐방, 청소년에게는 역사캠프와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자원봉사활동과 민주주의 현장탐방 지원, 시민에게는 시민의 소양을 높이는 시민강좌를 운영했다. 중간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활동가와 시민단체 교육활동가를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도 했다.

전문가과정 개발도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개발해서 2011부터 매년 시범운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사연수는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현장을 탐방하는 '살아있는 한국 현대사'과정과 교사들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우는 '꿈꾸기' 과정을 직무연수로 진행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특별히 미국시민교육센터에서 발간한 4개 주제 교재를 한국어판으로 발간해 번안에 참여한 교사들이 모여 이 교재를 활용한 수업 방법을 연수하기도 했다.

기념사업회는 이 모든 과정 운영내용을 개발 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강의 자료까지 세심하게 정리해서 백서로 발간했고 현장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연대와 지원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은 우리 시민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국내외 기관, 단체들과 연대한 모든 활동들을 말한다. 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을 시작하면서 교사, 학자, 활동가들과 협력하며 공동 연구, 공동 기획, 공동 운영을 수행해왔다. 2010년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를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여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한걸음 다가가는 법안을 준비하기도 했다. 또한 2007년, 2008년 미국과 독일의 시민교육기관을 방문한 이후, 미국시민교육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프로젝트 시티즌'을 한국 상황에 맞게 보완해서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2010년 시민교육과 관련한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는가 하면 2012년 독일 교육기관의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2011년 제4기 임원은 기념사업회 운영 목표를 민주시민교육에 두고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비전을 '새로운 문명을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 중심기관'으로 설정하고 정관에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항을 추가시켰다. 2008년부터 12년까지 기념사업회가 추진했던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2008년~2012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사업 추진결과

영역	내용	추진 결과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민주시민교육 자료 번역</li> <li>○ 초,중,고등학생 교재 발간</li> <li>○ 활동가 교재</li> <li>○ 교사, 활동가, 전문가 과정 개발</li> <li>○ 정보지 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시민교육연구 : 초, 중등 교과서 분석, 시민교육 방법 정리</li> <li>○ 시민교육 공동연구 포럼 운영: 학습모임과 심포지엄 운영</li> <li>○ 미국, 독일, 영국, EU 등 시민교육, 평화교육 지침서 번역</li> <li>○ 활동가, 교사용 시민교육 지침서 번역</li> <li>○ 청소년 교재 발간 : 초, 중, 고등학생용과 교사용 자료 : '정의', '책임', '권위', '프라이버시' 총12권</li> <li>○ 시민교육 청소년 보조교재 발간: 5분 엽서, 4·19혁명 등</li> <li>○ 활동가 교재 발간: 교육 활동가 교재, 현장 지침서 1~3, 평화·생명, 자치·협동 교재 연구</li> <li>○ 시민 생활 안내 리플릿 발간 '생명과 평화가 깃든 공동체를 향하여'</li> <li>○ 프로그램 개발 : 교사연수 5종, 주민 활동가 기본, 심화과정, 교육 활동가 기본, 심화과정,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방법, 전문가 기본과정, 네트워크 과정, 사회참여 원격연수</li> <li>○ 정보지 '시민교육'연2회 발간</li> </ul>

프로그램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시민교육</li> <li>○ 교사연수, 주민활동가, 교육활동가, 전문가 과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민주주의 현장탐방': 연40회</li> <li>○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회~5회</li> <li>○ 대학생 봉사단 및 민주주의 현장탐방 지원: 30개 팀</li> <li>○ 시민아카데미 운영: 5개 지역 각 연1회</li> <li>○ 주민활동가 기본과정: 연2~8회 운영</li> <li>○ 교육활동가 과정: 연1~2회 운영</li> <li>○ 전문가 과정, 네트워크 과정: 연1~2회 운영</li> <li>○ 교사 직무연수: 연3~7회</li> <li>○ 현대사, 비전찾기, 정의·책임, 권위·프라이버시(초, 중등), 관계의 기술, 사회참여 원격연수</li> </ul>
연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교육박람회 개최</li> <li>○ 풀뿌리운동 활동가 대회 개최</li> <li>○ 시민교육 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기관과 현장 방문</li> <li>○ 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개최 : 2회</li> <li>○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구성 및 운영</li> <li>○ 시민교육박람회 개최: 2011, 2012, 2013</li> <li>○ 전국풀뿌리운동가 대회 개최: 2012, 2013</li> <li>○ 시민교육 지원 : 30개 단체 내외, 300~500만원</li> <li>○ 민주주의 UCC 공모 및 시상: 2개년 운영</li> <li>○ 미국시민교육센터(2008)와 MOU 체결</li> <li>○ 서울시교육청(2010), 경기도교육청(2013)과 MOU체결</li> </ul>
온라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시민교육 동영상 교재: 총 9개 주제</li> <li>○ 사료로 보는 민주화운동: 총 8개 주제</li> <li>○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엘리스 동영상: 총 8개 주제</li> </ul>

## 5. 2013년 교육사업 내용

5개년 사업 계획이 끝난 2013년 기념사업회는 그 동안의 노력을 디딤돌로 삼아 교육 사업을 교육국 외의 부서로까지 확대 운영하였다. 교육국은 중간 지도력을 강화하는 관리자 중심의 사업을 하고 타 부서는 청소년과 시민 대상의 교육을 담당했다.

세부사업을 잠시 들여다보면 연구와 개발영역 사업으로 기념사업회가 향후 추진할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과 초, 중등교사로 구성된 연구모임을 운영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연구하는 일, 그리고 시민덕성을 위한 교재를 정리하는 사업이 있다.

교육 프로그램 확산 영역은 풀뿌리운동가 교육을 지역별로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으로는 활동가들이 알아야 기본 소양과 지역 활동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지역 문제를 토론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풀뿌리활동가대회를 개최해서 활동가들이 서로의 공감대를 넓히고 격려하는 장을 마련했다. 올해는 8월에 여수에서 '풀뿌리운

동과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17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였다.

시민교육 전문가 과정으로는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 과정은 지역에서 5년 이상 활동해 온 활동가들이 모두 모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협력 방안을 토론하도록 설계되었다. 교육 후,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교사 연수는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현대사, '꿈꾸기' 직무연수를 계속 운영했다.

연대와 지원영역에서는 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에 교육 활동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역 교육활동에 초점을 두어 지원했다. 올해로 3회 째 개최하고 있는 시민교육 박람회는 그동안 각 곳에서 추진했던 교육 프로그램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 내용을 펼쳐 보여 격려하고 전파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한국형 프로젝트 시티즌 사업인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는 해가 갈수록 참여 팀이 확대되어 정착되고 있다. 이 밖에도 기념사업회는 4월 경기도교육청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 외 학급단위의 체험학습인 교과서에 나오는 어린이 민주주의 현장탐방 사업,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참여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현장 탐방 지원사업, 민주주의 배움터를 운영했다.

## 6. 향후 운영 방향

기념사업회는 민주시민교육을 적극 수행하기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교육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이런 환경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기념관이 건립된다면 교육 공간도 마련되어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환경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중간 지도력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앞에 놓여진 과제들을 극복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제도화, 교육 연구,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중간 리더십 양성, 시민교육 지원과 확산 그리고 시민교육 종합정보센터 구축 등등. 더불어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기초 지식을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운영체계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7. 마무리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면서 꾸준히 변화, 발전해 왔다. 2010년 교육부 장관의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필요성 발표 이후, 몇몇 교육감들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우리 교육환경에 정착시키기 위해 소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설치와 교과서 발간은 매우 선진적인 노력이다. 이미 제도화를 이루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단위들도 있다. 통일교육, 법교육, 양성평등교육, 평생교육, 인권교육, 문화예술교육, 식생활교육 등등.. 또한 시민단체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참여형 교육방법을 도입하면서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에서는 '마을만들기'에 정성을 쏟고 있으며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센터를 열고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려는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교육의 확대는 민주시민교육에 새로운 도약을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이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민주시민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도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시민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설계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여의치 않다면 우리는 이미 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나라 사례에서 보았듯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 사회적 기본합의를 이뤄 내야 한다. 피교육자 입장에 서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판단 기준을 정립해 가도록 서로 다른 입장과 정보를 제공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이 토론회가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향후, 학자, 정책자, 교사, 활동가, 교육기관 등이 참여한 확대 포럼이 이어질 길 기대해 본다.

또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점점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마을에서 이웃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좀 더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시민교육에 대한 새로운 운영방식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시민교육에 속하지만 각각 법적 근거를 갖고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단위와 시민사회, 학교가 모여 서로의 전문성을 발휘시키고 펼칠 수 있도록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만들어 학습자 편의에 맞는 서비스 체계로 전환해 갈 필요가 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은 1990년 이후, 어려움 속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앞으로도 민주시민교육은 지속적으로 변화,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도약을 위해 공동의 지혜를 모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이 자리가 공동 노력의 시작이 되길 기대해 본다.

# 지자체의 시민교육 :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sup>1</sup>

김미란 /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소장

## 1. 들어가는 글

필자는 교육활동가다. 대학원에서 평생교육을 전공한 이후, 1996년 말부터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시민사회 운동을 시작하였고, 공공리더교육을 하면서 지역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의 소장으로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지역 만들기,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디자인을 하고 있다. 필자가 직접 체험한 시민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글을 열고자 한다.

참여연대 부설 교육기관이자 프로그램명인 참여사회아카데미(현 참여연대 느티나무 아카데미)에서 일하면서 필자의 시민교육활동은 시작되었다. 그 때는 오로지 참여연대 시민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에만 매달렸다. 같은 교육활동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 어떤 태도로 하느냐, 어떤 입장과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일의 형태와 주요 관심사도 마찬가지로)가 달라짐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었다.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옹호(advocacy) 활동을 주로 하는 참여연대의 특성상, 정부 보조금 사업이나 프로젝트는 수행하지 않았다. '좋은 시민(good citizen)'으로의 성장을 위해 참여연대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어떻게 말랑말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였다. 시민교육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에 붙처럼 조성된 '민주시민교육포럼'은 우정과 연대, 호혜의 협력 그 자체였다. 1997년부터 민주시민교육포럼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관련법 및 시민사회단체의 시민교육현황 분석, 시민교육의 제도화 담론 등을 주도하면서 시민교육에 대한 확신과 철학을 세워나갔다. 방점은 민주시민교육에 있었다.

희망제작소에서 일하면서부터는 공공리더대상(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의원, 주민자치위원 등)의 교육을 맡았고, 지역과 지역리더, 지역활성화에 대한 이슈를 많이 다뤘다. 국가와 시민사회 중심의 영역에서 시민교육을 고민하던 필자에게 지역은 미지의 세계였다. 지역에서의 생활반경도 그다지 넓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고민하는 지역리더의 교육적 수요를 찾아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지역활성화의 새로운 모형으로 제시되었던 커뮤니티비즈니스 분야의 연수와 교육을 통해 지역과 풀뿌리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연계가 시작되었다. 지역의 재발견이었다.

2012년 9월 말부터는 부천시에서 시민학습을 디자인하고 있다. 주요 활동무대가 NGO에서 GO의 영역으로 바

뀐 셈이다. '갑'과 '을'의 관점에서 보면 '을'에서 '갑'으로 옮겨온 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의 공공리더교육은 자치단체의 교육위탁을 받아 운영했던 형태가 많아서 '을'의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갑'의 입장에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학, 학교 등과 일을 한다. 매 번, 매 순간, 지자체가 하는 교육과 풀뿌리, 시민사회의 교육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혹은 어떻게 상생하는가에 대해 고심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할 말은 많은데 막상 하려고 보니 조심스럽기도 하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필자의 고민은 '다시 시민교육'이다.

'성인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것은 민주시민교육이고, 어떤 것은 아닐까?', '평생교육에서 시민참여교육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모든 교육에 민주시민교육을 탑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략 이 질문들은 필자가 20여 년 간 스스로에게 던지는 화두이기도 하고, 수많은 토론회를 하면서 주고받은 얘기다. 매번 다른 자리, 다른 사람들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전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또 다른 하나는 "지자체가 하는 시민교육이 풀뿌리 시민사회 시민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그럴 때면 필자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약이 되는 이유는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정에서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의 중복성을 조정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재구조화하기 때문이다. 독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과 시설, 전담인력 확보라는 우월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다 보면 풀뿌리시민사회가 어지간한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주요파트너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런 경우 지자체 시민교육을 풀뿌리의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공룡", "천적"과 같은 입장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풀 한포기가 어떤 경우에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지자체와 풀뿌리 시민사회는 어느 일방의 독주나 승리가 아닌 철저한 공생관계이다.

「2011.2012 평생교육백서」에 따르면 성별, 소득별 시민참여교육 비율은 1.1%이다. 이 데이터를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표 총-3-3> 2012년 비형식교육 영역별 참여률

구분	비형식 참여율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시민 참여교육	문화예술 스포츠교육	단위: %	
						성인기초 및 문해해독교육	
전체	33.1	14.1	5.5	1.1	15.7	0.1	
남성	150만 원 미만	25.9	13.7	4.7	2.7	5.5	0.6
	150~300만 원	25.5	15.3	2.5	1.0	7.9	0.1
	300~500만 원	28.2	16.0	3.6	0.7	10.4	0.1
	500만 원 이상	38.4	21.3	6.9	1.5	12.6	0.0
여성	150만 원 미만	29.2	9.5	3.1	1.1	17.1	0.9
	150~300만 원	31.7	9.2	4.9	0.6	18.7	0.2
	300~500만 원	39.5	12.2	7.9	1.8	23.3	0.1
	500만 원 이상	43.5	14.4	8.7	0.7	26.1	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1 이 원고는 계간 민주원고 2013 가을호에 실린 것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표 3-5> 2011-2012년 평생학습의 개인·직업·사회적 측면 성과 인식 점수

단위: 점 / 100점

구분	2011년		2012년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개인적 측면	육체적 건강 유지	41	65	45	71
	정신적 건강 유지	72	72	74	79
	교양함양·지식습득 등 자기개발	82	79	86	73
	평균	65	72	69	74
직업적 측면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58	55	75	46
	직무관련 업무능력 향상	70	59	64	55
	성과급, 연봉 등 소득증대	31	50	49	39
	승진 등 고용안정	41	50	48	39
	평균	56	54	67	46
사회적 측면	시민의식 증진	46	50	57	55
	지역사회참여 증가	40	47	54	51
	사회적 상호작용	60	58	63	64
	평균	49	52	58	57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 2. 지자체의 시민교육 개요

2013년 현재 전국 지자체 227개 중 평생학습도시 118개에 달한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자체가 50%를 넘는 것이다. 제1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2002~2006), 제2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은 2008~2012년, 제3차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은 2013~2018년)을 수립하면서 평생학습축제나 평생학습도시사업이 추진되었다. 2008년 평생교육법 개정과 시행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일반자치행정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수준에서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 시·도 수준에서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기초 시·군·구 수준의 평생학습센터나 평생학습관 등의 지역전달체계와 평생교육 지원, 추진 전담기구의 설립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추진전담기구의 설립은 조직과 인력, 예산을 동반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갈수록 더 확산될 전망이다.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원시, 은평구, 안산시 등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원은 희망제작소가, 은평구와 안산은 대학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운영 조직의 형태도 국 단위부터 과 단위, 계 단위(팀 단위)까지 다양하다.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전담인력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 프로그램도 연령별, 주제별로 다양해서 전 방위적으로 진행된다. 생애단계별, 6대 영역별(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시민참여), 수준별로 제시하고 세부적으로는 중복프로그램의 조정까지 하고 있다. 평생학습 인프라 활용 및 연계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및 도서관,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를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조직했다. 이것만 봐도 지자체의 평생학습을 얼마나 촘촘하고 조직적으로 디자인해 가는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지자체의 시민대학이나 시민아카데미의 주류를 이루는 인문학 프로그램은 시민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통찰과

감동과 울림이 있는 시민교육 현장이다. 인문학과의 접촉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며 '오래된 지혜'를 '지금, 여기'에서 발견하는 과정이다. 참여자들이 끊임없이 자기고민을 밀어붙이는 변화가 감동적이다. 전업주부로만 살다가 이제야 자기 공부를 시작했다는 경력단절 여성부터 몇 십년간 회사생활을 하다 은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까지 30대에서 70대를 오가는 세대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양한 시민학습과정을 통해 느슨한 연대를 경험하고, 호혜와 협력의 네트워크로 들어오고 있는 시민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는 많다. 취미나 여가중심의 강좌운영을 극복하거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 산업화시대를 거쳐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온 세대들을 위한 취미와 여가교육도 중요하다. 취미나 여가중심의 강좌운영은 전국의 평생학습 시설 어디를 가도 비슷한 현상이다.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 단위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취미와 여가중심의 교육에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왜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의 취미와 여가교육에 돈을 써야 하는지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취미와 여가교육으로는 시민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어떻게 지역사회의 이슈와 현안,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자화된 시민과 개인을 무슨 수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문제해결의 중심에 세울 수 있을까? 시민의 참여로 지역을 바꾸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The U<sup>2</sup>'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시빅코어(civic core, 참여핵심)라고 부를 수 있는 시민의 비율은 어느 지역사회를 막론하고 5%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참여하는 시민의 저변확대보다는 원래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활동 강도만 높아진다는 결과를 의미한다. 이 5%를 위한 후속프로그램과 학습의 길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강생으로 인연을 맺었지만 지역사회를 알고, 학습동아리를 만들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 인력으로 양성하고, 지역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무료학습배달제나 시민제안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민강사, 학습매니저 등 다양한 학습형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일과 학습, 놀이와 복지 등이 연계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 3. 부천시 사례

로컬거버넌스의 역동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천의 평생학습도시조성과정을 살펴보자. 부천시의 평생학습 관련 논의는 민관협력기구인 '푸른부천만들기21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통해 민주시민을 기르는 부천'이라는 의제로부터 시작되었다.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했고, 2002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조례를 만들고, 평생학습센터를 만드는 등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체제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평생학습센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배제하

2 영국의 대표적 사회혁신단체인 더 영파운데이션(The Young Foundation)의 프로젝트로 시작됨

려고 했다. 직접적인 교육프로그램 실시는 생활권 중심의 평생학습 관계 기관과 단체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관계기관 간의 연대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대신에 평생학습센터는 부천 지역 전체의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는 전문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했다. 그 결과 부천시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 전문 코디네이터(조정자)이자 지원기구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2009년까지 지속되었다. 평생학습센터가 부천시의 직영기구였으므로 행정적 연계가 가능했으며, 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영역별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물론 평생학습센터의 소수 인력 배치와 비교적 적은 재정투자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동사업의 추진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시민의 성장에 기여하는 성과를 낳은 것은 분명하다.

부천시 내부의 소통과 협력은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협의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구성된 활동 중심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역평생교육 체제형성 논의의 출발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의 시작과 마무리는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행정의 역할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했다. 이런 과정의 중심에는 평생학습센터가 있었다.

이런 거버넌스 체계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지원 중심의 사업 운영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영향력과 추진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받기도 하였다. 여전히 관의 직영사업 비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외부와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도 있다. 그러나 부천시는 비교적 제한된 범위에서 소수의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의 평생학습은 부천시민의 자발적인 성장을 위해 3단계로 나누어 학습을 디자인하였다. 1차 학습은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하는 취미나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을학교이다.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주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강사를 지원한다. 2차 학습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진행되는 영역별, 주제별, 대상별 심화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시민학교이다. 공모사업의 형태로 심사 및 선정을 거쳐 운영하는데, 시민사회단체나 대학이 파트너가 된다. 3차 학습은 평생학습센터가 직접 진행하는 시민대학과 평생학습관계자 전문연수, 네트워크 워크숍, 자기주도학습이 주를 이룬다.

부천시민대학은 국비로 진행된 1도시1특성화 사업이 국비가 단절되면서 부천시가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 일반 시민대상의 직접프로그램이다. 많은 시민들이 혹은 강의를 개설하고 싶은 강사들이 시민학습원(평생학습센터)을 찾아와 강의 개설을 희망한다. 자격증 과정에 대한 요구도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그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 처음부터 종합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원에서 진단하고, 종합병원으로 가야 할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가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생활권 중심의 교육기관에 먼저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그럼에도 시민학습원에 일단 나오기 시작하면 마치 블랙홀처럼 잘 빠져나가지 않으려 한다. 하는 수 없이 트랙별로 제한을 두어 중복수강을 막고 있고, 구청이나 동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재배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천의 지역평생교육 체제 형성과정에는 30여년의 역사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1979년부터 시작되어 2002년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기까지 20여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 10여년이 흘렀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 시민의 평생학습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해졌는지, 건강하고 풍요로운지, 지역사회 내에서 평

3 부천시민학습원에서 평생학습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3가지 트랙이다. 시민대학(3-4개 과정), 평생학습관계자전문연수(2-3개과정), 자기주도학습분야(7-8개 과정)이다. 트랙별로만 중복을 제한해도 New face발굴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생학습의 길이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가고 있는지,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과 시간과 장소로 자발적인 학습모임이 형성되고 있는지, 학습모임이 학습동아리로 발전하고, 학습동아리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시기이다. 부천시 평생학습 희망시계는 그간의 성장과정을 발판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 4. 지자체의 시민학습 패러다임을 바꾸자

현재 필자가 하고 있는 일은 부천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경험, 즉 생활세계의 재구성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삶, 좀 더 나은 '나'에서 좀 더 나은 '우리'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학습의 디자인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이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 자본 강화이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여 지역사회에 힘, 지역력, 시민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제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한다. 그러나 평생학습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자격증을 따는 직무기술향상교육에 많은 사람이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국가나 시의 예산이라는 공공재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공익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디자인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 수 있는 좋은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마을의 귀환이라고 할 정도로 전국에 마을만들기 열풍이 불고 있고, 2007년부터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의 바람도 불었다. 또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던 2012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지금은 가히 '사회적 경제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연대와 협력, 개방을 기치로 내걸고 정부 2.0, 3.0, 4.0으로 분화되면서 거버넌스도 새로운 공공재로 거듭나고 있다. 평생학습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 수 있는 적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 사람만들기를 위한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다양한 형식의 교육에 어떻게 민주성, 시민성을 탑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지점에서 지자체와 풀뿌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협력은 빛을 발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의 시민교육이 거대공룡조직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많이 하는 지역의 경우,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도 하다. 상생의 길은 의외로 단순하다. 행정은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는 참신한 기획력과 자발성으로 파트너십을 이루어야 한다. 행정의 속도는 1년 단위로 빠르게 질주한다. 풀뿌리는 느리게 흘러간다. 그렇지만 항상 방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 균형관계가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가장 아쉬운 점은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일정하게 패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행처럼 퍼진 프로그램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면, 기관의 철학이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기관의 열악한 재정과 잦은 실무자의 교체를 감안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 진정성이 있어야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기관과 실무자의



성장, 학습자의 성장이 골고루 촉진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이 지역을 바꾸는 선순환 구조는 행정과 민관이 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하고도 쉬운 방법이다.

제공자 중심의, 무료학습의 한계로는 극복하지 못할 것이 시민성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자조(自助)학습이나 자율적인 학습의 기반위에 성장하는 것이다. 필자는 부천시의 시민학습을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무료학습은 자조학습, 자기주도학습의 과도기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다. 무료학습으로 취미나 여가교육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고, 점차로 자조학습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무료학습배달제에서 강사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학습체계를 구상하기도 한다. DIY(Do It Yourself) 평생학습이다. 본인이 관심있는 주제를 직접 디자인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민제안프로그램이다. 강사도 강의할 내용이 있으면 제안 가능하다. 그러나 강사비 지원은 없다. 학습자도 수업료가 없다. 중간에 강사의 강의를 보다 완성도 높게 디자인하고, 강사와 학습자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하는 강좌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것이다. 시에서는 강좌코디네이터를 발굴, 육성하여 이들이 장기적으로 강사나 교육기획자 및 실무자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사회 강사역량을 강화시켜 지역사회의 데뷔를 무사히 마치고 다양한 분야의 주제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행정은 이를 위한 강사뱅크, 공간뱅크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학습이 끝나면 강좌코디네이터가 강의진행 사진이나 기록을 아카이브로 저장하면 종료되는 구조이다.

이미 여기저기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원외의 누구나학교, 은평구 숨은고수찾기는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따로 없다. 이러한 시도가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온라인 강의쇼 열풍이 대단하다. 시민이 제안하고, 기획,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온라인 강의쇼의 기법이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짧지만 강렬하게, 그러나 온라인 강의쇼에서 할 수 없는 뒷풀이와 뒷담화를 통한 변화의 과정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학습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다.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갈수록 많은 대중들이 긴밀하게 접속되어 있다. 참여와 개방, 연대와 협력의 쌍방향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시민교육은 여전히 작은 공간에 갇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한 발짝을 못 나가는 것인지 반성해보아야 한다.

지식은 오히려 차고 넘치는 시대이다.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의 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계속 머리만 키워가는, 지식만 키워가는 교육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 관계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지혜와 열정으로 삶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아지려면 우선 지자체의 교육 패러다임부터 바꿔보자.

## 5. 마치며

에릭홀스봄이 말했다.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들더라도 아직은 포기해선 안 된다. 세상은 결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세상은 결코 저절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인의 생애를 수직적으로(lifelong), 수평적으로(lifewide)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하는 일련의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시민교육이고 저것은 아니

다' 라는 구분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교육에 대한 필자의 신념이다.

일본의 마을만들기나 그린투어리즘에는 '경관 10년, 풍경 100년, 풍토 1000년'이라는 말이 있다. 풍경자산 만들기에서 우리나라에도 지자체별로 명소나 관광지를 표현할 때 ~10경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천 10경, 양양 10경... 경관을 만드는 데는 10년이면 족하다. 그러나 이것이 풍경이 되는 데는 100년이 걸리며, 풍토가 형성되기에는 1000년이 걸린다는 말이다.

이를 학습에 적용하면 '학습경관 10년, 학습풍경 100년, 학습풍토 1000년'이 된다. 시민교육, 평생교육 등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노력은 이제 경관을 넘어 풍경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경관은 다분히 인공적이고, 조직적이다. 자연스러움이 덜하다. 오래보면 질린다. 풍경을 이루는 요소는 다양하고 자연스럽다. 언제라도 거기 있을 것 같은 산도 있어야 하고, 나무 틈 사이로 바위도 있어야 한다. 이름 모를 풀도 있어야 하며, 꽃도 있어야 한다. 유유히 흐르는 강도 있어야 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도 있어야 한다.

이처럼 교육도 다양한 학습생태계이다. 대상도 다양하고, 주제도 다양하다. 기관도 다양하고,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도 다양하다. 이 다양함을 크게 엮어주는 우산이 시민교육이고, 평생교육이다.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동안,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에 몰두하고, 배움과 기쁨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은 경계가 없다. 이처럼 경계가 무너지는 곳에서 시너지가 나온다.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이 만나고, 마을만들기가 어우러지면서 지역이 배움터가 된다. 안전하고 안심한 마을 안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모여 오순도순 학습할 때 위험사회를 함께 살아갈 힘이 생긴다.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교육의 길에서 늘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

# 「한국시민교육의 이론과 현실」을 위한 서울시민대학 사례 발표

한희창 / 서울시청 평생교육과 시민대학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평생교육과 시민대학운영팀장 한희창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서울시민대학의 운영사례를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대학은 시민을 위한 개방대학입니다. 서울 시민 누구나 시민대학이 제공하는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평생학습을 위한 서울시의 책임이자, 시민의 권리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주어지도록 해야하지만 이는 제도교육의 특성화된 목표의 틀속에서는 해결될 수 없기에 학력제한에 구속되지 않는 <개방대학>으로서의 서울시민대학의 설립이 긴요해집니다.

서울시민대학은 기본적으로 인문 사회적 교양을 중심으로 보다 넓고 깊게 생각하는 힘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공동체적 논의와 실천력을 갖는 시민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한 대학이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의 현안과 교육적 요구를 담아내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시민대학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은 현재 시민청 시민대학과 권역별 시민대학으로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청 시민대학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민청 시민대학은 지난 1월 시민청 개관과 함께 시청 본관 지하 2층의 50~100평 규모의 시민청 워크숍룸과 태평홀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저녁 7시에 강의를 진행합니다.

「인문학적 성찰」, 「시민민주주의」, 「삶의 터전」, 「예술적 감수성」 등 4개 분야로 강좌를 진행해 2013년도에는 3기 과정으로 연간 56개 강좌를 운영하며, 현재까지(2기) 총 1,500명의 수강생을 배출, 연인원 8,30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간단히 소개하면 「인문학적 성찰」 분야를 통해 가치있는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세상살이의 가치를 세 워보는 기회를 가지고, 「시민민주주의」의 분야는 시민의 역량이 길러지는 것이 시민대학의 본질적 목표라는 점

에서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살아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개설하였습니다.

「삶의 터전」은 서울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새로운 면모를 발견해가며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강좌와 서울시민대학만의 특화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자신을 살피고, 부모로서의 삶을 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밖에 「예술적 감수성」의분야로 예술과 인문학이 융합된 '예술의 역사,역사의 예술', '내안에 잠든 창의력 깨우기' 등의 강좌가 진행됩니다.

시민청 시민대학의 강좌는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접수를 통해 강좌당 60명이 초과 할 경우 프로그램별 전산추첨을 통해 학습자 선발을 하기에 학력, 성별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권역별 시민대학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시민대학은 서울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평생학습 환경조성을 위하여 대학이 가진 훌륭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 대학 캠퍼스내에서 시민대학이 운영되며, 인문학을 중심으로 대학별 특성에 맞게 강좌가 개설 되었습니다.

올해 6월 경희대, 성공회대, 이화여대 3개 대학과 MOU체결,9월 현재 신청을 받아 개강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5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역별 시민대학은 서울시에서 강사료를 지원하고, 수강생 모집 등 홍보를 진행, 각 대학에서 강사·강의실 및 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올해 9월부터 총 11개 강좌를 개설하여 현재 총 300명의 학습자가 수강중에 있습니다.

학교별로 간단히 소개하면 경희대에서는 후마니타스 인문학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성공회대에서는 철학, 역사학 등의 인문학 강의를 진행, 이화여대는 여성 및 가정학 중심의 인문학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강의하여 각 학교별로 특화된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1,500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시민청 시민대학은 전 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족도 설문조사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설문조사에 참여한 수강생은 20대~40대(38%),50~70대(62%)의 분포로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울러 한 강의실에서 학습에 참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종합 만족도에서 수강생의 89%가 시민대학과정에 대한 높은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강사평가 및 강의환경,프로그램 및 강의효과에 대한 수강생의 만족도에서 각각 「강사평가」 86%, 「강의환경」 80%, 「프로그램 및 강의효과」 87% 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민대학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평생교육의 이해를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위원회의 30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 시민대학에 대한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강사선정 및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민청의 시민대학 강좌는 현재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기는 하나,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설강좌수의 한계와 심화 학습에 대한 요청, 정규시민대학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틀의 부재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대학의 건물확보와 함께, 시민대학 졸업자들의 출구전략을 정교하게 세우는 문제가 핵심이라는 인식이 공유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구 은평소방서를 리모델링하여 '14년도에 은평학습관의 개관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은평학습관은 보다 체계화된 교육장으로 시민대학 심화과정 및 정규시민대학 강좌를 위한 분야를 개발하고, 평생학습리더 양성 및 전문강사역량강화, 학습공동체의 학습공간지원 등 평생학습 인큐베이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참여기회제공 확대와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를 통해 전문강사풀 운영으로 강좌 수요층을 확대하고 시·자치구 간의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가동하여 더욱많은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15년도에는 「개방형 시민대학」을 설립하여 평생교육정책 추진본부로서 평생학습 새로운 모델이 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강사들을 발굴, 양성하여 다양한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크 및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형시민대학」으로 운영하여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문학적 능력함양 및 시민력을 키우는 동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이러한 서울시민대학의 교육은 인문지식과 인문적 상상력의 발전을 통한 창조산업의 가능성도 내다보게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미래 경제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될 것 또한 기대하게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발표7 - 참고자료

### 사업목적

- 시민교양대학 운영으로 서울시민의 인문학적 성찰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 은평분원을 활용한 시민대학심화과정 운영 및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 대학의 특성을 살린 평생교육강좌 실시로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① 시민청 시민대학 운영 : '13. 1월부터 운영

- 일정 : '13년 1월 ~ 12월 (3기 / 주2일 / 화, 목)
- 장소 : 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 워크숍룸 등 활용
- 내용 :
  - 인문학적 성찰, 시민민주주의, 삶의 터전, 예술적 감수성 등 4개 분야
  - 재능기부 특강, 장인, 성공기업인의 특강 등 공개 강좌 / 토론행 강좌
- 학습자 : (연간)13,000명 예정, (~2기)만족도 조사결과 89% 「만족」 이상
- '13년 소요예산 : 228백만원

#### ② 권역별 대학연계 시민대학 : '13. 9월부터 운영

- 장소 : 5개권역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 추진방법 : 대학과 MOU체결
  - 서울시 - 강사비 등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 대학 - 강사진, 강의실 등 교육인프라 제공
  - '13년 : 경희대(후마니타스 인문학), 성공회대(인문학), 이화여대(여성학)
  - '14년 : 2개 대학 추가 운영

#### ③ 시민대학 은평분원 운영 : '14. 1월 개원예정

- 장소 : 舊 은평소방서 2층 (리모델링 '13.12월 완공 예정)
- 내용
  - 시민대학 기본/심화과정
  - 평생교육 강사 역량강화교육 및 다양한 평생학습전문리더 양성프로그램운영
  - 취업 및 고용연계 교육과정 운영 (체험학습지도사, 독서지도사 등 자격과정)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생활 속에서 참모습을 드러내는 곳.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더불어 사는 삶의 힘으로 살아나는 곳.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는  
 바로 그 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01년 7월 24일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에 의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주요 사업

1. 쉽 없이 나아가는 한국 민주주의의 꿈이 실현되는 곳 - **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  
 민주화운동기념역사관, 민주시민교육센터, 국제민주센터, 민주주의 연구소, 민주화운동사료관, 민주주의 테마공원 등으로 구성
2. 기억하지 않으면 과거는 반복된다 - **기념사업**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추모행사 개최·지원, 민주화운동 문화 콘텐츠 수집, 개발, 보급, 민주화운동 기념·계승단체와 협력사업 등
3. 더 많은 시선, 더 넓은 연대 - **국제협력**  
 각국의 민주주의 경험과 정보 공유, 상호 방문 프로그램, 서울민주주의 포럼 진행 등
4.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는 민주주의 -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조사·연구, 각급 학교를 위한 단계별 기본 교육자료 개발, 교사연수 프로그램,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민주주의 현장체험 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가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지원사업 등
5. 조사·연구를 통한 민주주의 역사의 현재화, 미래화 - **학술연구**  
 민주화운동사·민주주의의 조사·연구, 연구 지원, 학술지 발간, 국제 학술 교류·협력사업 등
6. 기억의 역사를 기록의 역사로 - **사료관**  
 민주화운동관련 사료 수집, 구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료 온라인 서비스 등

## 21세기 인성교육의 산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KYUNG HEE UNIVERSITY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통해 '더 나은 미래' 를 실현합니다

경희대학교는 2011년도부터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설립해 한층 강화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교육은 학부교육의 지속적 혁신을 통해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려는 경희대학교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1세기 교양교육의 전범이 되고자 하는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교육의 목표는 탁월한 개인, 책임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의 양성입니다. 이를 위한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교육의 구체적인 지향점은 탐구 활동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 합리적 설명의 능력인 과학적 사고, 공감의 공동체 가치를 인지하는 봉사정신, 지구사회의 공통문제를 풀 수 있는 세계시민적 역량 그리고 사회적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적 능력의 함양입니다.

###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교육 프로그램

#### 인간의 발견, 문명의 전환

중핵교과 <인간의 가치탐색>과 <우리가 사는 세계>를 통해 인간, 역사, 문명을 바라보는 총체적 안목을 갖춰 나갑니다.

#### 세상이 곧 강의실, 시민교육

대학 최초로 실시되는 시민교육은 세상을 강의실로 바꿉니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삶의 현장에서 대안을 모색합니다.

#### 나를 위한, 세상을 위한 글쓰기

글쓰기 교과는 성찰적·학술적·사회적 글쓰기를 아우릅니다. 강좌 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해 심세한 첨삭·상담 지도를 합니다.

#### 몸에서 우주까지, 다양한 융복합 교과

생명, 우주, 의미, 사회, 평화, 역사, 수량세계 등 7개 주제영역을 탐구합니다.

#### 지성과 감성의 조화, 예체능 교과

시창작, 합창, 기타연주, 스포츠 댄스, 전통 무예, 요트 등 다양한 예술·체육 교과를 통해 감성을 키우고 새로운 지성을 창조합니다.



(사)시민은 지속가능한 시민운동,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해  
2013년 2월 창립한  
중간지원조직입니다.

### (사)시민의 주요 역할

시민사회단체와 공익적 시민활동의 경험과 자원을 나누는 플랫폼

- 소통과 협력을 위한 포럼 개최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상생토크
- 시민사회와 각계의 다양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 : 분야별 워킹그룹 운영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실험 공유
- 시민사회의 다양한 중간조직 네트워크
- 서울NPO지원센터 위탁 운영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및 공익적 시민활동의 성장을 돕는 마중물

- 시민운동가 및 공익활동시민 교육과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 시민운동가 교류·연수·휴식 프로그램 개발 : 시민 펠로우 선정 및 지원
- 시민운동가 직무개발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싱크넷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연구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책제안
- 시민사회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 축적
- 시민사회 관련 연구자 교류 허브